

# 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2010. 12.





# 요 약 문

## 1. 제목

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사회 정보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민간의 노력에 기인한 측면도 크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보화 법제도의 정비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제도이고, 이러한 법제도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법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제는 그 특성상 보수성을 가진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된 기술이 고안되고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는 정보화 분야에서, 법제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법제가 선도적으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정보화 법제를 갖추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화의 영역에서는 법제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분리되었던 영역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로는 정보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고, 이러한 괴리는 정보화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어 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법제도, 입법 현황 및 해외 사례의 분석은 정보화 발전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진단하는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화 법제도 사항을 그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보화 관련 판례 순으로 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먼저 정부에서 공포한 법령,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국회에 접수된 법률 및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 순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관련 입법 및 그와 관련된 동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는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정보화와 관련한 판결 및 결정례를 검토하여 그 요지를 기술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법령 정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국외 정보화 관련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IT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의 판결 제공 서비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결정례 제공 서비스 및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법고를 DVD를 활용하였다.

### 4.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전반 개관

정보화 추진에 있어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법제이다. 둘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통해 정보사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제로서 앞에서 언급한 두 범주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넷째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지식재산권확립에 관한 법제이다.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권 확립은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5가지 분류를 기초로 다시 정보사회기반 조성 법제는 크게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를 위한 법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 법제는 지식사회 인프라의

질적 기반 확보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도 그들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제는 다시 전자정부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제와 전자적 의사결정, 전자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는 법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 두 번째는 사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는 다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제와 정보통신윤리 관련 법제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보안 침해 방지 법제의 경우 이를 정보통신기반 구축 법제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보안 침해 사고의 경우도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분류를 택하였다.

이상의 분류기준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정책추진 기반확립	정보통신 기반구축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 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 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대표적 법률	국가정보 화기본법, 방송통신 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법률	전기 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주민등록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 방송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상의 분류에 따라 2010년 하반기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을 분류해 보면, 제·개정 공포된 법령은 63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0건, 2010년 국회에 접수되었던 법률은 83건, 정부에서 입법예고 된 법령은 45건이었다.

####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제·개정 공포	4	3	1	42	6	7	0	0	0	63
국회 통과	0	0	0	0	0	0	0	0	0	0
의안 접수	3	2	11	21	6	20	3	10	5	83
입법 예고	3	6	0	25	3	6	1	1	0	45

각국의 법제도 시스템,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는 정보화 쟁점은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과 그대로 일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보화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제한적이거나 접근이 가능했던 국가들의 자료를 살펴본다면 2010년 하반기 국외 정보화 법제도의 흐름은 1) 지속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한 전자정부 강화, 2) 사이버보안의 강조 3) 통합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정책 마련 및 추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사이버 보안관 제도를 통하여 사이버 보안에 역점을 두고 있고,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하여 재난보조금 등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 회계 등 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실현을 통해 시행해 나가고 있어 이를 참고할 만하다 하겠다.

## 〈국외 정보화 법제도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국외 정보화법 제도	2	6	2	13	2	7	3	9	3	47

2010년 하반기 대법원의 판결은 전자정부실현 관련 사건이 1건, 정보통신산업육성 관련 사건이 2건,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이 3건, 정보보안 및 보호 관련 사건이 3건, 정보통신 윤리 관련 사건이 8건으로 총 17건이 조사되었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전자적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관련 사건이 1건,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사건이 1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건이 3건, 정보통신윤리 관련 사건이 2건으로 총 7건이 조사되었다.

##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육성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대법원	0	0	0	1	0	2	3	3	8	17
헌법재판소	0	0	0	0	1	0	1	3	2	7

## 5.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의 시사점

2010년 하반기에는 국회의 공전으로 전체 국회 통과 법률이 몇 건 되지 않고, 정보화 법제 관련 법률은 통과된 것이 없다. 다만 공포 법령은 그 수가 상당한 편이나 대부분 상반기에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하반기는 특별한 정보화 이슈가 제기된 바 없어서인지 매우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다만 P2P등을 통한 음란물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운 산업의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은 정보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실현에 기여하는 입법예고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 정보화가 이루어져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포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에 관한 제반 법률에 맞도록 검찰사무보존규칙 시행령 등을 개정한 것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접권자에 불과한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의 내용 중 하나인 공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2010년 하반기 정보화 관련 판례 가운데는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눈길을 끈다. 물론 전형적인 정보화법제 판례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소위 미네르바 사건으로 대변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의 개념 등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정보 법제의 특수성과 관련된 판시는 아니지만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만들었던 사건 등과 관련된 결정이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인터넷 팝업 광고에 관한 판례가 선고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그 이용자들은 운영 정책에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시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하반기 법제를 조사하면서 아쉬운 것은 스마트폰, 신규 IT 서비스 및 IT 융합과 관련한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가 아니라 손 안의 정보통신기기이며 그 편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법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는 오픈된 플랫폼과 다양한 모바일 OS에 의해 해킹 환경 또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보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금융 정보 유출 등 예상되는 정보보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 하겠다. 또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규 IT서비스들이 대두 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T 신기술과 새로운 IT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기 위한 입법 논의 또한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IT 융합은 IT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겠다.

2011년에는 IT 신기술, 신규 IT서비스, 융합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IT강국으로의 제도약을 도모할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 목 차

### 제 1 장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설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의 방법 .....	2
가. 조사 방법 .....	2
나. 분석 방법 .....	2
제2절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	5
1.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	5
가. 제·개정 공포 법령 .....	5
나. 국회통과 법률 .....	8
다. 국회접수 법률안 .....	9
라. 정부 입법예고 법령 .....	13
2. 국외 정보화 법제도 .....	16
3. 정보화 관련 판례 .....	18
제3절 결어 .....	25

### 제 2 장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주제별 분류

제1절 제·개정 공포 법령 .....	27
1. 정책추진기반 확립 .....	27

## 목 차

- 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 10. 27. 공포 및 시행)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10. 11. 10. 공포 및 시행)
- 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
- 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

### 2. 정보통신기반 구축 .....29

- 가. 전파법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
- 나. 전파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2010. 10. 27. 시행)
- 다. 전파법 시행령 (2010. 12. 31. 공포, 2011. 1. 24. 시행)

### 3.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32

-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 10. 1. 공포 및 시행)

### 4. 전자정부 실현 .....34

- 가.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12. 공포 2010. 7. 16. 시행)
- 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2010. 7. 14. 공포 및 시행)
- 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15. 공포 2010. 7. 16. 시행)
- 마.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010. 7. 19. 공포 및 시행)
-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공포 2010. 7. 26. 시행)
- 사. 의료법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
- 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7. 23. 공포 2010. 8. 24. 시행)
- 자.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및 시행)

## 목 차

- 차. 특허법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2010. 7. 28. 시행)
- 카.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2010. 7. 28. 시행)
- 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2010. 7. 30. 공포 및 시행)
- 파. 법무사규칙 (2010. 7. 30. 공포 및 시행)
- 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8. 4. 공포 2010. 8. 5. 시행)
- 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010. 8. 4. 공포 2010. 8. 5. 시행)
- 너. 건축법 시행규칙 (2010. 8. 5. 공포 및 시행)
- 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8. 11. 공포 및 시행)
- 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0. 8. 17. 공포 2010. 8. 18. 시행)
- 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010. 8. 19. 공포 및 시행)
- 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8. 19. 공포 및 시행)
- 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0. 8. 30. 공포 및 시행)
- 어.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10. 8. 30. 공포 및 시행)
- 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9. 1. 공포 및 시행)
- 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9. 10. 공포 및 시행)
- 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2010. 9. 10. 공포 및 시행)
- 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9. 17. 공포 2010. 9. 23. 시행)
- 퍼. 지방세법 시행령 (2011. 1. 1. 공포 및 시행)
- 허. 검찰보존사무규칙 (2010. 9. 28. 공포 및 시행)

## 목 차

- 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010. 9. 28. 공포 및 시행)
- 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0. 10. 8. 공포 및 시행)
- 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2010. 10. 25. 공포 및 시행)
- 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10. 10. 25. 공포 및 시행)
- 모.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2010. 11. 1. 공포 및 시행)
- 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11. 2. 공포 및 시행)
- 소.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2010. 11. 10.  
공포 및 시행)
- 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10. 12. 8. 공포, 2011. 1. 1. 시행)
- 조.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0. 12. 13. 공포, 2011. 1. 1. 시행)
- 초. 부동산등기규칙 (2010. 12. 13. 공포, 2011. 1. 1. 시행)
- 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0. 12. 16. 공포, 2011. 1. 1. 시행)
- 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12. 22. 공포, 2010. 12. 22. 시행)
- 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19. 공포, 2011. 1. 1. 시행)
-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 12. 29. 공포, 2011. 2. 5. 시행)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61

- 가. 주택법 시행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공포 2010. 7. 26. 시행)
- 다. 공증인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2010. 8. 7. 시행)

## 목 차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및 시행)	
마.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2010. 7. 28. 공포 2010. 8. 7. 시행)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0. 10. 18. 공포 및 시행)	
<b>6. 정보통신 산업육성</b>	<b>67</b>
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9. 공포 및 시행)	
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 9. 1. 공포 및 시행)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 10. 27. 공포 및 시행)	
마.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 12. 10. 공포, 2010. 12. 11. 시행)	
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0. 12. 13. 공포, 2010. 12. 13. 시행)	
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 12. 27. 공포, 2010. 12. 27. 제정)	
<b>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b>	<b>73</b>
<b>8. 정보보호 및 보안</b>	<b>73</b>
<b>9. 정보통신윤리</b>	<b>73</b>
<b>제2절 국회 통과 법률</b>	<b>73</b>
1. 정책추진기반 확립	73
2. 정보통신기반 구축	73
3.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73
4. 전자정부 실현	73

## 목 차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	73
6. 정보통신 산업육성 .....	74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	74
8. 정보보호 및 보안 .....	74
9. 정보통신윤리 .....	74
<b>제3절 국회 접수 법률 .....</b>	<b>74</b>
1. 정책추진기반 확립 .....	74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허원제의원 대표발의)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신지호의원 대표발의)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9.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 정보통신기반 구축 .....	77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제안)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3.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	78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2. 이화수의원 대표발의)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6. 이용경의원 대표발의)	
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0.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8.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9.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목 차

- 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8. 이용경의원 대표발의)
- 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4. 전자정부 실현 .....87

-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21.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 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이종혁의원 대표발의)
-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7.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9. 27.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정부 발의)
-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류근찬의원 대표발의)
- 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류근찬의원 대표발의)
- 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문학진의원 대표발의)

## 목 차

-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 제안)
- 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정부 제안)
- 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 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2010. 11. 18. 이정선의의원 대표발의)
- 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 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 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6. 박준선의의원 대표발의)
- 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9.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3. 정영희의원 대표발의)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05

- 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4. 이명수의의원 대표발의)
-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9 오제세의의원 대표발의)
- 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정부 제안)
-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8.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16. 정부 제안)
-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3. 정영희의원 대표발의)

## 목 차

<b>6. 정보통신 산업육성 .....</b>	<b>109</b>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3. 이화수의원 대표발의)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4. 전해숙의원 대표발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서갑원의원 대표발의)	
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10. 10. 29. 정부제안)	
사.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아.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10. 11. 3.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2.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9. 최재성의원 대표발의)	
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4.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1. 29. 정장선의원 대표발의)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3.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3. 정부제안)	
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6. 김성동의원 대표발의)	

## 목 차

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0. 김성동의원 대표발의)

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4.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2010. 12. 29.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126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4. 전해숙의원 대표발의)

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8. 정부제안)

### 8. 정보보호 및 보안 .....127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2.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21. 박대해의원 대표발의)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2010. 11. 23.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3. 전해숙의원 대표발의)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6.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목 차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11. 26. 백원우의원 대표발의)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4. 정부 제안)	
<b>9. 정보통신윤리</b> .....	<b>139</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 광정숙의원 대표발의)	
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9.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9.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b>제4절 정부 입법예고 법령</b> .....	<b>143</b>
<b>1. 정책추진기반 확립</b> .....	<b>143</b>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14. 행정안전부 공고)	
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방부 공고)	
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17. 기획재정부 공고)	
<b>2. 정보통신기반 구축</b> .....	<b>146</b>

## 목 차

-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7. 1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2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4. 소방방재청 공고)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1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9. 방송통신위원회)
- 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3.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53

### 4. 전자정부 실현 .....153

-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7. 고용노동부 공고)
- 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0. 7. 8. 행정안전부 공고)
- 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13. 농림식품수산부 공고)
-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
- 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
- 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
- 사.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2. 지식경제부 공고)
- 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 목 차

- 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
- 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
- 카.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
- 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1. 국토해양부 공고)
- 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 행정안전부 공고)
- 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토해양부 공고)
- 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토해양부 공고)
- 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1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1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머.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26. 해양경찰청 공고)
- 버.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2. 경찰청 공고)
- 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6.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 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22. 국토해양부 공고)

## 목 차

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7. 행정안전부 공고)

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9. 국토해양부 공고)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79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다.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2. 27. 지식경제부 공고)

### 6. 정보통신 산업육성 .....182

가. 이력정보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7. 7. 지식경제부 공고)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7. 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0. 7. 16. 지식경제부 공고)

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0. 12. 국토해양부 공고)



## 목 차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	192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3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8. 정보보호 및 보안 .....	192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9. 24. 금융위원회 공고)	
9. 정보통신 윤리 .....	195
<b>제5절 국외 정보화 법제도 .....</b>	<b>195</b>
1. 정책추진기반 확립 .....	195
가. EU, 2011년 ICT 프로젝트에 12억 유로 배정(EC, 2010. 7. 20.)	
나. EU, 미국 FCC, 망중립성 법안 통과 후 허용 논란 (CNET, 2010. 12. 23.)	
2. 정보통신기반 구축 .....	197
가. EU, 미래 인터넷 연구에 9,000만 유로 투자 (EC, 2010. 7. 20.)	
나. 영국,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 혁신 주도 (publictechnology, 2010. 7. 28.)	
다. 미국, 슈퍼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줄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 승인 (FCC, 2010. 9. 24.)	
라. 미국, 2012년까지 인터넷주소체계 IPv6로 전환 (OMB, 2010. 9. 28.; GCN, 2010. 9. 15.)	
마. 영국, ICT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발표 (BIS, 2010. 10. 12.)	
바. 유로피아나, 1,400만 점 이상의 유럽 문화유산을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EU IP/10/1524, 2010. 11. 1.)	
3. 정보통신 기반 확보 .....	251
가. 영국, '네트워크 국가'를 위한 선언문 발표 (Race Online 2012, 2010. 7. 12.)	
나. 미국,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스마트폰과 셋탑 박스 의무화 입법 (OUT-LAW News, 2010. 10. 11.)	

## 목 차

4. 전자정부실현 .....	209
가. 프랑스, e헬스 포털 오픈(epractice, 2010. 7. 1.)	
나. 미 총무청, 최신 기술로 무장한 온라인 웹서비스 선진화 달성 (gsa.gov, 2010. 7. 2.)	
다. 영국,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공 지출 데이터 공개 (ePractice, 2010. 7. 1.)	
라. 미국, 유망 기술직 역량개발모델로 고품질 원스탑 구직 서비스 제공 (nextgov.com, 2010. 7. 12.)	
마. 미국, 스마트폰에서 국가 재난 원조금 신청 가능 (whitehouse.gov, 2010. 7. 19.)	
바. EU,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WORKPAD’ 프로젝트 상용화 예정 (europa.eu, 2010. 7. 22.)	
사. 싱가포르, 75%까지 노동부의 오프라인 방문 횟수 감축 (futuregov.asia, 2010. 7. 22.)	
아. 영국 코번트리 시의회, 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 (PublicTechnology.net, 2010. 8. 5.)	
자. 체코·루마니아, 전자헬스 서비스 확대 (eppractice.eu, 2010. 9. 24., 2010. 9. 27.)	
차. 미국, 원격근무강화법 통과 (2010. 12. 09.)	
카. 미국, 공공정보 공개 포털(DATA.Gov) 고도화 추구 : 열린 데이터 커뮤니티 구축 (data.gov, 2010. 11. 18.)	
타. 미국, 긴급 전화 시스템(911)의 디지털 고도화 방안 추진 (FCC, 2010. 11. 23.)	
파. EU, 스마트 정부를 위한 ‘2011~2015 전자정부 실행계획’ 발표 (EU, 2010. 12. 15.)	



## 목 차

<b>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b>	<b>224</b>
가. 미국 아칸소 주정부, 안전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인기 (govtech.com, 2010. 8. 4.)	
나. EU, 전자송장(e-invoicing) 추진 계획 발표 (eGOV monitor, 2010. 12. 2.)	
<b>6. 정보통신산업 육성</b>	<b>226</b>
가. 대만,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발표(gio.gov.tw, 2010. 7. 15.)	
나. 영국, 만성병 환자들을 위한 원격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 (centrallancashire.nhs.uk, 2010. 8. 10.)	
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텔레헬스 네트워크 구축 (Informationweek, 2010. 8. 18.)	
라. 노르웨이, 디지털 처방 시범사업 확대 (epractice.eu, 2010. 8. 12.)	
마. 일본, 교무 분야에서의 ASP·SaaS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soumu.go.jp, 2010. 10. 15.)	
바. 포르투갈,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어젠다 2015’ 발표 (epractice.eu, 2010. 10. 25.)	
사. 프랑스, 프록시마 모바일(Proxima Mobile) 포털 오픈 (epractice.eu, 2010. 11. 4.)	
<b>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b>	<b>233</b>
가. Columbia Pictures v. Fung, No. 06-5578(C.D. Cal. 2009.12.21.)	
나. 라이선스키 배포는 저작권 우회기술 거래에 해당 (Actuate Corp. v. IBM Corp., No. 09-5892(N.D.Cal., 2010.04.05))	
다. Arizona State Trailer Sales, Inc. v. World Wide RV (No. FA1003001315658, 2010.05.07.)	

## 목 차

<b>8. 정보보호 및 보안</b> .....	<b>236</b>
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사이버보안 정책의 성과 발표 (whitehouse.gov, 2010. 7. 14.)	
나. 영국, IT 보안 기술을 위한 ‘Cyber Security Challenge’ 시행 (eweekeuropa.co.uk, 2010. 7. 25.)	
다. 미국 NIST,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Nextgov, 2010. 9. 7.)	
라. 스위스, 법원은 IP 주소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시(2010. 9. 10, OUT-LAW News)	
마. EC,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OUT-LAW News, 2010. 9. 13.)	
바. 이스라엘, ‘적절한’ 정보 보호 국가에 합류(OUT-LAW News, 2010. 10. 28.)	
사. 무선망으로 전송한 정보에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적용 부인 (United States v. Ahrndt, 2010 WL 373994(2010))	
아. Stengart v. Loving Care Agency, Inc. (2010 WL 1189458, 2010.03.30.)	
자. Monson v. The Whitby School, Inc. (No. 09-1096, 2010 WL 3023873, 2010. 08.02)	
<b>9. 정보통신 윤리</b> .....	<b>248</b>
가. Major v. McAllister, 2009 WL 4959941(Mo. App. 2009.12.23.)	
나. American Booksellers Foundation for Free Expression v. Strickland (F.3d 6th Cir., 2010.04.15.)	
다. Johnson v. Arden, F.3d, 2010 WL 3023660(8th Cir. 2010.08.04)	
<b>제6절 정보화 관련 판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b> .....	<b>251</b>
1. 정책추진기반 확립 .....	<b>251</b>
2. 정보통신기반 구축 .....	<b>251</b>

## 목 차

<b>3. 정보통신기반 확보 .....</b>	<b>251</b>
<b>4. 전자정부 실현 .....</b>	<b>251</b>
가.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b>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b>	<b>252</b>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의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결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위헌확인】)	
<b>6. 정보통신산업 육성 .....</b>	<b>256</b>
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에 대하여 추가된 죄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목 차

나.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258

가. 직업전문학교 을의 직원인 갑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 재단법인이 을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병 법인의 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나.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 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 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 목 차

사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다. 피고인이 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4468 【저작권법위반】)
- 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분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합헌의견 7인, 반대이견 2인)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6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 8. 정보보호 및 보안 .....262

- 가.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나.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로 피해 회사의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4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목 차

- 다.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17. 선고 2010두12156 판결)
- 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3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 마.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



## 목 차

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3 (합헌)의 의견)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 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 9. 정보통신윤리 .....273

- 가.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 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므로,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영화 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나.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 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 목 차

-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다.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그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결정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 라.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이의】)
- 마.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10 판결)

## 목 차

- 바.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 도128 판결)
- 사.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한편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 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아.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丙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丙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
- 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각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목 차

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재판관 7인 위헌의견, 2인 합헌의견)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소원)

참고문헌 .....	286
------------	-----

## 목 차

## 〈 표 목 차 〉

〈표 1〉 정보화 관련 법제의 내용상 분류 .....	4
〈표 2〉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	5
〈표 3〉 제·개정 공포 법령 목록 .....	6
〈표 4〉 국회 통과 법률 목록 .....	9
〈표 5〉 국회 접수 법률안 목록 .....	10
〈표 6〉 정부 입법예고 법령 목록 .....	13
〈표 7〉 국외 정보화 법제도 목록 .....	15
〈표 8〉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	18
〈표 9〉 정보화 관련 판례 목록 .....	19



## 제 1 장

2010년 상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제1절 서설

## 1. 연구의 목적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된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사회 정보화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민간의 노력에 기인한 측면도 크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보화 법제도의 정비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제도이고, 이러한 법제도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법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제는 그 특성상 보수성을 가진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된 기술이 고안되고 새로운 표준이 마련되는 정보화 분야에서, 법제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법제가 선도적으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정보화 법제를 갖추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보화의 영역에서는 법제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분리되었던 영역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로는 정보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고, 이러한 괴리는 정보화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뒤쳐지지 않고 정보화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법제도, 입법 현황 및 해외 사례의 분석은 정보화 발전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며 진단하는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정보화 법제도 관련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보화 관련 판례 순으로 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먼저 정부에서 공포한 법령,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국회에 접수된 법률 및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 순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정보화 관련 입법 및 그와 관련된 동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는 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정보화와 관련한 판결 및 결정례를 망라하여 그 요지를 기술하였다.

## 3. 연구의 방법

### 가. 조사 방법

연구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은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법령 정보에 주로 의존하였다. 국외 정보화 법제도는 Google 및 전자신문 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글로벌 IT 네트워크'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 판례의 경우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법고을(LX) 프로그램 및 대법원 홈페이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결 및 결정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 나. 분석 방법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한 것처럼 정보화 법제 연구에 있어서도 분석의 틀은 필요하다. 분석의 틀은 사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분석 틀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 범주의 지향점과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관련 법제는 그



주무관청에 따른 분류, 개별 법률에 따른 분류 등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은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을 동일한 범주로 보고 그에 따른 분류를 함이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이념에 따른 분류를 통해 법제의 내용상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이념과의 합치 여부를 판별하여 앞으로 정보화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경우 정보화 추진에 있어 법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첫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법제이다. 둘째는 정보사회의 기반을 통해 정보사회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제로서 앞에서 언급한 두 범주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넷째는 정보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지식재산권확립에 관한 법제이다.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권 확립은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를 들 수 있다.

이상의 5가지 분류를 기초로 다시 정보사회기반 조성 법제는 크게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를 위한 법제가 그것이다.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와 정보통신기반 구축 법제는 그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정책추진기반 확립 법제의 경우 정보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총론적 지위를 가지는데 반해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론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보통신접근기반 확보 법제는 지식사회 인프라의 질적 기반 확보의 측면에서 정보화 소외 계층도 그들이 원하는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식·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제는 다시 전자정부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제와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는 법제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 후자는 사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활성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경우 이를 전자정부 관련 법제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는 다시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1) 자세한 내용은 방동희, IT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제2권 제2호(2007), 173면 이하 참조.

법제와 정보통신윤리 관련 법제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보안 침해 방지 법제의 경우 이를 정보통신기반 구축 법제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보안 침해 사고의 경우도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이라는 분류를 택하였다.

첨언하자면 이러한 분류의 체계는 사고의 정리를 위해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분류 자체가 서로 관련되는 측면이 있어(예컨대 ‘정보사회지식재산권의 확립’은 ‘정보사회의 역기능’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할 여지도 있다) 개념의 정립이 간단 명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개의 사안이 어느 분류에 포섭될 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둘 이상의 분류에 포섭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경우 최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에 분류하였음을 알려둔다.

〈표 1〉 정보화 관련 법제의 내용상 분류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 육성	정보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 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 보고서는 2010년 하반기 국내 정보화 법제도 입법 및 판례를 상기의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분류 작업을 통해 각 분야의 현황을 살피고, 차후 보완해야 할 점을 소개하였다. 마찬가지로 국외 정보화 법제도 역시 위의 분류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보화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향후 법제 정비 방향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제2절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 1.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위에서 소개한 정보화 관련 법제 분류에 따라 2010년 하반기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을 분류해 보면, 제·개정 공포된 법령은 50건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0건, 2010년 국회에 접수되었던 법률은 61건, 정부에서 입법예고 된 법령은 41건 이었다.

〈표 2〉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 통신 산업 육성	정보 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 통신 기반 구축	정보 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 정부 실현	전자적 의사 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 보호 및 보안	정보 통신 윤리	
제·개정 공포	4	3	1	42	6	7	0	0	0	63
국회 통과	0	0	0	0	0	0	0	0	0	0
의안 접수	3	2	11	21	6	20	3	10	7	83
입법 예고	3	6	0	25	3	6	1	1	0	45

아래에서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가. 제개정 공포 법령

2010년 하반기 제·개정 공포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총 63건으로 아래 표와 같다. 정책 추진기반 확립 부문에서 4건, 정보통신기반 구축 부문에서 3건, 정보통신 접근기반 확보 부문에서 1건, 전자정부 실현 부문에서 42건,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부문에서

6건, 정보통신산업 육성 부문에서 7건이 공포되었다.

〈표 3〉 제·개정 공포 법령 목록

분류	제·개정 공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정책추진 기반확립	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 10. 27. 공포 및 시행)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10. 11. 10. 공포 및 시행) 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 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
정보통신 기반구축	1. 전파법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 2. 전파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2010. 10. 27. 시행) 3. 전파법 시행령 (2010. 12. 31. 공포, 2011. 1. 24. 시행)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 10. 1. 공포 및 시행)
전자정부실현	1.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12. 공포 2010. 7. 16. 시행)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2010. 7. 14. 공포 및 시행)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15. 공포 2010. 7. 16. 시행) 5.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010. 7. 19. 공포 및 시행)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공포 2010. 7. 26. 시행) 7. 의료법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7. 23. 공포 2010. 8. 24. 시행) 9.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및 시행) 10. 특허법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2010. 7. 28. 시행) 1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2010. 7. 28. 시행) 12.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2010. 7. 30. 공포 및 시행) 13. 법무사규칙 (2010. 7. 30. 공포 및 시행) 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8. 4. 공포 2010. 8. 5. 시행) 15.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010. 8. 4. 공포 2010. 8. 5. 시행) 16. 건축법 시행규칙 (2010. 8. 5. 공포 및 시행)

분류	제·개정 공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p>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8. 11. 공포 및 시행)</p> <p>1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0. 8. 17. 공포 2010. 8. 18. 시행)</p> <p>19.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010. 8. 19. 공포 및 시행)</p> <p>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8. 19. 공포 및 시행)</p> <p>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0. 8. 30. 공포 및 시행)</p> <p>22.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10. 8. 30. 공포 및 시행)</p> <p>2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9. 1. 공포 및 시행)</p> <p>2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9. 10. 공포 및 시행)</p> <p>25. 검찰압수물사무규칙 (2010. 9. 10. 공포 및 시행)</p> <p>2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9. 17. 공포 2010. 9. 23. 시행)</p> <p>27. 지방세법 시행령 (2011. 1. 1. 공포 및 시행)</p> <p>28. 검찰보존사무규칙 (2010. 9. 28. 공포 및 시행)</p> <p>29.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010. 9. 28. 공포 및 시행)</p> <p>30.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0. 10. 8. 공포 및 시행)</p> <p>31.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2010. 10. 25. 공포 및 시행)</p> <p>32.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10. 10. 25. 공포 및 시행)</p> <p>33.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2010. 11. 1. 공포 및 시행)</p> <p>3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11. 2. 공포 및 시행)</p> <p>35.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2010. 11. 10. 공포 및 시행)</p> <p>3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10. 12. 8. 공포, 2011. 1. 1. 시행)</p> <p>37.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0. 12. 13. 공포, 2011. 1. 1. 시행)</p> <p>38. 부동산등기규칙 (2010. 12. 13. 공포, 2011. 1. 1. 시행)</p> <p>3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0. 12. 16. 공포, 2011. 1. 1. 시행)</p> <p>40.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12. 22. 공포, 2010. 12. 22. 시행)</p> <p>4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19. 공포, 2011. 1. 1. 시행)</p>

분류	제·개정 공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4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 12. 29. 공포, 2011. 2. 5. 시행)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 주택법 시행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공포 2010. 7. 26. 시행) 3. 공증인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2010. 8. 7. 시행)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및 시행) 5.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2010. 7. 28. 공포 2010. 8. 7. 시행)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0. 10. 18. 공포 및 시행)
정보통신산업 육성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9. 공포 및 시행) 3.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 9. 1. 공포 및 시행)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 10. 27. 공포 및 시행) 5.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 12. 10. 공포, 2010. 12. 11. 시행)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0. 12. 13. 공포, 2010. 12. 13. 시행)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 12. 27. 공포, 2010. 12. 27. 제정)

2010년 하반기에는 공포된 정보화와 관련한 법률의 수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공포된 전자정부법 및 전자문서를 활용한 민·형사 소송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서 그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혁명의 가운데 있는 현재 이를 뒷받침 할 법제가 정비되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 나. 국회통과 법률

2010년 하반기에는 국회의 공전으로 2010. 12. 31.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총법률의 수도 몇건 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정보화 법제 관련 법률은 통과된 바가 없다.

## 다. 국회접수 법률안

2010년 하반기에 국회에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총 8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책추진기반확립 부분이 3건, 정보통신기반 구축 부분이 2건,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부분이 11건, 전자정부 실현 부분이 21건,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부분이 6건, 정보통신 산업육성 부분이 20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부분이 3건, 정보보호 및 보안 부분이 10건, 정보통신윤리 부분이 7건 접수되었다.

〈표 4〉 국회접수 법률안 목록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정책추진 기반확립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허원제의원 대표발의)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신지호의원 대표발의)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9.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기반구축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제안)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2. 이화수의원 대표발의)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6. 이용경의원 대표발의)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0.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8.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9.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6.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8. 이용경의원 대표발의)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전자정부실현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21.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이종혁의원 대표발의)</li> <li>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7. 강창일의원 대표발의)</li> <li>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li> <li>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9. 27.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li> <li>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정부 발의)</li> <li>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li> <li>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li> <li>1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류근찬의원 대표발의)</li> <li>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류근찬의원 대표발의)</li> <li>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문학진의원 대표발의)</li> <li>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 제안)</li> <li>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정부 제안)</li> <li>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원희목의원 대표발의)</li> <li>16.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2010. 11. 18. 이정선의원 대표발의)</li> <li>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갑윤의원 대표발의)</li> <li>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li> <li>19.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박준선의원 대표발의)</li> <li>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9. 김재경의원 대표발의)</li> <li>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3. 정영희의원 대표발의)</li> </ol>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4. 이명수의원 대표발의)</li> <li>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1. 29 오제세의원 대표발의)</li> <li>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정부 제안)</li> <li>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8. 김우남의원 대표발의)</li> <li>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16. 정부 제안)</li> <li>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3. 정영희의원 대표발의)</li> </ol>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3. 이화수의원 대표발의)</li> <li>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4. 전해숙의원 대표발의)</li> <li>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전병헌의원 대표발의)</li> <li>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서갑원의원 대표발의)</li> <li>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한선교의원 대표발의)</li> <li>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10. 10. 29. 정부제안)</li> <li>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조진래의원 대표발의)</li> <li>8.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10. 11. 3. 우윤근의원 대표발의)</li> <li>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li> <li>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2. 강승규의원 대표발의)</li> <li>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9. 최재성의원 대표발의)</li> <li>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4. 강창일의원 대표발의)</li> <li>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1. 29. 정장선의원 대표발의)</li> <li>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 신학용의원 대표발의)</li> <li>1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3. 안홍준의원 대표발의)</li> <li>1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3. 정부제안)</li> <li>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김성동의원 대표발의)</li> <li>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0. 김성동의원 대표발의)</li> <li>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4. 송훈석의원 대표발의)</li> <li>2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2010. 12. 29. 장병완의원 대표발의)</li> </ol>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4. 전해숙의원 대표발의)</li> <li>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li> <li>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8. 정부제안)</li> </ol>
정보보호 및 보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2. 유기준의원 대표발의)</li> </ol>

분류	국회 접수 법률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21. 박대해의원 대표발의)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6.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2010. 11. 23.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3. 전해숙의원 대표발의)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6.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11. 26. 백원우의원 대표발의)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4. 정부 제안)
정보통신윤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곽정숙의원 대표발의) 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6.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9.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9.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접수된 법안의 특징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는 특별한 정보화 이슈가 제기된 바 없어서인지 매우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다만 P2P등을 통한 음란물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운 산업의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 라. 정부 입법예고 법령

2010년 하반기 정부의 입법 예고 법령은 총 45건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추진기반 확립 관련 입법 예고는 3건, 정보통신 접근기반구축은 6건, 전자정부 실현에 기여하는 입법 예고는 25건, 전자적 의사결정및 전자거래 확산과 관련된 입법예고는 3건, 정보통신 산업육성은 6건,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1건, 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1건이었다.

〈표 5〉 정부 입법예고 법령 목록

분류	정부 입법예고 법령
정책추진 기반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14. 행정안전부 공고)</li> <li>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방부 공고)</li> <li>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17. 기획재정부 공고)</li> </ol>
정보통신 기반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7. 1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li> <li>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2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li> <li>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4. 소방방재청 공고)</li> <li>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1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li> <li>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9. 방송통신위원회)</li> <li>6.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li> </ol>
전자정부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7. 고용노동부 공고)</li> <li>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0. 7. 8. 행정안전부 공고)</li> <li>3.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13. 농림식품수산부 공고)</li> <li>4.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li> <li>5.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li> </ol>

분류	정부 입법예고 법령
	<p>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p> <p>7.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2. 지식경제부 공고)</p> <p>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p> <p>9.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p> <p>1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p> <p>1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p> <p>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1. 국토해양부 공고)</p> <p>13.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p> <p>14.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 행정안전부 공고)</p> <p>1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토해양부 공고)</p> <p>1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토해양부 공고)</p> <p>17.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1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p> <p>1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1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p> <p>19.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26. 해양경찰청 공고)</p> <p>20.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2. 경찰청 공고)</p> <p>2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6. 농림수산식품부 공고)</p> <p>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22. 국토해양부 공고)</p> <p>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p> <p>24.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7. 행정안전부 공고)</p> <p>25.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9. 국토해양부 공고)</p>

분류	정부 입법예고 법령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li> <li>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li> <li>3.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2. 27. 지식경제부 공고)</li> </ol>
정보통신산업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러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7. 7. 지식경제부 공고)</li> <li>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7. 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li> <li>3.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0. 7. 16. 지식경제부 공고)</li> <li>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li> <li>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li> <li>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0. 12. 국토해양부 공고)</li> </ol>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3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li> </ol>
정보보호 및 보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9. 24. 금융위원회 공고)</li> </ol>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은 정보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정부실현에 기여하는 입법예고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 정보화가 이루어져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포된 소위 종이 없는 소송 제도에 맞도록 검찰 사무보존규칙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할 것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불과한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의 내용 중 하나인 공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특기할 만하며, 향후 동 법안의 처리 여부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 2. 국외 정보화 법제도

각국의 법제도 시스템,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는 정보화 쟁점은 국내 정보화 관련 입법 현황과 그대로 일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보화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제한적이거나 접근이 가능했던 국가들의 자료를 살펴본다면 2010년 하반기 국외 정보화 법제도의 흐름은 1) 지속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한 전자정부 강화, 2) 사이버보안의 강조 3) 통합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정책 마련 및 추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사이버 보안관 제도를 통하여 사이버 보안에 역점을 두고 있고, 백악관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및 전용 앱 개발 적극 추진하여 재난보조금 등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 회계 등 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실현을 통해 시행해 나가고 있어 이를 참고할 만하다 하겠다.

〈표 6〉 국외 정보화 법제도 목록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정책추진 기반확립	1. EU, 2011년 ICT 프로젝트에 12억 유로 배정(EC, 2010. 7. 20.) 2. EU, 미국 FCC, 망중립성 법안 통과 후 허용 논란 (CNET, 2010. 12. 23.)
정보통신 기반구축	1. EU, 미래 인터넷 연구에 9,000만 유로 투자 (EC, 2010. 7. 20.) 2. 영국,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 혁신 주도 (publictechnology, 2010. 7. 28.) 3. 미국, 슈퍼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줄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 승인 (FCC, 2010. 9. 24.) 4. 미국, 2012년까지 인터넷주소체계 IPv6로 전환 (OMB, 2010. 9. 28.; GCN, 2010. 9. 15.) 5. 영국, ICT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발표 (BIS, 2010. 10. 12.) 6. 유로피아나, 1,400만 점 이상의 유럽 문화유산을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EU IP/10/1524, 2010. 11. 1.)
정보통신 접근기반확보	1. 영국, ‘네트워크 국가를 위한 선언문 발표 (Race Online 2012, 2010. 7. 12.) 2. 미국, 장애인 접근 가능한 스마트폰과 셋탑 박스 의무화 입법 (OUT-LAW News, 2010. 10. 11.)
전자정부실현	1. 프랑스, e헬스 포털 오픈(epractice, 2010. 7. 1.) 2. 미 총무청, 최신 기술로 무장한 온라인 웹서비스 선진화 달성 (gsa.gov, 2010. 7. 2.)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3. 영국,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공 지출 데이터 공개 (ePractice, 2010. 7. 1.) 4. 미국, 유망 기술직 역량개발모델로 고품질 원스탑 구직 서비스 제공 (nextgov.com, 2010. 7. 12.) 5. 미국, 스마트폰에서 국가 재난 원조금 신청 가능(whitehouse.gov, 2010. 7. 19.) 6. EU,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WORKPAD’ 프로젝트 상용화 예정 (europa.eu, 2010. 7. 22.) 7. 싱가포르, 75%까지 노동부의 오프라인 방문 횟수 감축 (futuregov.asia, 2010. 7. 22.) 8. 영국 코번트리 시의회, 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 (PublicTechnology.net, 2010. 8. 5.) 9. 체코·루마니아, 전자헬스 서비스 확대 (epractice.eu, 2010. 9. 24., 2010. 9. 27.) 10. 미국, 하원에서 원격근무 법안 통과 (nextgov.com, 2010. 11. 18.) 11. 미국, 공공정보 공개 포털(DATA.Gov) 고도화 추구 : 열린 데이터 커뮤니티 구축 (data.gov, 2010. 11. 18.) 12. 미국, 긴급 전화 시스템(911)의 디지털 고도화 방안 추진 (FCC, 2010. 11. 23.) 13. EU, 스마트 정부를 위한 ‘2011~2015 전자정부 실행계획’ 발표 (EU, 2010. 12. 1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 미국 야칸소 주정부, 안전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인기 (govtech.com, 2010. 8. 4.) 2. EU, 전자송장(e-invoicing) 추진 계획 발표 (eGOV monitor, 2010. 12. 2.) 3. 미국, 2010 텔레워크 강화법 통과 (nextgov, 2010. 12. 9. Government Executive, 2010. 11. 18.)
정보통신산업 육성	1. 대만,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발표(gio.gov.tw, 2010. 7. 15.) 2. 영국, 만성병 환자들을 위한 원격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 (centrallancashire.nhs.uk, 2010. 8. 10.) 3. 캘리포니아 주,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텔레헬스 네트워크 구축 (Informationweek, 2010. 8. 18.) 4. 노르웨이, 디지털 처방 시범사업 확대 (epractice.eu, 2010. 8. 12.) 5. 일본, 교무 분야에서의 ASP·SaaS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soumu.go.jp, 2010. 10. 15.) 6. 포르투갈,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어젠다 2015’ 발표 (epractice.eu, 2010. 10. 25.)

분류	국외 정보화 법제도
	7. 프랑스, 프록시마 모바일(Proxima Mobile) 포털 오픈 (epractice.eu, 2010. 11. 4.)
정보보호 및 보안	1. 미국, 오바마 행정부 사이버보안 정책의 성과 발표 (whitehouse.gov, 2010. 7. 14.) 2. 영국, IT 보안 기술을 위한 'Cyber Security Challenge' 시행 (eweekurope.co.uk, 2010. 7. 25.) 3. 미국 NIST,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Nextgov, 2010. 9. 7.) 4. 스위스, 법원은 IP 주소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시 (2010. 9. 10, OUT-LAW News) 5. EC,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OUT-LAW News, 2010. 9. 13.) 6. 이스라엘, '적절한' 정보 보호 국가에 합류(OUT-LAW News, 2010. 10. 28.)

### 3. 정보화 관련 판례

2010년 하반기 정보화 관련 판례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전자정부실현 관련 1건, 정보통신산업육성 관련 2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확립 관련 3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3건 정보통신윤리 관련 8건이 조사되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 전자적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관련 1건, 정보사회지식재산권 확립 부분 관련 1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3건, 정보통신윤리 관련 2건이 조사되었다.

〈표 7〉 정보화 관련 판례 현황

구분	정보사회 기반조성			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보 사회 지식 재산권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계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정보통신 기반 구축	정보통신 접근 기반 확보	전자정부 실현	전자적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정보 보호 및 보안	정보통신 윤리	
대법원	0	0	0	1	0	2	3	3	8	17
헌법재판소	0	0	0	0	1	0	1	3	2	7



〈표 8〉 정보화 관련 판례 목록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전자정부실현	1.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결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위헌확인】)
정보통신산업 육성	1.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에 대하여 추가된 죄명: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2.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 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p>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p>
정보사회 지식재산권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전문학교 을의 직원인 갑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 재단법인이 을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병 법인의 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위반】)</li> <li>2.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 파일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 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li> <li>3. 피고인이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4468 【저작권법위반】)</li> <li>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분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합헌의견 7인, 반대의견 2인)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6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li> </ol>
정보보호 및 보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22.</li> </ol>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p>선고 2010도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p> <p>2.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로 피해 회사의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p> <p>3.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17. 선고 2010두12156 판결)</p> <p>4.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3 결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정】)</p> <p>5.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3 (합헌)의 의견)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p>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p>6.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 258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p>
정보통신윤리	<p>1.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므로, 위성방송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외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p> <p>2.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p> <p>3.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그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결정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p>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p>4.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가처분의의】)</p> <p>5.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10 판결)</p> <p>6.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p> <p>7.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한편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p> <p>8.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丙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丙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 4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 훼손·업무방해】)</p>

분류	정보화 관련 판례
	<p>9.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각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p> <p>10.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재판관 7인 위헌의견, 2인 합헌의견)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소원)</p>

2010년 하반기 정보화 관련 판례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건이 2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도9066 판결의 경우 회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던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복제한 프로그램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의 방법으로 팝업 광고를 하게 되는데, 원 페이지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팝업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광고 팝업이 나오도록 할 경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도 선고되었다. 즉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예방적으로 가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시이다. 다만 이러한 제 판례는 정보화 법제에 특유한 법리를 선언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전교조 가입 현황을 법원의 판결에 반하여 게재한 사례 및 소위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인데, 이들 역시 정보화 법제의 쟁점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 제3절 결어(2010년 하반기 정리 및 2011년 전망)

2010년 하반기에는 국회의 공전으로 12월 31일까지 전체 국회 통과 법률이 몇 건 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정보화 법제 관련 법률은 통과된 것이 없다. 공포 법령은 그 수가 상당한 편이나, 대부분 상반기에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다.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2010년 하반기는 특별한 정보화 이슈가 제기된 바 없어서인지 몰라도 예년에 비하여 매우 다양한 분야와 내용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P2P등을 통한 음란물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법률안은 새로운 산업의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선도적인 법제 완비로 지금의 IT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은 정보화를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실현에 기여하는 입법예고가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전자화, 정보화가 이루어져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어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포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에 관한 제반 법률에 맞도록 검찰사무보존규칙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불과한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의 내용 중 하나인 공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2010년 하반기 정보화 관련 판례 가운데는 국회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눈길을 끈다. 물론 전형적인 정보화 법제 판례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소위 미네르바 사건으로 대변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의 개념 등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정보법제의 특수성과 관련된 판시는 아니지만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만들었던 사건 등과 관련된 결정이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인터넷 팝업 광고에 관한 판례가 선고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에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시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하반기 법제를 조사하면서 아쉬운 것은 스마트폰, 신규 IT 서비스 및 IT 융합과 관련한 입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아 아니라 손 안의 정보통신기기이며 그 편의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입법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는 오픈된 플랫폼과 다양한 모바일 OS에 의해 해킹 환경 또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의 정보보안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금융 정보 유출 등 예상되는 정보보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겠다. 또한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규 IT서비스들이 대두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T 신기술과 새로운 IT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 또한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IT 융합은 IT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지원이 필요하겠다.

2011년에는 IT 신기술, 신규 IT서비스, 융합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IT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도모할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 제2장

#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주제별 분류

## 제1절 제·개정 공포 법령

### 1. 정책추진기반확립

#### 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 10. 27.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미래인터넷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통신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의 정보전략팀을 폐지하고, 행정관리 담당관실을 정책관리담당관실로 변경하는 등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개편함(안 제9조).
  - 제2의 인터넷 붐 조성을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인터넷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네트워크정책국에 지능통신망팀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방송통신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의 각 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14조).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10. 11. 10.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 선도산업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로봇산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과 및 소프트웨어진흥과를 소프트웨어산업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재정관리협력관을 신설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며,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549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재정관리협력관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을 정하고, 예산실에 예산관리과를 신설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실과 재정정책국간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정보통신기반구축

### 가. 전파법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

#### ○ 개정이유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 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주파수 경매제 도입(안 제11조)
  -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 항목의 비교심사를 거친 후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음.
  -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방식인 가격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의 대가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 무선국 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신설)
  - 신고제 전환이 가능한 무선국의 범위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함.
-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안 제24조)
  - 현행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려는 자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함.
  - 전파 혼·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운용하려는 자 등 전파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비용 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무선

설비의 설치로 자연환경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
  - 현재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기기별로 마련된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이 법에 통합하되, 기기별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함.
  -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안 제67조제1항제7호 신설)
  -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의 경우 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나. 전파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2010. 10. 27. 시행)

### ○ 개정이유

- 방송국에 대한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복리용 무선국이나 비상대비 선박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며, 아마추어무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처분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아마추어 무선의 활성화(안 제32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7)
  -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전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일반인들의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아마추어무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항)
  - 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송사업의 안정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고, 방송국 허가기간에 대한 탄력적 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복리용 무선국 등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안 제89조제1항 및 별표 7)
  -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위성방송보조국,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국, 어선의 조난방지를 위한 156MHz대역 선박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함.
  - 공공복리용 무선국 등에 대한 시설자의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고, 공공 복리용 무선국의 개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27)
  - 종전에는 행정제재 처분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을 대체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 앞으로는 과징금의 금액을 1일당 과징금액에 행정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처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전파법 시행령 (2010. 12. 31. 공포, 2011. 1. 24. 시행)

##### ○ 개정이유

- 시장원리에 따른 주파수할당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선국 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제도의 선진적 운영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의 운영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0393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무선국의 표본검사 및 재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과 관련된 절차·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파수 경매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제1항, 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5조)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공고하는 경우에 주파수 경매제의 방법·절차 및 그 최저경쟁가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최저경쟁가격 및 그 보증금의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주파수경매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비됨으로써 경쟁원리에 따른 주파수 할당제도의 운영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기대됨.
- 무선국 검사제도 정비(안 42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안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제2호)
  - 무선국 표본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무선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무선국 검사에 대한 절차개선을 통하여 무선국 개설·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선국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적합성평가 및 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1 까지 신설)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방법·절차·면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험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통합적·선진적인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제도 및 시험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정보통신기반확보

####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 10. 1.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4. 전자정부실현

##### 가.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위임에 따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체감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규정 보완(제1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위임에 따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명시
    - 감사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 감사전문교육은 감사기법, 회계지식을 전달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시하며, 강의, 시청각, 실습,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출장교육 및 대상기관 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근거 마련

#####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12. 공포 2010. 7. 16.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7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출소자 등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하여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 부착명령의 집행지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이전 등의



허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2010. 7. 14.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15. 공포 2010. 7. 16.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7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출소자 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주거이전 등의 허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관한 서식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마.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010. 7. 19.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의 제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절차와 서식들을 표준화하는 한편, 그 동안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실상 사용되어 온 문서들을 정비함으로써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의 작성 및 보관(안 제14조의2 및 안 제61조의2)
  - 사법경찰관리는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저장·보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서의 비치장부 및 서류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체포·구속통지 수단의 다양화(안 제23조의2제2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체포·구속 사실을 우선 통지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전화, 모사전송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추가함.
- 전자약식사건 처리절차 신설(안 제5장 신설)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동의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해당 사건을 전자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공포 2010. 7. 26. 시행)**

○ 제정이유

- 강력범죄의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검거하고, 재범에 의한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4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디엔에이인적관리자(안 제3조 및 제4조)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 식별코드 등을

관리하고 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를 담당할 디엔에이인적관리자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인, 구속된 피의자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안 제10조)
  - 수형인, 구속된 피의자 등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와 함께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보내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 용기 등에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 식별코드 등을 입력한 후 그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에게 보내도록 함.
-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안 제11조)
  -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채취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군사법경찰관이 채취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보내도록 함.
  -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건네받은 대검찰청 과학수사 기획관 및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그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 등(안 제13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디엔에이감식을 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부족 등의 사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다시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안 제16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재분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 폐기 방법 등을 적은 자료를 보존하도록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 기관의 장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 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확인한 후 인적사항, 식별코드 등을 삭제하고, 삭제한 식별코드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사. 의료법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

##### ○ 개정이유

-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전담기구·전문인력 부재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며,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적인 인증전담기관이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유인체계를 규정하여 의료기관 스스로의 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며, 인증 결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8조의2 신설).
-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 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도록 하되, 요양병원의 장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58조의4 신설).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며,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6 신설, 안 제89조)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7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병원과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 현행법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인증전담기관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을 때 인증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 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7. 23. 공포 2010. 8. 24.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자.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안 제2조)
  - 업무의 특수성·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을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안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7조 및 제21조)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도록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정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안 제35조 및 제37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송달 등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정함.

#### 차. 특허법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2010. 7. 2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출원된 발명에 대한 보정 시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설명서 기재요건을 추가하며,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의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상표법」, 「전자정부법」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카.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2010. 7. 2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의 직권변경 근거 마련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0. 7. 28. 시행될 예정인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의 해당 신설 조문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새로운 번역문 제출시 이전에 제출된 번역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2010. 7. 30.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행정심판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함
- 행정심판법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심판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 주요내용

- 제명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으로 함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6조)
- 제척·기피 신청 당사자에게 3일 이내에 원인 및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제9조, 제10조, 제11조)
- 지위승계 허가, 피청구인의 경정, 대리인 허가, 심판참가 및 각종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제12조 내지 제17조)
-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의 통지, 집행정지, 증거조사, 심리기일의 통지 등 행정심판청구 및 심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18조 내지 제28조)
- 재결 경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9조)
-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요구하는 실명인증을 하게 함(제33조)
-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함(제34조)

#### 파. 법무사규칙 (2010. 7. 30.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법무사시험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인터넷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공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있음

- 법무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방법,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 등의 현행 시험업무 처리방식이 규칙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서 일간 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함(제7조)
- 법무사시험에 있어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제9조 제1항 단서)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함(제9조제2항 단서)

### 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8. 4. 공포 2010. 8. 5. 시행)

#### ○ 개정이유

-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경우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09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의 방문 열람의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의2 신설)
  - 전직 대통령 및 대리인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 등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열람의 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적 형태가 아닌 대통령기록물은 사본으로 열람하되 열람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함.

- 온라인 열람의 방법과 절차 및 보안대책(안 제10조의3 신설)

-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로 한정함.
-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위조·변조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010. 8. 4. 공포 2010. 8. 5. 시행)

##### ○ 개정이유

-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023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위반과 관련한 처분의 공표 내용 및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조사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위반 등에 대한 처분의 공표(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 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업체명 및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국민들이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등의 위반사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22조의2 신설)
  - 국가가 굴양식어업인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를 하는 작업장을 축조·사용하거나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정함.
  - 굴 양식어업 및 굴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임기관의 변경(안 제40조)
  - 수산물의 생산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안전성조사 중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에서의 안전성조사 권한을 현행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위임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던 수산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점검 등 관련 권한을 현행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위임함.

#### 너. 건축법 시행규칙 (2010. 8. 5.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를 최대 10분의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멸실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8. 11. 공포 및 시행)

##### ○ 제정이유

-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대상과 표시기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 및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원산지의 표시대상(안 제3조)
  - 원산지 표시대상은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하며, 식품접객업 등의 경우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및 배추김치를 그 대상으로 함.
- 원산지의 표시기준(안 제5조)
  - 국산 농산물,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정함.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안 제6조)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할 경우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안 제7조)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010. 8. 17. 공포 2010. 8. 1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2010. 8. 19.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8. 19.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0. 8. 30.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시성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공포, 5. 5.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 절차와 관련된 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어.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10. 8. 30.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하던 어업면허증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어업 제한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고려사항에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9. 1.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 9. 10.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 여부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2010. 9. 10.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 위탁된 경우 보관증 이외에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야 하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9. 17. 공포 2010. 9. 23. 시행)

##### ○ 개정이유

-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3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수입폐기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안 제12조의2 신설)
  -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운반자는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등을 1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등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 입력 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입·운반 또는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안 제12조의3 신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폐기물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등의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기물 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안 제19조의2 신설)
  -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등이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를 정함으로써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퍼. 지방세법 시행령 (2011. 1. 1.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 허. 검찰보존사무규칙 (2010. 9. 28.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42호, 2010. 1. 25. 공포, 5. 1. 시행)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9943호, 2010. 1. 25. 공포, 5. 1. 시행)이 각각 제정되어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처리되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보존, 대출, 폐기 절차 및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의 보존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010. 9. 28.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42호, 2010. 1. 25. 공포, 5. 1. 시행)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9943호, 2010. 1. 25. 공포, 5. 1. 시행)이 각각 제정되어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처리되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방법,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등본·초본의 인증방식 및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0. 10. 8.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시성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공포, 5. 5.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고시(2009. 9. 11.)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2010. 10. 25.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폐지된 공공기관의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폐지되는 기관의 장과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의 장 간의 기록물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10호, 2010.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폐지기관 기록물의 인수인계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자기록물”의 정의를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구체화 함(제3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처리과 및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및 제35조제6항 신설).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간행물과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7항, 제44조제5항, 제46조제6항 신설).
- 폐지되는 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의 장은 기록물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승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관에 통보하도록 함(제47조제2항 신설).

## 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10. 10. 25.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54조 및 별표 8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 감면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제17조제5항)
- 수수료 납부는 수입인지외에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6항 단서 신설)
- 서식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식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4호, 제7호, 제10호)

#### 모.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2010. 11. 1.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라인을 통한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이용자가 민원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 11. 2.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 소.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2010. 11. 10.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장은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등 법령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법령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정보를 법령집과 연계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되, 법령정보의 유지·관리 업무를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령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010. 12. 8. 공포, 2011. 1. 1.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의 편의 및 업무효율을 위하여 전자우편 및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0. 12. 13. 공포, 2011. 1. 1. 시행)

##### ○ 개정이유

- 법원도서관은 1989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소속 과 명칭으로 ‘편찬과, 정리과, 열람과’라는 고전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기존 명칭은 법원도서관의 비약적인 발전, 높아진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전자도서관 업무 등 새로이 수행해 온 업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 명칭을 법원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도서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새로이 분장사무에 포함시키는 등 각 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법원도서관 편찬과, 정리과, 열람과를 자료편찬과, 자료기획과, 지식운영과로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함(별표 2의3)

### 초. 부동산등기규칙 (2010. 12. 13. 공포, 2011. 1. 1. 시행)

####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등기신청절차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함. 다만, 그 첨부서면 또는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송신한 경우에만 그 제출이나 송신을 면제함.
- “등록세”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로 함.

### 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0. 12. 16. 공포, 2011. 1. 1. 시행)

#### ○ 개정이유

- 2012년 실시 재외선거 및 확대된 생활 주변 선거 등 관리를 위해 중앙 조직의 일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전환·운영하여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 2011년 정원으로 확보된 직급조정 인력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국내선거·재외선거 관리부서 일원화
  - 재외선거국을 폐지하고 선거실에 재외선거기획관을 두어 국내선거와 재외선거의 관리부서를 일원화

- 조사 업무 사무분장 조정
  - 사이버조사 업무와 재외선거 단속업무를 조사정책관에 분장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정치자금·선거비용 조사업무는 명칭이 변경되는 정당국으로 이관
- 전산업무 통합 등 업무 효율성 제고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내부정보화 업무와 선거실의 선거정보화 업무를 통합하여 기획조정실에 편제
- 그 밖에 조직 편제 일부 조정
  - 인사 기능을 기획조정실로 이관(인사담당관)하여 조직·인사·예산을 통한 위원회 미래 비전 기획 역량을 강화하되, 공무원 단체사무는 총무과로 이관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5명(기능10급 35명)을 감축하여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 35명(행정서기13명, 행정서기보 2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의 직급 명칭을 정비
- 직급조정 확보 정원 반영
  - 통합 창원시 2개 구위원회 사무국장 및 구·시·군위원회 지도담당관 배치 등을 위한 직급조정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
- 다른 규칙의 개정
  - 규칙 중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명칭을 반영(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 규칙,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12. 22. 공포, 2010. 12. 22. 시행)

### ○ 개정이유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11호, 2010. 5. 25.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 수입유통식별 쇠고기의 거래신고 방법과 절차,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의 출생 등 신고의 기한 단축(안 제5조)
  - 소의 출생·폐사 신고를 현행 출생·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양도·양수 신고를 현행 양도·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양도·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함.
  - 질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방역 등을 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거래신고 등의 기한(안 제20조제1항)
  -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거래신고 등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함.
-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22조)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하증권번호, 수입신고필증번호, 검사장소 및 입고일 등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추가적으로 기록하도록 함.
-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안 제28조)
  - 개체식별대장의 기록·관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 신청,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및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등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12. 19. 공포, 2011. 1. 1. 시행)**

○ 제정이유

- 국방 분야의 전력증강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5호, 2010. 2. 4.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국방정보화기본 계획에 따른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방정책이나 국방정보화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정보화책임관 및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 소속 기관·부대의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부대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중 최상위자로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국방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지원 및 평가, 국방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국방정보의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하며, 협의회에 안전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둠.
- 국방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
  -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의 관리 및 국방정보 자원의 조사 등의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정함.
  -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밖에 국방 정보화사업 등에 관련된 기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전담 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 12. 29. 공포, 2011. 2. 5. 시행)**

## ○ 개정이유

-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 문화재의 명칭·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 가. 주택법 시행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 제1항 및 제15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둬.

-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21. 공포 2010. 7. 26. 시행)

##### ○ 개정이유

-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5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5조 신설)
  -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35조의2 신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35조의4 신설)
  -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분쟁의 조정 등(안 제35조의5 신설)
  - 농수산물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함.

#### 다. 공증인법 시행령 (2010. 7. 26. 공포 2010. 8. 7.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정공증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8. 7.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사무실,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 지정공증인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지정 신청 심사 시 법무부장관의 조사권 등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으로서 축탁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7. 27.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5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2010. 7. 28. 공포 2010. 8. 7. 시행)

##### ○ 제정이유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정공증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8. 7. 시행)됨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 받으려는 공증인의 지정 신청, 촉탁인·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안 제2조)
  -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등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안 제3조)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을 촉탁하거나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부여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보급한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등의 형식·용량(안 제4조 및 제5조)
  -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 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도록 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을 별표로 정함.
-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촉탁(안 제6조 및 제7조)
  -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인증을 받으려는 전자문서등의 명칭, 촉탁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전자문서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도록 함.
-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앞에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촉탁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인증의 취지, 전자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 및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특별절차를 부가함.

-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인증의 취지, 전자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첨부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보관(안 제13조)

- 인증받은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보존기간 및 인증받은 전자문서등에 대한 촉탁인의 보관 청구에 따른 보관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및 인증정보의 제공(안 제14조 및 제15조)

- 촉탁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인증받은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을 청구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동일성 증명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촉탁인의 보관 청구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청구 받은 지정공증인은 청구자를 대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에 동일성에 관한 표시, 전자인증번호 등의 사항을 첨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청구자에게 내주도록 함.

- 후임자의 지정(안 제16조)

-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0. 10. 18.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의 경우 원도급자가

폐석면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 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에 대한 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 폐석면이 배출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소규모 축산농가 등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제거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직접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축산농가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작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폐석면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함.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의 공동처리 허용(안 별표 5 제2호다목1))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자별로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간 공동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염 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안 별표 5 제5호다목1)바) 신설)
  -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의료폐기물의 발생 기관 및 발생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여,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 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넣은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중 부착 또는 소지 의무 면제(안 별표 5 제6호나목7) 신설)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부착하거나 소지하여야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중은 해당 폐기물의 이동 수단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별도의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등에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므로 이중 규제의 우려가 있음.

-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신고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대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부착 또는 소지 의무를 면제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확대(안 별표 6 제1호)
  -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현장 등의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데에 불편이 있음.
  - 이동형 통신수단(PDA,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주차장 확보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다목2))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보유 장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장비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보유 장비에 비해 과다하게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장 규모를 보유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 보유 장비에 적합한 주차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6. 정보통신산업육성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 7. 6.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7. 9.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환경을 조성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0. 9. 1.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로 정하고, 이러한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수신료가 면제되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 10. 27. 공포 및 시행)

##### ○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883호, 2009. 12. 30.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직접 계약현황 등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 마련(안 제8조제2항)
  -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시기 구체화(안 제13조 제1항)
  - 매년 10월 말에 제출하던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연도 3월 말에도 현행화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 추진 정보가 제공되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의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화(안 제13조의2 신설)

- 국가기관 등의 장이 매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의 제품명, 수량 및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17조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를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적절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화함.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 12. 10. 공포, 2010. 12. 11. 시행)

#####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및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거래사실의 인증(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사 등 기술인력 3명 이상,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을 실시하고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갖춘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우수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3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품질인증서를 생성·발급·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 인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정함.
  - 지정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31조 및 제32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조정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 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0. 12. 13. 공포, 2010. 12. 13. 시행)

### ○ 개정이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공포, 12. 11. 시행)으로 개정되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21호, 2010. 12. 10. 공포, 12. 11.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 12. 27. 공포, 2010. 12. 27. 제정)

##### ○ 제정이유

- 방송통신에 대한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도입하고,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며, 체계적 위기관리를 위하여 통합적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165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통신 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및 그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방송통신기본계획 업무전담기관의 지정·관리 기준 마련(안 제3조)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업무전담기관의 지정범위, 지정분야, 지정기준 및 해당 전담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관리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방송통신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기금의 재원으로서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징수율·징수절차·징수기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기금의 수입·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방송통신 진흥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 세부내용 정비(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영절차, 방송통신 재난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재난방송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방송 및 통신에 대한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 8. 정보보호 및 보안

## 9. 정보통신윤리

# 제2절 국회 통과 법률

## 1. 정책추진기반확립

## 2. 정보통신기반구축

## 3. 정보통신기반확보

## 4. 전자정부실현

## 5. 전자적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 6. 정보통신산업육성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 8. 정보보호 및 보안

## 9. 정보통신윤리

# 제3절 국회 접수 법률

## 1. 정책추진기반확립

###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하원제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와 달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각각 서로 다른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의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설치된 법정 독립기구로 심의 관련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고,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심의·의결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안 제25조).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신지호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이들이 인터넷 웹 사이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증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웹 서비스의 접근성 평가는 개발자보다는 사용자가 주가 되어 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웹 개발자가 진단평가를 겸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용자 계층이 소외되어 인증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이 법에 인증제도의 근거를 명시하여 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인증심의회 장애인과 고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의회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인증심의회위원회 전체위원 수의 2분 1 이상 구성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9.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및 심의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 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 2008년도 정부조직의 개편 이전에 방송위원회에서 운영한 바 있는 모니터링 조직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음.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공백상태에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규정 위반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조직과 중복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
-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의 위반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의무 위반여부도 모니터링 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등의 모니터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의2 신설).

## 2. 정보통신기반구축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제안)

#### ○ 제안이유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대상을 일반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도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 대상에 포함함.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일원적·통합적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4조제2항 및 제66조제4호)
  -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일시적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경영 활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련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안 제2조제10호 및 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8조의3)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업무정지·인정취소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함.
  -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적 실정에 맞는 업무 추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최근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난 2009년 임진강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하나 현재 그러한 수단이 적절하지 않음. 이에 DMB나 IPTV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기존의 재난 뿐 아니라 민방위 사태 시에도 경보 방송을 추가하여 급작스러운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재난방송에 「민방위기본법」 제2조의 민방위 사태를 추가하고 재난방송의 범위를 민방위경보방송으로 추가 확대함(안 제40조제1항).
- 재난 및 민방위경보방송 송출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0조제2항).

## 3. 정보통신기반확보

###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2. 이화수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10초 단위 요금제를 사용하여 부당한 낙전수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용인하고 있음.
- 이에 1초 단위를 초과하는 요금체계의 채택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낙전수입 편취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초 단위를 초과하는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2항).

##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6. 이용경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기반 스마트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천만 명에 달하는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 사용 국민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또한, 01X 사용자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번호가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산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음.
- 특히, 010 사용자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금지된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번호이동성 제도(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 이에 정부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식별번호를 변경 또는 회수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안 제48조), 셀룰러,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아이엠티이천서비스 등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른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58조).

#### 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0.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기본취지는 방송통신의 종합적인 발전 및 진흥 도모임.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부를 위탁 담당해야 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기존 통신진흥업무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명칭 및 설립 취지를 변경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8.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
- 이러한 성장 추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음원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음원근절운동과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웹하드, P2P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 업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또, 불법 유통 콘텐츠 중 90%에 달하고 있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웹하드가 불법적으로 재생산·유통되는 메인 통로로 자리잡으면서 건전한 온라인상 콘텐츠 유통 환경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난 6월 발생한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범행 전날 52편의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불법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2007년 12월 발생한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의 범인 컴퓨터에서도 700여편의

불법 유통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 각종 성범죄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이들 웹하드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난 2008년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은 세 번째 제도 개선책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부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항 및 제95조제3호의2 신설).

####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9. 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역무)는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요금체제와 약정조건 등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그 바램에 계약 중도해지나 위약금 산정 문제 등으로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용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 우편으로 계약서 사본을 자동차보유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없애고 있음.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및 제101조).

**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어야 방송수신이 가능함으로 저소득계층의 보편적 방송시청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국민들은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등에게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수상기의 구매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방송의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디지털컨버터의 임대를 원하는 가구에게 이들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뜻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전에 디지털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컨버터 1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가 디지털 컨버터 제공에 대신하여 디지털 텔레비전수상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컨버터 구입비용에 갈음한 구매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이전에 일반 가구가 디지털컨버터의 임대를 원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8. 이용경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모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난시청 문제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 시청이 어려운 가구가 공식적으로는 4% 정도,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태임.
- 이에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모든 국민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수신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 제26호 신설).
-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모든 국민이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둠(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수신환경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환경 조사 결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음.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발달로 디지털 텍스트정보를 2차원바코드로 원본과 함께 출력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로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해당 보조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에도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의 예로 점자단말기와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기기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해당 보조기기를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보급에 대한 노력이나 의무조항이 없어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적용된 인쇄물이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생산되는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이 문자로 표시된 비전자정보를 점자나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보기록방식을 ‘점자·음성변환용코드’로 정의함(안 제3조21호 신설).
- 문자로 표시된 비전자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여 생산·배포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 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건강기능식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강기능식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약품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활자크기의 확대 및 점자표시를 하도록 고시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약품등의 기재사항이 점자로 표시된 의약품등이 거의 없고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의약품등에 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3항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 일부 화장품업체에서 몇몇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화장품 명칭등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기재사항의 점자 표시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건강 및 피부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없이 기본적인 화장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합한 화장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化粧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化粧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化粧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化粧품 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化粧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 4. 전자정부실현

##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 7. 21. 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 경력자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 경력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 자료를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범죄자의 범죄예방을 맡고 있는 경찰의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속적인 보호관찰 및 범죄 예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거주 이전 등의 허가를 받을 때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학교·놀이터와 같은 출입금지시설에 출입하거나 외출금지시간대에 외출하는 등 법원이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거주이전 및 국내여행시 통보(안 제14조제4항 신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거주 이전 등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그 사실을

거주이전지 등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에 대한 거주 이전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주 이전지 등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연속적인 보호관찰 및 범죄 예방 업무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험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보 의무(안 제16조제5항 신설)
  - 현재 보호관찰 인력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학교, 놀이터 등 출입금지시설에 출입하거나, 외출금지시간대에 외출하더라도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할 수 없어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피부착자가 법원이 부과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이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 예방을 맡고 있는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일정 정보가 비공개대상임.
- 그런데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2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되버릴 우려가 있을 것임.
- 물론 후속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 따라서 국민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 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향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5항).

#### 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7. 이종혁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는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결산 부속서류에 프로그램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프로그램별 기금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 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7.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현행법 제83조제3항을 근거로 경찰 등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현행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관서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규정에도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수사관서 등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경우 영장주의에 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윤석용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식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식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식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식품 선택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식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식품등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 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9. 27.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과실 상계에 관한 내용이 법적 근거 없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지급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공제급여의 청구권을 학교장이 독점하여 전산망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게 되어 있어 학교장의 결재 없이는 공제급여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학교장이 하게 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임.
  - 또한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급식과 청소, 교통안전도우미 등 다양한 교육보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 그리고 현행법에는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의 치료비 지급이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치료비 보상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공제급여 청구를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학교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활동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부모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도록 하고, 치료비 선지급 근거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활동참여자’를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업무(사전에 계획되어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또는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 및 학교장이 주최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교직원이 주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치료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신설).

-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후유증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 신설).
- 요양급여의 지급청구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사가 공제가입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하거나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후단 신설).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정부 발의)

##### ○ 제안이유

-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검사 또는 사법검찰관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같은 개인사생활정보를 요청하거나 통신제한 조치 또는 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통신정보의 통제사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본인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검사 또는 사법검찰관 등에게 제공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검증

현황 등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알권리의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 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제9조의3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4호 신설).

#### 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류근찬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 시설이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계시설의 보급이 지연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항제4호 신설).

#### 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7. 류근찬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농지전용신고 사유에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계시설의 보급이 지연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농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고 각종 긴급 상황이나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전기통신 중계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농지전용신고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1항제4호 신설).

#### 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문학진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타락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선거운동방법이 「공직선거법」 적용대상 선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지역유지 등 기존 기득권층에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와 투표자 간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기부행위의 제한 등 선거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선거운동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규정하여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용 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며 당선 무효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포상금제도와 금품수수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규정하여 선거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더불어,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0. 7. 29. 2008헌바106] 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법을 법률로써 정하고, 또한 50배 과태료 규정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2009. 3. 26. 2007헌가22] 을 받은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개정에 따라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선거운동방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0조제6항 신설).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하거나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안 제5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0조의2 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안 제173조제2호 신설).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안 제174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농림수산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6조).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177조 신설).

#### 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 제안)

##### ○ 제안이유

-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 과태료 집行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정부 제안)

##### ○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장제3절 신설)
  - 현재 초·중등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인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수수료, 수정, 공급, 제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올려 규정함.
-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37조의4제1항제5호 및 제2항 신설)
  - 교과용도서의 선정과정에서 발행자 간의 불법·과당경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상 제재가 곤란한 실정임.
  - 발행자 등이 검정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교과용도서의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37조의5 신설)
  - 검정합격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기 중 사용 중인 검정도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재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정도서의 합격정지가 학생 및 교사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합격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0조의4 신설)
  -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 법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교육비 지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연계·활용(안 제60조의8 신설)
  -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청학생의 경제 수준이 쉽게 노출되고, 신청접수·선별·입력 등을 교사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통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9. 원희목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복지업무 종사자가 실종아동등을 신고해야 할 경우 국가경찰관서에 직접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경찰관서에 하게 되어 있고 보호시설의 장 등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전문기관에 신고카드를 보내게 되어 있어, 실종아동등의 신고 및 신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신속하지 못하므로 신고체계와 신고정보 제공체계를 각각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장애아동은 실종시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아동에 비해 장기 미발견율이 4~17배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 보호시설 등과 협력하여 “실종아동 찾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직접 신고하게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여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에 관하여 복지시설 등을 지도·감독 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 체계로서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과 경찰청 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되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검사 대상자 등이 요청하면 유전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2010. 11. 18. 이정선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평등관점으로 국가정책을 분석평가 하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참여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둬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성평등 관점 반영 및 정책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 명문화(안 제5조 및 제6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① 법령의 제정·개정, ② 법령상 수립 근거가 있는 중장기계획 수립, ③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등으로 함.
  - 분석평가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방안 등을 포함함.
-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분석평가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분석결과를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
-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작성 지원을 위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안 제1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설치(안 제17조)
  -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설치하여, 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분석평가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
- 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 운영(안 제23조)
  - 분석평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각종 보고서 등의 전산화 및 기초자료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8.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 법은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은 지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통령령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의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정부기관 중 청와대, 국방부 등은 보안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반 지도에 위치 표시가 되지 않고, 차량위성항법장치인 이른바, 네비게이션을 통한 위치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보안관리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 실제 일반 공중에게 위치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민원인이나 내방객의 왕래가 잦은 시설은 지도 상에서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를 엄격히 차단하여 이를 극비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스스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지도상에 해당 기관의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위치 정보 확보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 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면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자를 성년자로 제한한 것은 성범죄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공개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미성년자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에게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 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박준선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1995. 12. 6. 제정·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에 관하여 원격영상재판을 가능하게 하였음.
- 위 법률은 시·군법원에만 적용됨으로써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고, 민사소액, 화해, 조정 사건 및 즉결심판 등에만 적용됨으로써 사건의 유형이 한정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범위가 협소하였음.
-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법원을 확대하고 대상사건의 범위도 일반 소송 사건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사법서비스에 반영함으로써 원격지 거주자의 법정 출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법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장소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
- 모든 법원의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으로 대상법원 및 대상 사건을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허가하도록 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9.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을 저지른 자들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여 국가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촉, 협박 또는 보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3. 정영희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예산을 과다 집행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반납되는 등 배분사업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모금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부금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에 관한 공개를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 모금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 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4.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9. 4. 22 개정되어 같은 법 제52조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서명법」에서는 여전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정보보호원장”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의3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1. 29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온라인 쇼핑몰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거래의 편의성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거래와 달리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재화등의 구매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음.
- 특히, 식품 등의 경우에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제조일자·유통기한·원산지 및 영양성분 등이 구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포장용기에만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하는 정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왜곡·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이에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표시를 추가하여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정부 제안)

### ○ 제안이유

- 사립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안 제18조제2항 신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개최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해졌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의 이사가 출장 등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격 영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법인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안 제45조)
  - 현재 사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변경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정관변경이 가능해지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8.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결함 및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청약철회 기간의 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청약철회 기간이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부터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7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 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16. 정부 제안)

-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기기 이용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보안 수준,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신청(안 제4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갱신 지정을 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기한 내에 갱신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안 제15조제4항)
  - 현재는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범용(모든 전자거래에 사용)과 용도제한용(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거래용)의 2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이용 대상, 용도 등을 기준으로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
-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안 제18조의2 신설)
  - 현행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사망·실종자나 해산된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도록 함.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3. 정영희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으로 소비자가 신중한 구매결정을 하기 어렵고, 공급된 재화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최대 7일로 두고 있음.
- 그런데 현행 7일의 청약철회기간 안에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7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규모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약 20조원 이상 추정)를 감안한다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청약철회기간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 6.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3. 이화수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4.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온라인상의 뉴스서비스에서는 기사 중간에 팝업(Pop-Up)이나 특정 키워드에 대한 돌출형 광고가 게재되어 인터넷신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원하지 않는 광고를 접하게 되고, 구독의 흐름을 방해받는 등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독자의 원활한 구독을 위하여 광고가 기사를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7.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 같은 아마추어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 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 이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서갑원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사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역방송의 발전지원 등의 공적책임 보다는 경영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무리하게 지역방송사를 통·폐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상파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신청한 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신청한 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2조의4제5호 신설).

**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실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중계 및 송신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내용을 기록·보존토록 하고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에 대한 규제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1일로 만료되어 해당 규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에 대하여 현행 변경허가제에서 변경신고제로 완화하고자함.
- 한편 「방송법」의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제도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사업자 신고제도와 그 규제대상이 중복되므로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제도의 폐지를 통해 규제를 일원화하고자 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가 아니므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어 법체계에 맞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일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5항).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운용 범위를 지상파방송채널 등으로 정함(안 제70조제6항).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기록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안 제83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변경 함(안 제35조제3항, 제70조제5항 및 제7항, 제76조의2제3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10. 10. 29. 정부제안)**

○ 제안이유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지능형전력망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 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지원(안 제12조 및 제14조)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의 구축사업,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안 제15조 및 제16조)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안 제18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 초기에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을 보급 및 사용하는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적으로 홍보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안 제22조, 제26조 및 제28조)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는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안 제23조)
  -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사.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조진래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총톤수 2톤 이상의 여객선·유선·낚시어선, 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등에 대하여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 안전에 취약한 연안어선 등은 그 의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사고 중 이러한 연안어선의 사고가 대부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어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의무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어선이 항·포구를 출·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어민이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연간 420만건)하도록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선박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음.

- 한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외국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의 감시 등 어업관리와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어선위치추적시스템(VMS ; Vessel Monito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에서도 200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이 시스템의 설치를 강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음.
- 따라서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 아.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10. 11. 3.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사업은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를 법제화하여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보화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보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별 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해당 연도 정보화마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정보화마을의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의 범위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가구 및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마을 지원계획, 해당 지역의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청 받은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마을정보센터의 설치,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별로 마을정보센터의 관리·운영, 정보화마을 간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하는 해당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정보화마을 상호 간의 협력증진 및 공동이익의 추진과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정보화마을중앙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

#### 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5. 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주식의 소유제한·재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방송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방송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사항들은 지주회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 관련 방송지주회사가 이미 설립((SBS미디어홀딩스 등)되어 있고, 최근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허가에 맞추어 새로운 방송지주회사가 설립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여 여론형성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을 실제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방송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의 소유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방송지주회사의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주식 총수의 40%에서 30%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사업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방송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주된 사업의 기준은 자산총액 중 방송사업이 차지하는 지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방송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2항 신설).
  - 방송지주회사 설립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
  -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제한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방송지주회사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사업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 방송지주회사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방송지주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2.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모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 있음.
- 이에 위성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절차에서 사업자들 간에 형평성 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

#### 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9. 최재성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학습 및 학점취득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 하고자 원격수업 수강에 의한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군부대 또는 군 복무기관에 원격수업 수강을 위한 시설 및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군인들이 학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법에 군복무 중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수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관련 시설 및 여건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군 복무자의 자기계발 욕구 충족 및 복무 의욕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신설).

**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4.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 제13조제3항제6호는 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는 제한 대상자의 하나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2005. 8. 4 법률 제7656호)되었음.
- 이에 폐지된 법률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1. 29. 정장선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이사회가 제청하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바, 현행 제도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에 놓고 정치적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8조제2호).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건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신설).

####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생활정보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부동산이나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계약을 위하여 관련 중개업자들의 정보제공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이들 중개업자들이 게시한 매물에 대한 정보는 매수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중개업자들의 정보를 신뢰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상품을 중개하는 경우에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3.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 법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 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지상 정보중심, 대도시 정보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정보체계구축사업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3. 정부제안)

##### ○ 제안이유

-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이러닝산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 이러닝 단말기 및 관련 기기의 등장과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드웨어·기기 등의 연구·제작업을 이러닝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 제작, 표준화 및 국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3항제4호·제5호, 안 제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급변하는 이러닝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 이러닝 분야 기술·인력의 국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안 제17조의2 신설)

-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함.

**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6. 김성동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1.7%씩 증가해 2009년에는 약 1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규모도 함께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휴대전화 이용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는 지능적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의 대다수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CP, 콘텐츠사업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와 제도가 없어 피해 대응이 사실상 곤란함.
-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검증사업을 실시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과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은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대가의 청구 여부 및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알려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검증사업을 실시함(안 제57조의2).

-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에게 대가의 청구·징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및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2).
-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 준수하여야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3).

#### 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0. 김성동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서 작성한 기사와 같은 뉴스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함.
-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침해되는 뉴스 저작물의 산업적 가치는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언론사 뉴스정보의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가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4. 송훈석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뿐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과 할 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 대통령령은 현행법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해당 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한 회계를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놓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와 영업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 과태료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을 정비함(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2010. 12. 29.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최근 미디어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속에서 지역방송은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복수미디어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는 등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어려운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 지역방송의 위기와 몰락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지역 분권과 지역자치를 훼손하며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지역방송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함.
  -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3시간 이상을 지역방송 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7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도록 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24.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마우스나 USB형태의 ‘오토프로그램’(컴퓨터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게임공급자의 당초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으로 변경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게임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기나 부품 등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기기 등을 단속하여 판매·배포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제품·장치 등을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24조제2항).

### 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저작권법」 133조의3에서 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경우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 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복제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 권고에서 시정 조치로 변경하고 저작권 위원회가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저작권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

**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28. 정부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접권자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공연하는 자가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그 방송을 시청하게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8. 정보보호 및 보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2.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예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21. 박대해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이하 “미니홈피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배우자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 제25조의2 또는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3호의2 신설).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2. 김충조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청회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실시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에 가까우며 이를 형식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도 통제할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시·군·자치구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매년 안내판 설치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조의4 신설).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 김금래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신설).

#### 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최근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음. 이것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 기록이 09년 하반기에만 1,557만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조치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벌칙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제3항 신설).

**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2010. 11. 23.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최근 컴퓨터, PDA,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T환경이 구축되면서,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악성프로그램이 확산·증대되고 있음. 특히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PC’가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침해사고에 악용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법제는 네트워크(망) 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 컴퓨터의 보호 및 실효성 있는 침해사고 예방·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용자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감염사실과 치료 방법을 알리고 치료를 지원하는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급대응조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컴퓨터보안프로그램 이용·보급 활성화, 웹사이트에 은닉된 악성프로그램 삭제, 악성프로그램 감염컴퓨터의 치료 지원, 심각한 침해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 등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훈련, 침해사고 상황전파, 교육·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악성프로그램 대응기술 개발·보급 및 시범사업 실시 등 컴퓨터의 안전한 이용·관리 및 악성프로그램의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촉진·지원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백신소프트웨어 설치·이용 및 정기적 갱신,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확인 및 설치 등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7조).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및 컴퓨터 제작·수입·판매자는 이용자에게 컴퓨터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컴퓨터에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안 제8조).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하되 불응시에는 제공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웹사이트 게시자료의 정기점검 및 악성프로그램 발견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게시판 발견한 경우 해당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삭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컴퓨터 보호를 위하여 긴급배포용 백신소프트웨어 보급, 상담 및 원격지원 등 기능을 갖춘 인터넷방역사이트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악성프로그램 감염 컴퓨터에 대한 접속 및 자료의 수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보완이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와 이를 조종하는 컴퓨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인터넷주소의 변경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컴퓨터에 관한 정보를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감염사실 및 조치방법 등을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급속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침해사고 원인이 되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치료·복구할 수 있는 컴퓨터보안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긴급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주소의 차단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3. 전해숙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최근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선정성 정보 중 43%가 웹하드나 P2P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웹하드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배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웹하드는 순수한 웹 스토리지(storage) 사업으로서의 유통 모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영화·음악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 판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웹하드 업체는 단순히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불법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시 신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음
- 이에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행태의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사업체의 남설을 방지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안 제41조의2 신설).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 일정한 요건에 따른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안 제72조제1항제3호).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26. 안호대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스마트폰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트위터’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11. 26. 백원우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척을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정보공개 원칙 강화(안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할 필요
  -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

##### 사전 정보공개 강화(안 제7조제2항)

-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사후적·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로의 전환이 필요
-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
-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안 제8조)
  -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공개청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신속하고 빠짐없는 공개가 필요

-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라도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보다 명확화(정보목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공개 주기 등은 시행령 개정 시 반영)
-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제공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정착
- 비공개 대상 축소 및 구체화(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 축소 및 구체화 필요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가능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및 퇴직공무원의 재직 중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대상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
  - 비공개대상정보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 사례를 없애는 한편, 적극적 정보공개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안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1/2 이상으로 하도록 할 필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외교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현행 1인 이상에서 2분의 1로 확대
  -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제고
- 청구인이 원할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안 제13조제2항)
  - 정보공개 방법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본 교부 거부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실효성 제고
-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한 제도화 필요

-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
- 이의신청 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결정의 공정성 제고
-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안 제19조)
  -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치가 상실되는 정보의 특성으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 행정심판 기능을 보완·수정할 필요
  -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보다 빠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
- 신분보장 및 벌칙(안 제28조 및 제29조)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필요
  -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적극적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정보공개 사례의 사전 예방에 기여

####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24. 정부 제안)

##### ○ 제안이유

-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신송금 시 송금자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며,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신(電信)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 현재 금융기관 간 송금은 대부분 전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송금하는 금융기관은

송금자의 성명과 계좌번호만을 송금받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송금받는 금융기관이 해당 금융거래를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려는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전신송금 시 송금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하는 금융기관이 송금받는 금융기관에 송금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관리자,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수행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한 자를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추가함.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운용의 투명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경고나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강화되어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기관 감독·검사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근거 마련(안 제11조제7항 신설)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시 감독·검사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고받은 내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감독·검사가 감독·검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9. 정보통신윤리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9. 광정숙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 특히, 인터넷과 광고 전단지 제작 및 배포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게 필요함.
- 이에 인터넷 및 광고를 통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부족한 행정인력과 치안인력을 대체하여 국민적 참여로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성매매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전화대화방, 광고물을 제작·운영·배포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유료음성대화를 유도하는 광고를 차단하고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성매매 목적의 광고, 문자발송 등을 유도하는 정보제공자를 단속하고 성매매방지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목적으로 인터넷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 보상금 지급 대상에 제19조제1항 및 제20조를 포함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

#### 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인터넷 웹하드업체들의 무책임한 관리하에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도 여과 없이 확산됨에 따라 아동성범죄 급증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은 웹하드업체 등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고,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들에게 불법적인 음란물의 유통에 대해서도 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같은 음란물을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피투피(P2P) 서비스 제공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특히 이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하여 이를 모방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이나 「저작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법」 등에서는 음란물을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나 반포·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거나 관련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행위를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5. 김충환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웹하드 업체들이 만든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누구나 접근하기도 용이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의 죄의 경우 음란물을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으로 규정되어 있어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이를 통하여 생성된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지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야만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상물도 현행 규정에 포함시켜 법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3조)

####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5.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대부분은 이른바 웹하드와 P2P라고 불리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부가통신사업을 통하여 드라마, 영화와 같은 일반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란성 콘텐츠가 유통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웹하드 및 P2P 사업자는 저작권법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로 신고한 후 영업이 가능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를 가하더라도 불법 콘텐츠 복제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한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콘텐츠 유통 사업자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제22조제2항 신설).

**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9.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발생한 게임중독 청소년의 모친 살해 및 자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게임 중독은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걱정해야 할 당면과제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2009년)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자는 93만 8천명(12.8%)에 이르고, 이 중 당장 치료가 시급한 고위험군은 18만 7천명(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가족부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전수조사(2010년)에서는 2만명(1.65%)에 이르는 학생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으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임.
- 또한,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과 중독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인터넷중독 치료·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인터넷 중독 기숙형 치료학교(일명 레스큐 스쿨)’를 설치하는 등 인터넷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이 연 140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해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인터넷 게임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시설’을 상설화 하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전문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 12. 29.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대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료로 공급되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한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이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미비한 법제도에 따른 영상물등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등급분류의 제외대상인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이나 콘텐츠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제4절 정부 입법예고 법령

### 1. 정책추진기반확립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14.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이유
  -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및 IT 총괄기능 수행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고,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심의 및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 추진의 조정 등 국가정보화 총괄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
  -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방부 공고)

○ 제정이유

- 이 시행령은 효율적인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5호, '10. 2. 4.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함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운영 절차를 정함
- 국방정보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절차를 규정
- 국방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운영 절차 마련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허가절차를 정함
- 국방정보자원 활용 및 관리절차 마련
-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운영 및 협력체계 마련
-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전략 마련
- 국방정보화 평가체계 마련
-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절차 마련
-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의 운영절차를 정함

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17.  
기획재정부 공고)

○ 개정 주요이유

- FTA, 다자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예산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관리협력관 등을 신설하며,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19명(고위공무원 나등급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증원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정관리협력관 신설 (안 제6조2 신설)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별도정원 운영)의 정규 직제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유지·운영 업무와 동 시스템을 활용한 주요 국가재정사업 집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차관 직속재정관리협력관 신설(제6조의2)
  - 재정관리협력관 밑에 재정정보기획담당관 및 재정시스템담당관을 신설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신설 (안 제5장 제23조)
  - FTA의 지속적·동시다발적 추진에 따라 FTA 체결지원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국내대책기능 수행이 필요
  - DDA 협상 등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의 국내 대책 총괄 수행이 필요
  - FTA, 다자 및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무역협정국내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존속기간 2년 6월)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6개 팀(총괄기획팀·교육홍보팀·조사분석팀·국내대책팀·산업지원팀 및 협력조정팀)을 신설
- 예산관리과 신설 (안 제10조⑦항)
  -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 규정, 국제재정협력, 예산홍보 등 증가되는 예산 협력업무의 효율적 관리
  - 예산제도과에 중요도가 증가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예산홍보 업무를 분리하여 예산총괄심의관 밑에 예산관리과를 신설
  - 예산홍보 등과 더불어 보조금 집행관리, 예산배정·관리 및 국제 재정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
- 예산실 및 재정정책국 기능 조정 (안 제10조, 제15조)
  -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의 일부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위험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책기능 강화
  - 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 폐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신설 : 재정사업평가과 업무중 총사업비관리 업무를 예산실로 이관하여 예산편성 연계강화(제10조16항),

기타업무는 성과관리과로 이관(제15조⑥항)

- 재정정책국 재정분석과를 폐지, 재정평가과 신설 : 재정분석과 업무중 재정분석 기능은 재정정책과로 이관(제15조①항), 기타 심층평가, 재정제도개선 및 부담금 평가 반영은 재정평가과로 이관(제15조⑤항)
-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신설 :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를 재정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을 일원화(제15조⑧항)

-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 (안 별표1, 별표1의2, 별표3)

- 재정관리협력관 등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19명 증원 (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명)
- 본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6·7급 전산직 정원의 현실화 반영
-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협정국내대책본부의 정원 조정 (계약직 △1명 감축 → 5급 행정사무관 +1명)

## 2. 정보통신기반구축

###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 7. 1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 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0.9.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 ○ 주요내용

-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 콘텐츠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 방송통신콘텐츠의 법·제도 개선, 공정거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인력양성, 장비·시설, 해외진출 등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방송통신광고의 법·제도개선, 운영·편성·판매·진흥·균형발전,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회 위원장을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통위 위원으로 하고 임기 2년 규정
  - (방송사 분담금)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되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규정
  - (분담금 경감)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경감,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
- 기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 연구활동 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화, 방송통신재난관리 등의 사항을 기존 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등)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 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2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10. 9. 23)에 대비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설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근거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용어 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통령령제명을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전기통신설비 등 용어를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 정의의 현행화 및 근거 규정 정비 등
    -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변경
    -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변경
    -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로 변경
    -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변경

-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변경
-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변경
- “전기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로 변경
- 용어의 현행화
- 기술기준 근거 법령 정비

**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4. 소방방재청 공고)**

○ 개정이유

- 내수면 운항 유·도선의 통신두절 및 안전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신속한 구조대 접근 및 수색활동을 위해 유선 및 도선에 위치추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의 형식적인 안전의무 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있어 이용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출항 전 유선 및 도선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내수면 2해리이상 및 추진기관이 설치된 2해리 미만 야간운항 유선 및 도선에 위성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 탑재 휴대전화 설치 의무화
- 유선 및 도선 승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개선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1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 이유

-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관한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를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 완화
  - 현행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공사업체 등록기준 완화 근거 마련
  - 공사업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3년 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위반사례가 없는 건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
  -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 사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인력 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부여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에 따라 현행 국가사무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업무정지·인정취소 등의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
  -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
- ‘정보통신공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규정 마련
  - 정보통신공사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품셈·적산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고, 협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
  - 과거 공사업자에 대한 종합 정보를 별도 인쇄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최근 온라인 공개에 따라 수수료 면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른 문구조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현행화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9. 방송통신위원회)

##### ○ 개정 이유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 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를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인정신청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병적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 온라인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신고 기준일 정비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신고 기준일을 공고이후 법인등기일 기준으로 정비
- 전문대의 이수기간별(2년제, 3년제) 차이 불인정 개선
  - 전문대 이수기간(2년제, 3년제)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경력기준을 적용(초급기술자·감리원: 5년)하였으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경력기준을 1년 감면(5년→4년)
-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을 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1개월)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2차 영업정지 처분(3개월) 및 ‘등록취소’ 근거 규정 신설
  - 전기 및 소방공사업 등 유사업종에 비해 과태료가 과도한 경우, 고의성 여부,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정보통신 공사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항목인 보유기술인력의 근무기간을 기존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하여 공사업체의 부담경감
-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10.3.22), 「건축법 시행령」개정(09.7.16)에 따른 문구 및

## 조문 정리

- “법인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됨에 따른 문구조정

## 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0.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 개정이유

-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검사를 허용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를 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적합성평가제도로 개편하는 등 전파법(법률 제10393호, '10.7.2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
  - 주파수 경매시 헐값 낙찰 방지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특성,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 할당대상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주파수 이용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 주파수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심사방식에 의해 대가할당하는 경우 할당하려는 주파수와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경매에 의하여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대가를 고려하여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
  - 개정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 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하고 그 배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금은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배분되던 양 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 허가를 받아 개설하던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중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보조국 및 지하·터널 내에 설치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 신고제 전환대상으로 함
-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명칭, 출력 및 허가유효기간 정비

- 소규모 지역밀착형 비영리 방송국인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상의 명칭, 공중선 전력 및 허가유효기간이 방송법과 달라 방송법과 동일하게 이를 정비함
- 명칭을 “소출력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공중선전력은 1W이하에서 10W이하로,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무선국 표본검사 대상·비율 등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준공검사를 표본검사로 할 수 있는 무선국은 모 기지국 등으로부터 통신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 받아 단순히 중계기능만 수행하여 전파 혼·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으로 함
  - 표본검사 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며, 불합격율이 표본의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 홍수 예·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이 재난·긴급 상황에서도 성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전파법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를 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적합성 평가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절차, 잠정인증 신청, 적합성 평가의 변경·면제·취소 절차,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심사·변경·검사·양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사항, 전문심사기구의 요건,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 환경친화무선국 설치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함
-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가입자 단가 신설
  -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수에 가입자별 단가를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하여도 가입자 단가를 신설하여 가입자 기반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체계와 일원화 함

-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가입자별 단가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수준과 유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가입자별 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500원, 데이터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는 80원으로 단가를 정함
-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 과태료 부과, 무선국 운영정지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재차, 삼차 반복되는 경우의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무선국 수의 범위(1~5, 6~10, 11국 이상)를 기준으로 구분한 과태료 금액을 무선국 1국당 과태료 금액으로 변경하여 위반 무선국 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 타
  - 그 밖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파법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

### 3. 정보통신기반확보

### 4. 전자정부실현

#### 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7. 고용노동부 공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소개소 내부 부착의무 있는 요금표 및 직원 명단의 규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사자의 사진을 포함한 명단을 직업소개소 내부에 부착하는 대신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 현재 구인 신청시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구인 신청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 지자체가 취업알선시 구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취업서비스 이력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직표 서식에 구직자의 워크넷 상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난을 추가하며,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변경신고 처리기간을 통일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5호)상 단축된 사무처리기간을 각종 신청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0. 7. 8.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 이유
  -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의 국내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정비
    -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간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등록증에 성별, 생년월일을 추가로 수록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신청에 의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유효기간을 수록하여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증의 기능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7. 13. 농림식품수산부 공고)

- 개정이유
  -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 및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종자산업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32호, 2010. 5. 3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증받은 맥류 및 콩 종자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보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 보완
  - 개정법률에서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함(법 제9조의2부터 법 제9조의4)에 따라 세부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의 이용신고 및 서명방법, 제출방법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서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완함
  -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
-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시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 식물방역법상의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가 품종보호출원이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품종보호출원 또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시 출원인 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식물방역법상의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수입 금지지역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종자가 출원이나 신고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큰 병해충의 유입 방지
- 종자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설정 및 맥류·콩 종자에 대한 보증 유효기간 단축
  - 품목(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설정되어 있으나 동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맥류(보리, 밀, 청보리 등)·콩 종자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따라 발아율 저하 등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음에도 기타 종자의 유효기간(1년)으로 정하고 있음
  - 보증의 유효기간을 포장일자로부터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맥류·콩 종자의 유효기간을 기타 종자(1년)로부터 분리하여 6개월로 새롭게 정함
  - 보증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맥류·콩 종자의 보증 유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품질 좋은 종자 유통 기대

- 유통종자 표시단위의 보완(안 제121조제1항제2호 개정)
  - 현행 유통종자의 표시단위가 ‘종자의 수량’으로 되어있어 고체인 종자를 부피단위(ml, dl, ℓ 등)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재배농업인과 수량 부족 문제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종자의 수량’을 ‘종자의 무게 또는 립수로 개정함
  - 유통종자의 표시단위를 무게 또는 립수로 개정하여 종자 수량으로 인한 종자업체와 재배농업 인간의 갈등 해소 기대

##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

### ○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법원·경찰·법무부와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의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관련 신청서와 청구서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정들을 정비하여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문구 등을 개선하고, 상고사건 접수보고 시 첨부하는 1, 2심 판결문을 집행지휘 대상사건에 대하여만 심급별 판결문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식을 개선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에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에 의해 전자적으로 수리하는 내용의 전자약식사건 수리절차를 신설(안 제3조의2)
- 사건수리 전산입력절차 및 전자약식사건의 사건번호 특칙 규정 신설
  - 경찰로부터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사건 송치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수리시 전산입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의 사건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 경찰과 수사지휘 및 영장 관련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또는 정비
  -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신청서와 영장 청구서(또는 영장기각결정서)의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제·개정함
  - 사법경찰관이 분리서식에 의해 수사지휘 또는 영장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수사지휘서, 영장청구서(또는 영장기각결정서)에 의해 수사지휘 및 영장 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 신규로 제정되는 분리서식과의 통일성을 위해 검찰이 법원·법무부에 직접 청구 또는 통보하는 서식을 분리서식에 맞춰 개정함
- 서면에 의한 통보·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간이한 통보·통지 방식으로 전화, 모사전송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을 추가
-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제출 규정 신설
  -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함
  - 진술서 기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
  -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경우 문서작성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는 전자서명을 하게 하도록 규정함
  - 검사는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 전자화대상문서의 관리 및 폐기 규정 신설
  - 검사 및 검찰사무관 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해당 전자화 대상문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경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받은 경우 및 재산형등 집행사무담당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송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에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함

-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시까지 보관하고, 기록폐기시 전자화대상문서를 폐기하도록 규정함
-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이 일반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검사실로 인계하고, 관련사항을 전자화대상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의 통상절차로의 전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4)
  - 사건을 병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을 통상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년 형제 ○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검사 및 검찰사무관 등은 전자약식사건을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함
- 검사가 경찰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사건을 직접 처리 시 처리결과통보서를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이를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온라인으로 송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전자약식사건에 대한 출력문서 송부 절차 신설
  - 검사는 전자약식법 제10조에 의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 전자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공소장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약식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별지 제122호의2서식 신설)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 기소유예 결정시 또는 인지사건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구두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72조제1항)

- 내사·진정사건 수리시 표지양식 제정 및 수리절차 규정 개정
  - 내사·진정사건 수리시 표지 양식을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내사·진정사건 수리절차 규정 개정(안 제142조, 별지 제202호의2, 별지 제204호의2서식 신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에 의해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의 집행 사실 통지와 처리결과 통보 조항 신설
- 조서에 대한 이의나 이유 유무 확인과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문구 등을 개선
- 상고사건 접수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에 관한 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3호 서식을 집행지휘 대상 판결문만 첨부하도록 서식 개정
-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양식의 모호함 때문에 임의제출된 압수물에 관하여 사후 영장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긴급압수수색의 경우 조문별로 영장청구 시한이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사후 영장을 신청(청구)함으로써 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에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마.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

-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 및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의 보존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및 폐기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약식사건기록 보존절차 규정 신설

- 전자약식사건기록은 시스템에 전자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함
-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에 확정연월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고, 확정된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보존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규정 신설
  -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문은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일부로서 관리하되, 약식명령문만의 검색·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 규정 신설
  - 전자약식사건기록의 대출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 및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되, 수사·재판중인 경우에는 주임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
  -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
  - 다른 청의 전자약식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 전자약식사건기록 보관청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절차 특칙 규정 추가
  - 전자약식사건기록의 폐기는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함

#### 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0. 7. 23. 법무부 공고)

##### ○ 개정이유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 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방법 및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규정 신설

-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열람·등사신청 대상을 특정시키기 위해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가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함
-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 전자문서의 등본·초본 인증방식 규정 추가(안 제6조)
  -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로 등본·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초본 문서에 동일 취지의 내용과 전자관인이 전자적으로 현출되어 출력되도록 하여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자문서의 등본·초본 등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8조의 2)
  - 전자문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2. 지식경제부 공고)

- 제안이유
  - 개정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이원화(탐사권·채굴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계속작업권제도, 지정광구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미비한 등록사무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광업등록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광업원부를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로 분리·운영
    - 광업탐사원부와 광업채굴원부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
  - 광업관련 법령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계속작업권제도 관련 규정 및 구 광업법에서 폐지한 지정광구제도 관련 조항 삭제
- 등록사무 중 미비한 법적 근거조항 마련
  - 등록접수부의 접수번호를 1년마다 새로 부여
  - 채굴권설정 등록시 탐사권의 직권소멸 등록
  - 추가저당권설정등록 신청서에 전저당권의 목적이 된 채굴권의 등록번호와 광구소재지 기재
  - 전산광업원부의 서식 신설 (탐사권,채굴권,조광권 전산원부)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말소 방법 신설 (전산광업원부의 등본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함에 있어서 말소와 관계되는 사항에 실선을 그어 말소의 취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함)

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0. 농림수산물식품부 공고)

○ 제안이유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11호, 2010. 5. 25. 공포, 2010. 12.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출생 등 신고기한 및 귀표부착기한 단축
  - 생후 5 ~ 7일 만에 중간상인을 통해 전문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육우 초유떼기 거래 관행상 신속한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이 필요하나, 소 출생 등 신고기한 및 귀표 부착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어,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등록소의 거래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 질병발생시 이력시스템을 통해 소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방법과 절차 및 통보
  - 쇠고기 수입업자는 쇠고기의 효율적인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하 “수입이력시스템”으로 한다)에 의하도록 함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해를 높이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거래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하여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 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고의 기한 및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거래 신고의 기한 및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되고 자료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하증권번호,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 검사장소 및 입고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일자, 냉장제품 냉동전환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원활히 시행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교부 대상자 지정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소비자까지 교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비자까지 교부토록 하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교부대상을 한정하여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쇠고기 판매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에게 교부토록 함
- 거래명세서 교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입쇠고기 유통영업자의 경영상 인적·물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운영의 공적인 목적성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 등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함
-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이력추적이 용이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이력시스템의 구축 등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거래신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력추적이 용이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등

-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을 하여 문제발생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부여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인증부여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 장관이 정하도록 함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업소를 인증함으로써 위해쇠고기 발생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됨

#### 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

- 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납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온라인 납부체계 전환에 따른 고지서 등 각종 서식 변경
    - 납세고지서는 OCR 처리 기능과 영수증 기능을 폐지하고 과세통지 기능만 갖춘 납부안내문 성격으로 변경
    - 신고분 납부서는 OCR 처리 기능을 폐지하고 납세자에게 신고한 내역을 확인토록 한 후 납부세액 등을 안내하는 '신고확인 및 납부안내서'로 변경

#### 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

- 제정이유
  -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납부방식을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조회 납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분 납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일부 변경함
  - 지방세를 수납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일부 대리점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용어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통일함
  -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 카.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11. 행정안전부 공고)

##### ○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의 정지·폐지 등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의 종류와 이용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규정 명확화
  - 현재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을 갖는 다고 규정(제3조제3항)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효력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관한 효력을 명확히(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까지 확대) 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효율화 촉진
  - 또한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명, 서명날인 등의 효력을 갖도록 함.
-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확인 절차 강화
  -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즉시 해당 공인인증서는 폐지되어야 하나, 공인인증기관이 사망(실종선고) 또는 법인의 해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인인증기관이 인지한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개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 신분변동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전산정보자료를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
-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정지·폐지여부 실시간 확인 의무화
  - 공인인증서서비스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정지 또는 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나 대부분의 이용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범죄악용 우려 및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 왔음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업체)은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범죄악용을 예방하고자 함.
- 공인인증업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자만 부담하던 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업체 등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인인증업무 수수료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함

- 새로운 전자거래환경 수용을 위한 공인인증 서비스 확대

- 공인인증서의 종류, 이용대상, 이용범위 또는 용도 등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서명기술 및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히 공인인증서 종류를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IT기기간 충돌을 예방

-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

- 공인인증기관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업무영역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
- 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및 갱신지정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갱신지정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1. 국토해양부 공고)

### ○ 개정이유

-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등

주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신개발품 등의 시장 진출 시기를 조기화하기 위해 별도의 인정기준 적용 방법을 도입하며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보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도록 하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촬영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신개발품 등에 대한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준 적용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인정규격 이외 제품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등급 등의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성능등급 등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 절차
  -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인정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제·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파.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개정이유

- 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 2010-2호, 2010. 2. 8)에 의거 전자(인터넷)로 발급받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민원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처리 온라인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제4조)에 '전자(인터넷) 민원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신설

#### 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9. 2. 행정안전부 공고)

##### ○ 개정이유

-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면접시험의 실시방법 및 평정요소 등을 정비하고, 시험요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험 응시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현행 법령체계와 맞지 않는 면접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6조)
  -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면접점수 부여 대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변경
  - “용모” 등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평정요소 삭제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정비
- 시험위원 수 정비(안 §7조)
  - 필기시험위원수를 2인에서 5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면접시험위원수와 동일하게 2명이상으로 통일
- 시험요구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2조, 별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인사기록카드 등은 전자적 인사기록관리에 맞게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구비서류인 호적등본 삭제 등
- 시험요구시의 별지서식 정비
  -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공문규정에 맞게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4호)
  -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인사랑)을 통해 제출 가능한 서식 삭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2)

#### 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토해양부 공고)

##### ○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 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등의 반납 처리를 발급한 등록관청에 상관없이 처리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허가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반납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처리를 등록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8.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을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수료 부과조정 및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 자동차 등록사무를 신청·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조정 및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행정소요비용의 발생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
  -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함



**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1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개정이유

-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
  - “소년원법 시행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함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함
- 검정고시 일부 고시 과목 면제 대상 확대
  - 평가인정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합격자 게시 방법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함

**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1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 개정이유

-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타부처 법령 개정을 반영
  - “소년원법 시행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함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함

- 검정고시 일부 고시 과목 면제 대상 확대

- 평가인정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습경험을 검정고시 일부 과목 면제로 인정하여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합격자 게시 방법 등 기타 사항을 규정함

#### **4.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26. 해양경찰청 공고)**

##### ○ 제안 이유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296호, 2009. 4. 1 시행)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145호, 2010. 3.22 시행)의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징계기록 말소기간의 보완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므로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강등에 따른 기록말소기간을 9년으로 함
- ‘강등’은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정직의 징계기록 말소기간보다 일정기간을 더함으로써 ‘강등’을 신설한 취지에 부합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인사관리 운영이 기대됨

- 시간제근무 시행을 위한 규정 및 서식 정비

- 관련법 제명과 조항 변경 따른 해당규정 및 서식 정비

- 전자정부법 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및 서식에 반영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이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으로의 법제 변경사항 반영

#### 버.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2. 경찰청 공고)

##### ○ 개정이유

- 학력주의 극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채용 조건의 학력제한을 완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과목 및 시험별 배점 비율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함.
- 현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이루어진 고시 특채자의 채용시험방법에 서류전형을 추가함.
- 채용시험 과목에서 “수사”를 폐지하고 “한국사”를 도입하는 등 일부 과목을 변경하며, 「영어」 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경찰관이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필기시험 비중을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체력검사 비중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함.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
- 응시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하에 채용심사관을 설치·운영함

#### 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6.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 ○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이 시행(법률

제10012호, 2010.2.4. 전부개정, 2010.5.5.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징구하고 있는 첨부서류 삭제 등을 보완하고, 그동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조업체 등의 각종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약사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코자 함
- 제조업체 등의 변경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함

-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미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의 관리 강화

-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고시되기 전까지 동물용의약품이 국내 시판·사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코자 함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자격 완화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현행 의사·수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서 의사·수의사·약사 및 4년제 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사,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개정코자 함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삭제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규정을 삭제코자 함
- 법인인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본평가액 1억원 이상의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코자 함

- 동물용의료기기의 허가 및 신고절차 등 개선

- 동물용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등급분류·지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설코자 함
-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을 신설코자 함

- 그 밖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동물용의약품의 제형에 ‘펠릿제’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함
  - 수입품목 허가대상 제외 품목인 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을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허가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삭제코자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에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업무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 제조업자·수입자가 회수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등급에 따라 회수계획 등을 공고토록 신설코자 함
  -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영양보조제 등의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의 표시사항을 신설코자 함
  -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함
  - 처분의 감면 기준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문 또는 처분의 사전통지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코자 함
  - 동물용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신설코자 함

**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22.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호주제 폐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향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기관으로 규정되었음

- 그러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수행상 비효율 초래
- 이에 따라,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 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함
- 등록 자본금 인하 결정
  -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으로 등록자본금이 인하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법인 5억원 → 3억원, 개인 10억원 → 6억원)
-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
  -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예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법무사 및 세무사가 추가됨
  - 법무사 및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경력기준을 규정함
-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규정
  -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에 혼선이 있음
  - 따라서, 자본금의 변경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 현행제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 따라서, 공시성 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생략하는 등의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서식 개정
    - 현행제도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음
    -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제 관련 용어를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폐지
    -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한

## 사항을 폐지

- 외국인 등록번호 관련서식 정비
  -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음
  - 따라서,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 집합투자업자 관련서식 정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자산운용회사'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관련서식상 용어 정리
- 사업실적 보고 서식 정비
  - 현행제도는 사업비, 매출액, 사업면적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어 민원불편 및 혼선
  - 따라서,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

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 개정이유

- 온라인 홍보환경의 변화, 대민 서비스기관인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온라인 홍보업무 통합 및 온라인 홍보협력과 신설, 정부발표지원과 폐지 및 타과로 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 한국예술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과' 통폐합 및 명칭변경
- 국립국악원 전속단원 인사를 기획관리과→장악과로 변경

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7. 행정안전부 공고)

○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등 열람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개임용 및 특별임용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문 정비
  - 전자정부법 의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조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조문 변경(10. 2. 4.) 정비
- 지방공무원 선서문 개정사항 반영
  -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선서문 내용과 동일하게 선서문의 내용을 권위적·형식적 표현에서 현대적·선언적 표현으로 순화

커. 향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2. 9. 국토해양부 공고)

○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과 '10년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을 반영하고,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서식설계기준 개선 등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정부법」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번호 및 별지 서식 변경 등
  - “제2조제7호”를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첨부서류 변경 및 공시성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절차 삭제



-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대상 관련조문 삭제 및 별지 서식 변경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
  - 새로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 전부 변경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 개정취지
  -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거래기록의 복사 거부를 인정하여 법률 간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며,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타법개정사항 반영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법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률 정합성을 제고
  -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거래기록의 복사 거부 허용
    - 거래기록 중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복사 청구에 대하여 거부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 현행 1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범위를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 적용

###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1. 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 개정취지

- 소비자가 쉽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사이트 연결 의무 신설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
- 통신판매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로 개정
  - 공시성 정보인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처리 가능하므로 서식상의 제출요구 관련 문구 삭제
  -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 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구 추가

**다.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2. 27. 지식경제부 공고)**

○ 개정 이유

- 현행법의 조문 구성을 체계화하고, 법률 내용 중 상당부분 차지하는 전자문서관련 사항을 법률 제명에 반영하며, 전자문서 사용 확대를 위해 전자화문서 원본효력 인정과 고유한 식별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 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와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변경하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제도 도용시 벌칙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변경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
  - 법 내용 중 상당부분 차지하는 전자문서 관련 부분이 법률명에 나타나지 않아 동법이 전자거래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제명 변경을 통해 법률이 전자거래와 전자문서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기대됨

- 전자화문서 원본효력 인정 및 작성자 확인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무결성을 갖출 경우, 전자화문서의 원본 동일성을 인정하려는 것임
  - 전자화문서 원본 인정을 통해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 이중보관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종이문서 유통·보관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됨
  - 또한 고유한 식별정보(생체인식 등)를 통하여 작성자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 (안 제26조 내지 제41조)
  - 전자문서의 유통(예, 전자고지서)과 열람(예, 전자진단서)이 확대되도록 “공인센터” 기반 전자문서 유통/열람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전환을 통해 민간부문간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부문간 전자문서 유통·연계 강화가 기대됨
-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신설 (안 제42조 내지 제51조)
  - 각종 고지서, 문서 내용증명 등에 대한 송수신 확인·부인방지·보안유지 등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사서함)”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 송·수신의 정확성이 담보되고 암호화 기능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문서 유통기반 확보가 가능함
  - 또한 졸업·성적, 입·퇴원 등 각종 증빙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전자거래의 안정성 강화 (안 제69조, 제82조)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 분쟁 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을 통한 조정조서의 효력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 of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음
  - 또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e-Trust) 인증” 도용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증도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기타 조문의 정비
  - 삭제된 조항과 가지조문을 정비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조문을 묶어 새로운 장을

구성(3장)하는 등 조문을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조문 구성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비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6. 정보통신산업육성

### 가. 이러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7. 7. 지식경제부 공고)

#### ○ 개정이유

- 그간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초기 이러닝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닝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자 위주의 산업육성 측면에서 규정되어 교육기관의 이러닝 확산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및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시책을 발전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분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법률의 제명 및 ‘이러닝산업’의 개념 등 재정립
  - 이러닝 산업의 육성외에도 교육적 활용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의 명칭을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이러닝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기기의 연구·제작업을 포함하는 등 이러닝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 이러닝 관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인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이러닝활성화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이러닝 관련 각 부처의 차관 및 민간 이러닝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이러닝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이러닝 산업발전 및 활성화 정책의 총괄·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 교육기관 전반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지원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및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 콘텐츠,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해결 시책 수립 등
  - 이러닝 콘텐츠 등 이러닝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함.
  - 이러닝 제작 및 활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 이러닝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닝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규정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환불조건과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마련을 권고할 수 있으며, 상당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시하고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러닝 분쟁조정의 처리
  - 다양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닝 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일관성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이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7. 9.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개인위치정보를 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명확화
-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신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즉시 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
-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 정비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
-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 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안 제42조)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을 완화(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0. 7. 16. 지식경제부 공고)

○ 제정 취지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저렴한 요금, 전기공급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수용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특히, 신 재생에너지의 확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소비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하여 국가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력 IT 융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여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술개발, 실증단지,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안정성이 부재하여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현행 법 제도는 발전, 송 배전, 판매 등 전력 분야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력 IT 등 산업간 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육성 촉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안정적 체계적인 구축 및 이용촉진,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산업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지능형전력망의 정의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능형전력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함.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실행계획, 정책조정, 성과관리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 기반 조성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성장시책 강구, 설비 기기 등 시기별 단계별 전환 계획의 수립 시행, 통계의 작성 관리, 정보의 활용 확산 환경의 조성, 관련 규제 개선,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견의 수렴 반영 절차 마련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교육과정의 개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위하여 관련 제품 및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금융상의 지원,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선도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 보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 실증단지 및 거점지구의 조성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하여 실증단지 조성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구축·이용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은 실증단지 또는 거점지구의 지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상의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단지 또는 거점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정책 및 사업의 조정, 실증단지 및 거점지구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를 설립함.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활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유형별·분야별 통계정보 및 공급단계별 통계정보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약관의 제정·시행,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 청구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명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또는 처리 하여서는 안됨.
-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지능형전력망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타 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능형전력망 및 정보 보호, 상호운용성 확보 및 침해행위 금지

-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정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기술표준의 제정 시행, 정보의 생산 유통표준의 제정 시행 등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능형전력망 제품의 공용화, 지능형전력망정보의 공동활용 등의 상호협력을 권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지능형전력망에의 침입, 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유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칙

-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시범지구 또는 거점지구 지정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2조).

- 벌칙

- 정당한 접근권한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5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을 훼손 멸실 변경한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한자, 지능형전력망의 장래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에 관한 정정 및 삭제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제37조).

**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 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 새로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콘텐츠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콘텐츠의 제작 지원
  -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공개하고,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 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
  -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 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0. 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개정이유
  -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 새로 개정된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제출 하여야할 지정 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 거래사실인증 사업의 추진과 관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정관 및 거래사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서 교부 서식을 정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함.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0. 12. 국토해양부 공고)

##### ○ 제안이유

-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최근 분양가 상승논란과 관련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산업 활성화 시책의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 이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이용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기반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유비쿼터스도시정보 활용의 기반 마련
  - 유비쿼터스도시의 확산에 따라 정보의 제공·유통의 산업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용 수수료를 부과 등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비쿼터스도시정보 및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사업자를 정의하여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근거를 마련함.
- 유비쿼터스도시정보 산업화 기반 조성
  -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역할과 의무 및 정보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
  - 유비쿼터스도시 기술, 정보 및 서비스 개발의 촉진 및 지자체의 수익마련을 위하여 현장 시험단지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재원 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유비쿼터스도시정보의 수집 및 활용장치를 교통·통신 등의 설비와 통합한 통합 지능화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공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유비쿼터스도시의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함
  -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확대(도지사 포함) 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권한을 일원화 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
  -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서비스 분야 및 에너지·환경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8. 3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접권자의 권리 추정 및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규정 신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각각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시 권리자 입증의 용이해지는 등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 부여
    - 이에 방송에 대한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고 공연할 경우에 한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8. 정보보호 및 보안

###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 9. 24. 금융위원회 공고)

- 개정이유
  -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증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추고,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국내외간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감독·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법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합리화하고, 전신 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중 성명·계좌번호 이외에도 실명번호 또는 주소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며,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근거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제재수단이 협소하고 경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또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재 운용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가·허가·신고 등을 담당하는 소관행정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를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 등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6개월이내의 정직·감봉·견책·주의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처분대상에 포함시킴.
-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독·검사자의 감독·검사시 금융정보요구권을 명확화

-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의심거래의 감독·검사시 검사자의 금융정보요구 권한이 불명확하고,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외환거래검사와 대비하여 감독·검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 감독·검사자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전제로 감독·검사가 감독·검사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정보와 혐의거래보고서 등을 비교·대조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 신설

- 현행 법률은 수취금융회사가 전신환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법재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시 송금자의 실명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은행에서 한 계좌로 분산송금한 경우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 완전한 송금자정보(성명·계좌번호·실명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도록 함.
  -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신송금시 수취금융회사가 불법재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대상 확대
-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업무, 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검사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검사자를 추가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
- 제공정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처리결과 회신근거 마련
- 자금세탁 동향 파악, 심사분석기법 개발, 통계관리 등을 위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자금세탁의심거래 정보의 처리결과를 업무협조로서 받아오고 있음.
  - 법집행기관이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명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근거 마련
-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임명, 보고체계수립, 교육·연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밖에 자금세탁관련 직무수행기준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에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를 포함
-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의 경우도 자금세탁범죄를 시도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혐의거래보고대상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함.

## 9. 정보통신윤리

# 제5절 국외 정보화 법제도

## 1. 정책추진기반확립

### 가. EU, 2011년 ICT 프로젝트에 12억 유로 배정(EC, 2010. 7. 20.)

- 유럽위원회(EC)는 2011년에 착수될 12억 규모의 ICT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 요청을 정식으로 공표
  -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에 따라 ICT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하고 제안 요청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배분
- 2011년 ICT 프로그램은 10개의 제안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의 2020년 정보화 전략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성장 달성을 위한 3개의 파트너십에 관한 핵심 프로젝트 내용 포함
  - 주요 파트너십은 에너지 효율성 높은 건물 구축을 위한 ICT, 전기 자동차 발명을 위한 ICT, 미래 공장을 위한 ICT 등이 있으며, 새롭게
- 유럽의 ICT 프로그램은 유럽의 기초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획기적이고 야심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성장 촉진을 돕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포토닉스, 임베디드 시스템, 헬스 및 고령화 관련 ICT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

- 또한, 시장 실패로 투자가 위험한 분야에 집중하여 민간 지출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지원 보장과 범유럽 차원의 우수 인력간 협업을 촉진

#### 나. EU, 미국 FCC, 망중립성 법안 통과 후 허용 논란 (CNET, 2010. 12. 23.)

- 미국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찬반표결 끝에 2010. 12. 15. 통과
  -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서도 찬성과 반대 측에서 논란 가중
    - 모든 웹사이트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규제
- 주요 내용
  - 망중립성 법안 승인 개요
    - 미국의 컴캐스트(Comcast), AT&T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상관없이 모든 인터넷 망사용에 대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 FCC의 찬반 투표가 FCC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찬성 3표, 공화당의 반대 2표로 망중립성 허용
- 이번 망중립성 입법안의 통과는 망중립성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 찬성의견
    - 망중립성을 찬성한 민주당은 소비자의 권익과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문제삼아 망중립성을 지지
    - 모바일 인터넷 분야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른 과금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불만 표시
    - 찬성측은 FCC가 기업입장에서 공화당과 ISP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중요한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망중립성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FCC를 비난
  - 반대의견
    - 망중립성을 반대해온 공화당은 망중립성으로 인해 ISP나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 ○ 전망

-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변화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이며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망중립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나 규제가 계속될 전망

## 2. 정보통신기반구축

### 가. EU, 미래 인터넷 연구에 9,000만 유로 투자 (EC, 2010. 7. 20.)

- 유럽위원회(EC)는 시민, 기업, 정부의 요구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미래 인터넷 민관 파트너십(Future Internet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따라, 미래 인터넷 연구에 9,000만 유로를 할당
- 모든 ICT 부문의 연구자들은 2011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지원 신청 가능

#### ◆ '미래 인터넷 민관 파트너십'의 주요내용

##### ▷ 목적

- 연구와 혁신, 기술 공급과 사용자 수요 간 격차를 좁히는 것
- 1단계 : 근본적인 기술 통합, 사용사례 시나리오 도출
- 2단계 : 미래 인터넷 주요 플랫폼, 대규모 실험 및 시범사업 실시
- 3단계 :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대규모 실험 범위를 확대

##### ▷ 연구 분야

- 보건 시스템, 에너지 그리드 또는 교통 관리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에 초점

##### ▷ 예산

- 2011~2013년에 수행할 EU 제 7차 공동연구프로그램(FP7)의 3억 유로 예산 중 일부인 9,000만 유로의 자금을 2011년에 지원하고, 추가 2억 1,000만 유로는 2012~2013년에 지원

- EC는 유럽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에 따라 2013년까지 ICT 연구 예산을 매년 꾸준히 늘리기 위해 노력

▷ 미래 인터넷 관련 기존 EU 연구 사례

- 스마트 산탄데르(Smart Santander, 스페인) : 도시 산탄데르는 텔레포니카(Telefonica)사와 협력해서 스마트 도시를 위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시 규모의 실험 연구 시설인 '스마트 산탄데르'를 구축
- 스마트터치(SmartTouch) 프로젝트(핀란드) : 약 10cm 거리의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기술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시험하는 EU의 최대 프로젝트
- 차세대 혁신 도시 ICiNG : 시민의 모바일 장치를 위한 환경 센서와 상호작용 지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공공 서비스의 응답시간을 단축

나. 영국,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 혁신 주도 (publictechnology, 2010. 7. 28.)

- 영국 정부는 차세대 모바일 기술 인프라 혁신을 위한 계획을 발표(2010.7)
  - (추진 배경) 아이패드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혁신 필요
  - (추진 목표) 모바일 산업 발전을 통한 21세기 인프라 구축 및 시민들에게 최신 기술과 경제적 혜택 제공

◆ 차세대 인프라 혁신 계획의 주요 내용

▷ 라디오 스펙트럼 현대화 프로그램

- 모바일 브로드밴드 운영자들이 광대역 초고속 연결을 할 수 있는 2.6GHz 대역과 800MHz대역의 통합 경매 시행
- 잠재적인 새로운 고객을 고려한 미래의 3G와 4G 시장의 경쟁력 평가
  - 영국 시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경쟁력 있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전달을 위한 경매를 위한 정보 제공

- 2G 주파수(900MHz 및 1800MHz) 개방 및 EU의 GSM(세계 무선 통신 시스템, 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s) 디렉티브\* 수정안 이행(1987년 디렉티브는 2G 주파수 활용과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2009년 개정된 디렉티브는 3G 주파수 대역과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관한 개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침 추가)

- 모바일 브로드밴드 운영자들이 3G 기술을 위한 주파수 대역 활용이 수월

- 3G 기술에 보다 많은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무기한 3G 라이선스 배포
  - 오프콤은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초기 라이선스 기간 이후 적용될 이번 라이선스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간 라이선스 비용 부과

▷ PMSE 보상 정책

- 800MHz 대역 밖의 PMSE(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s)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 마련
  - PMSE 기업은 2012년부터 채널 69(800MHz)를 포함한 채널 38 주파수에 필요한 장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다. 미국, 슈퍼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줄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 승인 (FCC, 2010. 9. 24.)**

-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 용도로 빠른 속도와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s : TV 채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워둔 300~400MHz 대역폭으로 와이파이 주파수(2.4GHz)보다 건물 투과율과 도달성이 뛰어난 대역폭 구간)’ 개방을 승인하고 주파수 간섭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 FCC는 2008년 11월에 화이트 스페이스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나 방송사들이 주파수 간섭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개방이 무산
  - 화이트 스페이스의 승인을 통해서 브로드밴드 시장의 활성화와 고품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주요 내용

- ▷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 FCC는 향후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으로 인해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주파수의 사용이 방송전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 예정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바일기기의 주파수를 분리시켜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가능
  - 화이트 스페이스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 있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로폰을 위해 2개의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제안
  - ※ 2차 각서 의견 및 명령(Second MO&O)에서는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을 통해 벌어질 법적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 제시
- ▷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을 통한 이점
  - FCC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화이트 스페이스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 화이트 스페이스의 장점인 높은 도달성과 건물 투과율로 인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무선인터넷 환경조성
  - 와이파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라. 미국, 2012년까지 인터넷주소체계 IPv6로 전환 (OMB, 2010. 9. 28.; GCN, 2010. 9. 15.)

- 미국 연방 최고정보책임자(CIO) 비벡 쿤드라(Vivek Kundra)는 모든 정부기관에 2012년 9월까지 인터넷주소체계를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IPv6)’로 전환하라고 지시(2010.9)
  - 연방정부의 IPv6 채택 촉진을 위해 관리예산처(OMB)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와 협력하여 IPv6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추진할 예정
-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 인터넷 상의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32비트 주소체계) 주소는 현재 6%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240일 내에 소진될 것임에 따라 웹사이트, 이메일, DNS 서비스, 내부 PC와 서버 등에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 128비트 주소체계로

최대 1조개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 특징)로 전환할 계획

- 기존의 IPv4는 최대 43억 개의 주소를 생성하였으나, IPv6는 2128개 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보안성 우수

#### ◆ 미국 정부의 IPv6로의 전환계획

##### ▷ 추진일정 및 계획

- 2010년 10월
  - 정부기관의 IPv6 전환에 대한 총 책임자인 'IPv6 전환 관리자(IPv6 Transition Manager)'를 지명하여, 그 이름과 직함 및 연락처 정보를 IPv6@omb.eop.gov로 제출
- 2012년 9월
  - 외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버와 서비스(웹사이트, 이메일, DNS 및 ISP 서비스 등)를 업그레이드하여 IPv6로 전환
  - 정부기관들은 당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IPv4 혼용 가능
- 2014년 9월
  - 공공 인터넷 서버와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 하여 IPv6로 전환

##### ▷ 기대효과

- 클라우드 컴퓨팅, 브로드밴드,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핵심 연방 정보 기술의 성공적인 배치 및 확장 가능
- 인터넷 서비스의 복잡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보안 서비스 강화
- 통합되고 잘 구성된 네트워킹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 및 향후 인터넷 기반 서비스 확장 가능

#### ◆ 참고 : GCN의 IPv6 전환을 위한 조치

- ▷ 미국 컴퓨터 전문웹진인 GCN은 2011년 말까지 IPv4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IPv6로의 전환은 느리게 진행 되고 있어 IPv6를 채택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제시

##### ① 감사(Audit)

- IPv6로의 전환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네트워크 장비가 IPv6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인지를 점검
- 최신 네트워크 장비나 데스크톱 및 서버 운영 체제들은 IPv6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의 구형 네트워크 장비 및 운영체제에서 IPv6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② 다양성 처리(Handle Diversity)

- IPv6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IPv4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IPv6와 IPv4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필요
  - 듀얼 스테킹(Dual staking) : 네트워크 장비가 IPv4 및 IPv6 두 프로토콜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변환(Translating) : 한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로 바꾸는 기술
  - 터널링(Tunneling) : 한 프로토콜 패킷을 다른 프로토콜 패킷 내부에 캡슐화 하는 기술

③ 계획 및 배치 문제 다루기(Deal with schemes and deployment)

- 정부·기업은 IPv6 주소의 획득·할당을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 존재
  - 어떤 방식으로 IPv6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IPv6를 단계별로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

④ 보안 적용(Apply security)

- IPv6의 채택은 네트워크 보안에 기회 및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
  - IPv6가 높은 보안성을 보장하지만 IPv4에서 제기되었던 보안 취약 문제에 또다시 직면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 마련 시급

마. 영국, ICT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발표 (BIS, 2010. 10. 12.)

- 영국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는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e접근성 실행계획(The eAccessibility Action Plan - Making digital content accessible by everyone)’ 발표
  - BIS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디지털 경제에 포함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e접근성 실행계획 주요 내용

- ▷ 목적 : 2012년 하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개최 전까지 e접근성을 크게 개선
- ▷ 주요 목표
  - 장애인의 요구사항에 맞춘 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기기(TV, 라디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점자프린터, 광신호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구입능력 및 이용가능성 문제를 해결
  - 장애인이 비장애인 고객과 같이 디지털 통신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Ofcom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 정책 실시
  - 장애인이 공공부문 웹사이트에 보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설계 향상
  - 온라인·TV 콘텐츠에 대한 시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
  - 디지털 경제에서 장애인이 처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 ▷ 실행주체 : 정부, 업계, 자원봉사 부문의 6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e접근성 포럼(eAccessibility Forum)'이 본 계획을 수행
- ▷ 주요 실행계획
  - (1) 규제 업무 : 표준 정비 및 공공부문 접근성 재검토
  - (2) 소비자 기술 및 디지털 기기 접근성 업무 : IT 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 보조기술에 대한 비용장벽 감소, 보조기술 훈련 확대
  - (3) 웹사이트 서비스 업무 : 온라인 서비스의 e접근성 향상
  - (4) 콘텐츠 접근성 업무 : 비 웹기반 미디어의 접근성 향상
  - (5) 인식 제고·홍보 업무 : e접근성, 오픈 표준, 온라인 안전·보안 등

바. 유로피아나, 1,400만 점 이상의 유럽 문화유산을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EU IP/10/1524, 2010. 11. 1.)

- 유럽 디지털 도서관 유로피아나(Europeana)\*는 1,400만 점 이상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 디지털화된 책, 지도, 사진, 그림, 영화 및 영상, 음악 등을 유로피아나 웹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검색·다운로드 등 이용 가능
  - 유로피아나(www.europeana.eu)는 유럽 문화기관들의 협력으로 2008년 11월 출범했으며, 현재 전 유럽의 1,500개 이상의 문화기관들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기부하고 있으며, EU가 80%의 자금 지원
- 2010년까지 총 1,000만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0년 새롭게 추가된 문화유산(불가리아 언어의 역사를 입증하는 1221년의 불가리아 양피지 필사본, 1547년에 출판된 리투아니아 최초의 책 ‘Catechismusa prasty szadei’,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Technē rētorikēs 1588년 사본,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얀 스티(Jan Steen)의 작품들, 독일 작가 괴테와 실러의 모든 작품, 덴마크 제헌절 행사에 대한 1907년 자료화면, 세계 제 1차 대전 이전 아일랜드의 글렌다 록크(Glendalough) 수도원 사진들 등) 등으로 인해 11월 현재 1,400만 점의 문화유산을 보유
- 모든 EU 회원국들은 자국의 문화유산 및 자료를 유로피아나에 기부하고 있으며, 그 중 프랑스가 가장 많이 기부하고 있고(총 항목 중 17,98%), 독일은 17.10%로 점차 증대
- 유럽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할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유럽위원회가 설립한 자문기구(Reflection Group)는 2011년 초에 문화유산 활성화 및 보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또한 2011년 중에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실험할 예정이며, 사용자들이 세계 제1차 대전을 주제로 한 자료를 유로피아나에 기부하도록 권고할 계획

### 3. 정보통신기반확보

#### 가. 영국, '네트워크 국가'를 위한 선언문 발표 (Race Online 2012, 2010. 7. 12.)

- 영국 '디지털 통합 챔피언(영국 정부는 2009년 '디지털 통합 챔피언'을 지정하여 온라인 정보 접근 보장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 사회 통합을 주도하기 위해 민관협력 추진)' 마사 레인 폭스(Martha Lane Fox)는 2012년까지 모든 영국 국민이 웹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캠페인(Manifesto for a Networked Nation) 시작

#### ◆ 주요 내용

##### ▷ 추진 배경

- 영국 국민의 1/5인 1,000만 명이 웹에 접속하지 못하여 소비, 정보 획득, 교육적인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고, 업계, 미디어, 정부는 점점 디지털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

##### ▷ 주요 대상

- 실업자 : 새로운 직업의 90% 이상이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을 요구하며 구인광고 상당수가 온라인에 게시되지만, 90만 명의 실업자는 인터넷 비이용
- 고령자 :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은 웹을 통해 멀리 사는 친구, 이웃, 가족과 연락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영국 고령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웹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310만 명의 고령자는 1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직접 만나며, 180만 명은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연락)
- 어린이 : 웹이 교육성과를 높여줄 수 있는데, 연구결과 가정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GCSE(영국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에서 두 계단 상승 가능

##### ▷ 제안사항(영국의 모든 시민과 기관에 제안하는 실행계획)

- 변화를 격려(Inspiring)
  - 정부 : 서비스 계획에서 "인터넷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원
  - 업계 : 1,000만 명의 잠재적인 새 온라인 고객에 인터넷의 긍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전략 개발
  - 자선단체 : IT 인프라의 주요 투자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금지원(funding)

지침을 재검토

- 웹 국가를 장려(Encouraging)
  - 노동연금부(DWP) : 모든 퇴직자들이 웹 기술을 보유하도록 추진
  - 업계 : 국가 장비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주도
  - 시민 : 정보취약계층을 돕는 지역 자선단체의 업무 이용
- 웹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지원(Support)
  - 공공 및 민간 기관 : 모든 근로자가 각 지역의 디지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앙·지방정부 : 2010년 말까지 모든 지역의 기관, 750개 일자리센터, 공공 도서관에서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기·접속관련 소매업자 : 고령층, 저소득층 등에 인터넷·접속 패키지 제공
  - 자선단체 : 모든 지역에 웹 접속과 교육 시설의 ICT 장비 자금 지원

나. 미국,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스마트폰과 셋탑 박스 의무화 입법 (OUT-LAW News, 2010. 10. 11.)

- 무선전화기 사업자와 네트워크 및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서비스와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21세기 통신영상접근성보장법(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통과
  - 장애인이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을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 법에 따라 FCC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가능하도록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법 통과후 3년 이내에 모바일 폰상의 브라우저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자막기 내장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지원기능 들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스마트폰은 통신수신보조기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함

## ◆ 21세기 통신영상접근성보장법의 주요 내용

## ▷ 보청기 호환성(Hearing Aid Compatibility)

- 수입전화기, 신제품 전화단말기 뿐만 아니라 IP 지원(IP-enabled)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는 보청기와 서로 장애를 미치지 않고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양립되어야 함
- 이 조항은 청각장애인들이 기술발전에 따라 진화된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기나 인터넷기반의 음성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헤드셋 등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단 컴퓨터 사용을 위한 헤드셋이나 헤드폰은 예외임

## ▷ 중계서비스(Relay Service)

-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누구와도 전화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통신법 제255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통화에만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석되어 왔으나, 개정법은 통화상대자의 제한이 없음
- 음성통신(Voice Communication)을 제공하는 모든 IP 지원(IP-enabled) 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중계서비스기금에 공헌지수(Contribution Factor)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함

## ▷ 인터넷기반 서비스 및 장비 접근성

- VoIP 제공자나 제조업자 등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장비 및 기기 등이 장애인들에게 접근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개정법은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 되지 않는 한 인터넷기반의 통신기술(기기, 서비스, 네트워크 등)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전장치 마련
-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제조업자나 서비스 제공자 들은 자신의 기기나 서비스가 통상적인 장애인용 기기나 서비스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개정법은 새로운 FCC 청원절차, 신고의무, FCC과 NTIA와의 교육 및 지원 강화 등 법의 집행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규정

##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 FCC은 장애인들에게 전화통화를 위해 필요한 광역서비스(broadband service)를 기존의 Lifeline과 Linkup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음
- FCC은 청각·시각장애인들이 전화 통화나 기타 인터넷 기반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특수 장비들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음
- ▷ 실시간 문자서비스 지원
  - 개정법은 실시간 문자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TTY를 사용하여 전화네트워크를 통해 주고 받는 것처럼 IP 환경에서 문자를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
- ▷ 자막방송(Closed Captioning)과 화면해설(Video Description)
  - 자막수신장치법(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에 따라 자막방송을 수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장비의 범위를 13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TV세트에서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비디오 프로그램을 수신하고 보여주는 모든 비디오장비로 확대하고 있으며, 화면해설을 송신하거나 전달할 수 있도록 요구
  - FCC는 (1) 디지털T화면해설서비스가 디지털 TV에도 전송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2)스크린에 나타나는 비상사태 등이 비시각적인 방법으로 전달되고; (3) 요구되는 화면해설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이 법은 청각, 시각장애인들에게 TV나 DVD 메뉴를 찾는 것부터 스마트폰으로 E-mail을 보내는 등 비장애인에겐 일상적인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이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의 참여 가능
  - 오늘날 미래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 습득이 필요한데 새로 정립된 접근성 기준은 미국 장애인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그에 기반한 경제적 혜택 또한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평등한 접근, 평등한 기회, 평등한 존중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 전자정부실현

### 가. 프랑스, e헬스 포털 오픈(epractice, 2010. 7. 1.)

- 프랑스 보건부 내 e헬스 분야 운영부문인 ASIP Santé(전자의료를 위한 국가 기술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보건의료의 조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건강정보 교환 및 공유 프로젝트를 시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는 모든 전자의료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랑스 e헬스 전용 포털 (Esante.gouv.fr) 오픈

#### ◆ Esante.gouv.fr의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프랑스 경제부가 제안한 ‘디지털 프랑스 2012’의 주요 추진 목표 중 하나인 ‘새로운 디지털 사용 및 서비스의 다양화’에 포함된 13개 추진 내용의 일부
- ▷ 추진목적 : 전자의료와 관련된 지식 발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 ▷ 사용가능 언어 : 영어, 프랑스어
- ▷ e헬스 포털 구성 : 공공정책(public policy), 업무활동(territories), 서비스, 원격진료, 개인의료기록(DMP, Dossier Médical Personnel),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윤리(ethics) 등 7개로 구성
- ▷ 기타 주요내용
  - 사용자는 모든 영역에 대한 기사 열람 및 의견 제시, 정보 다운로드 가능
  - ASIP Santé는 e헬스 포털을 통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및 연구결과, 용어해설, 출판물, 의료전문가카드(CPS, Carte de Professionnel de Santé)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나. 미 총무청, 최신 기술로 무장한 온라인 웹서비스 선진화 달성 (gsa.gov, 2010. 7. 2.)

- 미국 총무청(GSA)은 웹서비스 구축 1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높은 시민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개편한 공공 자원관리와 조달 및 대민 웹서비스를 공개

◆ 웹서비스 주요 개편 내용

- ▷ 조달청은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인 'USA.gov' 개편을 위해 약 28만 달러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을 투자
  - 주요 기관 및 서비스 관련 17개의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공
    - 연방 정부의 정보 공개 사이트인 'data.gov'와 'usaspending.gov'를 포함하여 모바일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시민 생활 편의 향상 및 서비스 참여 독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예 : 인근 대체연료 판매 주유소 검색, 공항 대기 시간, 상품 바코드 인식을 통한 리콜 제품 확인 서비스 등
  - '관련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엔진의 지능화 추진
    - 총무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Bing) 엔진을 기반으로 모든 정부 기관별 연계를 통해 유사하게 공개된 방대한 공공 정보와 10년간 축적된 총무청의 정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
    - 2009년 6월 MS가 새롭게 선보인 검색 엔진인 빙은 '서치방식'이 아닌 '의사 결정형' 검색으로 특정한 의도를 고려한 검색 결과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 강화된 네비게이션 구축으로 10,000여 개 이상의 정부 웹사이트 연계 및 각종 주제어별로 편리한 검색 툴 제공



## 〈새로운 USA.gov 웹사이트〉



## 다. 영국,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공 지출 데이터 공개 (ePractice, 2010. 7. 1.)

-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은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온라인 정보시스템(COINS : Comb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에서 2008-2009와 2009-2010 회계연도의 공공 지출 데이터를 처음으로 발표(2010. 6. 4.)
- 본 데이터는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 가장 상세한 데이터로 향후 보다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 예정
- (기대효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

## ◆ COINS의 주요 내용

## ▷ COINS 개요

- 재무성이 공공부문 전반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수 관리, 의회 세출 예산서와 공공지출 통계자료 및 범정부통합재무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WGA)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
-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5년 전의 실적치부터 3년 후의 계획치까지 최대 9년간의 데이터 보관 가능

- COINS는 회계 애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 통합 시스템이며, 각 부처별 세부 재무기록은 미 보유

▷ 데이터 공개 이유

- 정부지출 데이터의 투명성 향상 노력을 통해 정치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가능

▷ 데이터 사용자

- 개인보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주 사용자로 하여 설계
- 2010년 8월까지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보완·공개할 예정

라. 미국, 유망 기술직 역량개발모델로 고품질 원스탑 구직 서비스 제공 (nextgov.com, 2010.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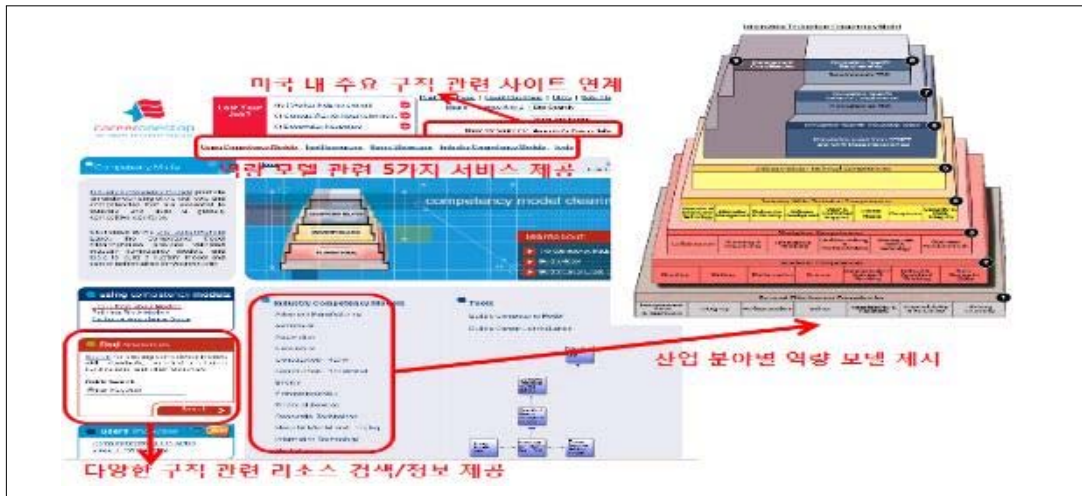
- 미국 노동부 소속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은 원스탑 커리어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산업별 역량개발모델을 통한 정보 포털 구축
  - 2010년 7월 마지막으로 개발된 공간지리정보 기술직 역량개발모델을 포함하여 총 16개 유망 기술직종에 관한 모델이 구축되었으며, 구직 활동과 커리어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가 원스탑으로 제공

◆ ETA의 역량개발모델(Industry Competency Model)

- ▷ 추진 목적 : 특정 직업군에서 각 개인이 필요한 요건과 기술 및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구직 활동과 역량 개발 및 커리어 관리에 요긴한 원스탑 정보 제공
- ▷ 역량개발모델의 구성 : 기초 역량, 관련 산업 역량, 전문 직업 역량 등 3단계별로 총 9개 공통 요인으로 구조화되며, 기술·산업 구분에 따라 관련 콘텐츠 및 정보 차별화
  - 9개 공통 요인 : 개인의 소프트파워, 학력, 근무지, 관련 산업 기술, 특정 산업별 기술 경쟁력,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영역 필수 요건, 경력 관리
    - 9개 요인별로 세부 구성 항목과 설명 및 관련 교육 동영상 등 제공

- 노동부는 최상위 단계인 전문 직업 역량에 관한 진단과 상세 정보 및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개별 툴(O\*NET)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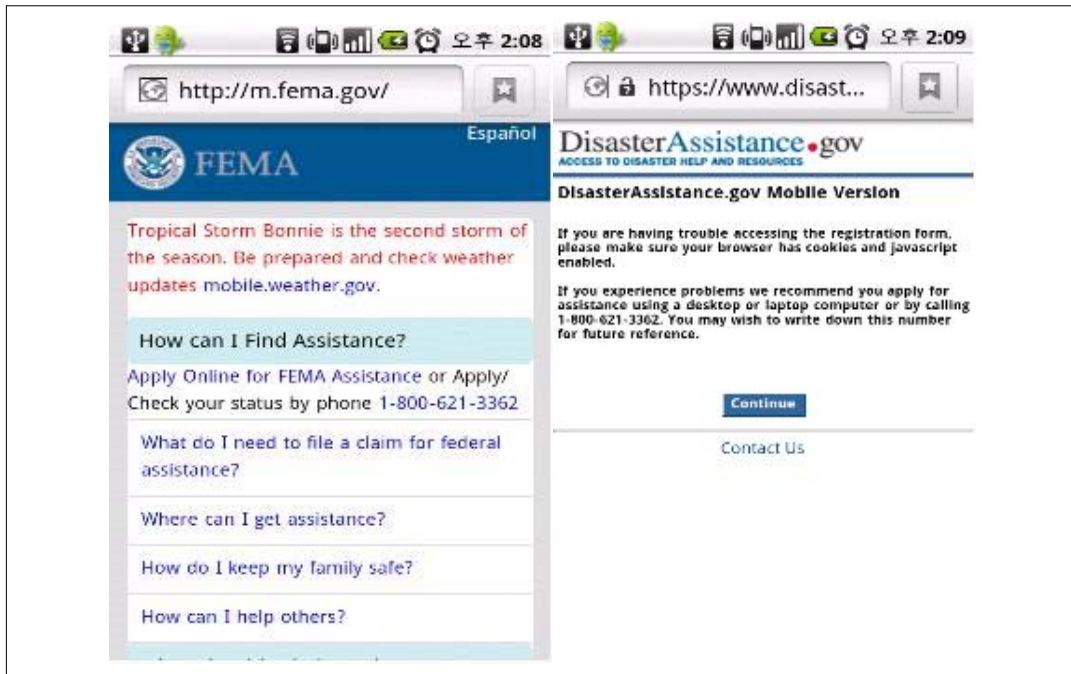
#### 〈ETA의 구직 및 커리어 관리 서비스 제공 사이트〉



#### 마. 미국, 스마트폰에서 국가 재난 원조금 신청 가능(whitehouse.gov, 2010. 7. 19.)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재난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사이트를 2010년 5월 출범한데 이어, 재난 생존자들이 국가 재난 원조금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 발표(2010.7.19)
  - 위기관리팀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시민과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확대시키는 일련의 방법
- 모바일 사이트(<http://m.fema.gov>)를 통한 3단계 등록절차
  - ① 모바일에서 <http://m.fema.gov>를 방문해 “FEMA 원조금 온라인 신청하기(Apply Online for MEMA Assistance)”를 클릭하면, 협력 사이트 [disasterassistance.gov](http://disasterassistance.gov)로 직접 연결
  - ② “등록 시작하기(Start Registration)”을 클릭
  - ③ 원조금 신청을 위해 등록 양식을 작성

〈연방 재난 원조금 신청 모바일 화면(안드로이드 폰)〉



바. EU,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WORKPAD' 프로젝트 상용화 예정 (europa.eu, 2010. 7. 22.)

- EU는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를 위한 'WORKPAD' 프로젝트를 진행
  - 본 프로젝트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이탈리아 남부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EU회원국에 상용화시킬 예정

◆ 'WORKPAD'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제6차 공동연구프로그램(6th Framework Programme, FP6 : 2002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유럽 내 전문가 그룹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유럽 ICT 연구의 집중과 통합, ICT 연구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유럽 각국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지원하여 ICT 연구에 대한 정책

통일성 등 3개 영역으로 구분)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난대응에 관한 연구 진행

- 추진기간 : 2006년 9월 1일 ~ 2009년 8월 31일
- 소요예산 : 총 비용 316만 유로(FP6에서 185만 유로 지원)
- 프로젝트 개발 및 참여국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등 4개국의 대학 및 IT 기업

▷ 추진 목적

- 재난재해 발생시 조직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 및 개발

▷ 주요 내용

- 'WORKPAD' 프로젝트는 재난재해 발생시 현장 구조대원들이 중앙 구조센터와 디지털 휴대장치를 통해 소통 가능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
  - 구조팀 리더는 지오타깅(Geo-Tagging : 사진에 GPS 위치 정보를 표시하여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기술을 통해 모든 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임무를 실시간으로 지시가능
  - 네트워크에 교환가능한 정보로는 무너진 아파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 학급인원 목록, 전화기록, 지도 등의 정보 포함
- 'WORKPAD' 프로젝트는 구조대원들에게 상황에 따라 임무와 역할을 배정하며 단계별 지시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로드 가능

사. 싱가포르, 75%까지 노동부의 오프라인 방문 횟수 감축 (futuregov.asia, 2010. 7. 22.)

-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는 효율적·효과적인 ‘전자문서제출 시스템 (iSubmit)’ 도입으로 높은 기대효과 달성

◆ ‘iSubmit’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각종 문서 제출에 관한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추진 시기 : 2010년 2월~5월
- 추진 비용 : 27,000 달러(약 3,2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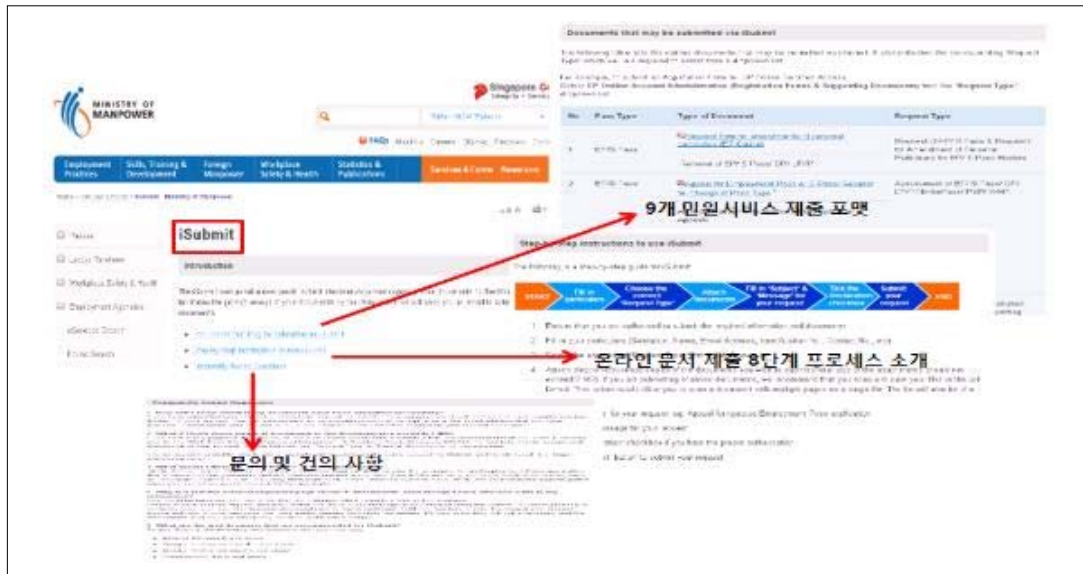
▷ 추진 내용

- 온라인 문서 제출 시스템 도입 : 방문하거나 대기할 필요 없이 온라인 프로세스를 통해 문서 작성부터 결과 처리 통보 및 피드백 확인 가능
  - 개인 계정 등록 후 주요 민원 서비스에 대한 문서 포맷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관련 문의나 상담 및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가능
- 개별 웹 포털 구축 대신, 기존 포털의 개편으로 접근성 향상에 기여
  - 40여 개 이상의 민원서비스 관련 옵션은 취업 허가(내국인, 외국인 및 기업용), 연금 및 보험, 고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 등 9개로 통합·축소하면서 시민들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 추진 성과

- 방문자 수 75% 감소 : 매일 약 400여 명의 방문자 수가 100여 명으로 감소

## 〈iSubmit 서비스 페이지 및 주요 구성 내용〉



## 아. 영국 코번트리 시의회, 소통을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 (publictechnology.net, 2010. 8. 5.)

- 영국의 코번트리 시의회(Coventry City Council)는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
  - 페이스북(Facebook)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 및 시의회 관련 뉴스를 제공

## ◆ 코번트리 시의회의 SNS 활용 주요 내용

## ▷ SNS 활용 사례

- 2008년, 페이스북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300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
  - 2009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폭설로 어느 학교가 문을 닫는지 도로사정이 안 좋은 곳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상황 파악
- 트위터(Twitter)와 Covjam이라는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요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

- ① 시 센터의 개선방법
- ②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증대시키는 방법
- ③ 코번트리 시가 어떻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
- ④ 코번트리 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인에 대한 의견
- ⑤ 시민이 이해한 국가 및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소셜 미디어의 활용 이점

- 주민들과 솔직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
-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소수(3명)의 웹 팀이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근무 시간대에 게시 의견들을 모니터링 하는 일을 담당

▷ 소셜 미디어의 활용 단점

- 통제의 결여가 위험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솔직한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으로 보완 가능

자. 체코·루마니아, 전자헬스 서비스 확대 (epractice.eu, 2010. 9. 27.)

- 체코 보헤미아(Bohemia) 지역 주민의 5명 중 1명이 전자헬스(eHealth) 기록 시스템인 'IZIP(웹 기반 전자헬스 레코드로 2003년 이래 체코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병력, 검사결과, 처방·발급된 약제목록, 엑스레이·스캔 등 이미지, 입원기록, 백신접종 이력 등의 정보 포함)'(체코어로 eZk)을 이용
  - 2010년 8월 중순에 등록 사용자 수가 200만 명에 도달했고, 2009년 말보다 전자헬스 레코드 사용자는 60% 이상 증가
  - 체코의 헬스 종사자의 1/3이 넘는 수치인 약 1만 5,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국립병원의 절반 이상이 본 시스템을 이용
  - (장점)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의 헬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 및 환자 간, 의사들 간에 유효한 헬스 데이터의 신속한 공유 가능



## 〈IZIP 웹사이트 화면〉



- 루마니아 정부는 2011년 1월에 헬스카드를 발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 계획
  - 개인의 신원 데이터(국적, 사회보장번호), 건강보험금 납부 증명서, 의료서비스 신청 건수, 진단정보, 혈액형 등의 정보를 포함
  - (추진경과) '2010-2012 병원 합리화를 위한 국가 전략'에서 2011년 건강카드의 도입을 규정
  - (장점) 기록, 보고 및 결산서에 대한 추가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 시스템의 비용 관리를 개선하고, 특히 의료 응급상황의 경우 헬스 서비스 기관이 신속히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차. 미국, 원격근무강화법 통과(2010.12.09.)

- 2009년 이상기후 현상으로 불어 닥친 눈보라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연방정부업무는 마비되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71만불로 추정
- 이에 텔레워크가 어떤 날씨나 자연재해, 응급상황에서도 연방정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

- 원격근무강화법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정보공무원들은 집 또는 원격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 원격근무강화법의 주요 내용

##### ▷ 행정기관의 원격근무 요건

- 입법 후 180일 이내에 고용인의 원격근무 자격과 승인에 관한 정책 수립
- 원격근무 제한 : 1년 동안에 5일 이상 결근한 자, 윤리적 규정을 위반한 자
- 개인의 업무성과, 기관의 경영성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시행
- 원격근무 동안 상호 합의한 업무내용을 나열, 명기하여 서면 동의 체결
  - 성과 목표 미달성 시 원격근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원격근무 불허 업무 : 보안 자료의 직접적 취급, 지정된 장소에서의 업무
-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

##### ▷ 훈련 및 감시

- 원격근무와 비 원격근무는 동등하게 취급
  - 정기적인 업무 실적 평가
  - 훈련, 보상, 발령, 승진, 강등, 직위 유지 및 직위해제
  - 업무 요건 또는 기타 경영재량권이 간여되는 활동
- 행정기관은 인사실적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직원의 업무성과의 저하여부 결정

##### ▷ 정책 및 지원

- 인사 관리처
  - 급여 및 휴가, 기관 폐쇄, 성과 관리, 공식 근무처, 채용 및 보유, 장애가 있는 고용인의 수용과 관련된 정책 제공
  - 각 기관의 원격근무 관련 목표와 계량적, 정량적 수단 및 방법 등 지원
- 관리예산처장
  - 국립표준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원격근무에 사용되는 정보의 적절성 및 정보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마련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연속성 계획에 원격근무를 적용, 편입
- ▷ 원격근무 관리 책임자
  -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 담당 최고임원의 감독을 받는 부서의 직원을 원격근무 관리 책임자로 임명
  - 역할 : 원격근무 관련 정책 개발 및 도입, 조연자, 인사처와의 연락 책임자
- ▷ 보고
  - 인사관리처장은 법안 제정 후 18개월 이내에, 각 행정기관의 원격근무 보고서를 상원 국토안보 및 행정 상임위, 하원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출
    - ※ 회계감사원장 및 예산 관리처에 전달
  - 보고서 내용
    - 해당 기관 고용인들의 원격근무 참여 수준 및 자료 수집방법
    - 원격근무 증가 및 감소 원인,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성과 평가 : 비상사태 준비 정도, 에너지 활용, 인력 채용 및 유지, 성과, 생산성, 고용인 의견 및 태도, 모범사례
- ▷ 원격근무 출장경비 시험 프로그램의 인가
  - 총무처가 승인한 시험 프로그램 관련된 모든 출장 경비 지불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기준, 시행에 따른 효용 및 예상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 제시
- ▷ 텔레워크 연구
  - 인사관리처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원격근무 유용성에 관한 연구 수행
  - 연구 내용
    - 에너지 소비, 직업 창출 및 유효성, 도시 운송 패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직장 분산 등 원격근무의 효과
    - 원격근무의 증가 관련 성과

**카. 미국, 공공정보 공개 포털(DATA.Gov) 고도화 추구 : 열린 데이터 커뮤니티 구축**  
(data.gov, 2010. 11. 18.)

- 백악관 사무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정보 공개 포털인 데이터거브(DATA.Gov)의 데이터 접근 및 공유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열린 데이터 커뮤니티 페이지를 개시
  - 자유로운 정보 검색과 편집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9개 주제 부문(보안과 개방성, 국제 정보 공유, 시맨틱 웹 기술 활용, 지리정보 데이터 공유, 표준,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열린 포럼을 구축하여 정책결정자, 기술자, 데이터 소유자, 기업과 시민의 활발한 커뮤니티 참여 유도 및 아이디어 개발 시도
  - 데이터거브는 2009년 5월 구축 이래, 2010년 11월 현재 305,692개의 데이터셋과 236개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공개·보유
- 또한, 미국 정부는 정보 공개 포털 구축의 고도화를 위해 사용자들이 지방 정부와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데이터셋을 한 지역에 집중된 매쉬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피디아(Data-Pedia)'라는 툴을 도입할 예정

**타. 미국, 긴급 전화 시스템(911)의 디지털 고도화 방안 추진 (FCC, 2010. 11. 23.)**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위기상황 시 휴대전화로 문자·사진, 동영상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전화 시스템(911)을 개편할 계획
  - (추진배경)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목격자들이 911에 문자 전송을 시도했지만 전송불가로 인해 신속한 대응 불가
  - 제나췌스키(Genachowski) FCC 위원장은 현재의 911 시스템은 통신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911 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911 시스템은 음성통화만 가능하며, 전화를 걸어 현재 있는 위치 및 상황을 안내원에게 설명하면 신고접수 가능(현재 911 전화의 70%가 휴대전화로 이용)
- 차세대 911 시스템을 위한 주요 추진방안
  - (문자 전송 가능) 모든 시민, 특히 장애인들은 문자 전송을 주요 통신 수단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전화를 거는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 등)에서 문자 및 사진 등의 전송은 피해발생 최소화 효과 가능

-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실시간 신속 대응) 모바일 동영상 및 사진은 최초 대응자들에게 현장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응급상황을 판단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가능
- (자동 경고 장치) 긴급상황 시 사람이 아닌 장치(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환경 센서, 고속도로 카메라, 보안 카메라, 알람, 개인 의료장비, 컴퓨터통신 및 자동차에 소비자용 전자제품 등을 활용)가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는 자동 경고 장치 시스템 마련

#### 파. EU, 스마트 정부를 위한 '2011~2015 전자정부 실행계획' 발표 (EU, 2010. 12. 15.)

- EU는 ICT를 활용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정부 증진을 위한 '2011~2015 전자정부 실행계획(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2011~2015 :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 innovative Government) 발표
  - (추진 배경)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는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목표 중 하나이며, 본 실행계획은 제5차 장관급 전자정부 회담(2009년에 개최되었으며, 일명 말뫼 선언(Malmö Declaration)이라고 지칭. 장관급 전자정부 회담은 격년으로 개최되며, 2011년 브리셀, 2003년 코모, 2006년 맨체스터, 2007년 리스본에서 개최)에서 결정
- (비전) 공공정보 및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해 EU를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및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 (추진 목표) 2015년까지 EU 시민의 50%, 기업의 80%까지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률 증대
- (추진 체계) 국가 전자정부 전략을 책임질 회원국 대표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f Member States) 운영
  - (추진 일정)
    - 2011년 : 고위급 전문가 그룹 구축 및 지시사항 제안
    - 2012년 : 유럽 각국은 유럽위원회에게 전자정부 실행전략을 위한 우선과제가 자국의 전자정부 전략에 반영된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2013년 : 모든 회원국의 국가 전략에 말뫼 선언의 정치적 우선 과제를 포함시키고, 전자정부 실행계획 평가 및 업데이트

- 2015년 : 회원국별로 유럽위원회 및 고위급 전문가 그룹에 맡겨 장관급 선언의 정치적 우선과제 달성 여부 보고
- (기대 효과) 유럽 각국의 협력 및 정책을 기반으로 EU 전역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공공재원 이용과 공공지출 감축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 확산

### 가. 미국 아칸소 주정부, 안전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인기 (govtech.com, 2010. 8. 4.)

- 미국 아칸소 주정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안전한 온라인 결제서비스는 도입한 지 5개월 만에 주정부의 가장 인기 있는 공공서비스로 도약

#### ◆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주요 내용

##### ▷ 추진 내용

- 아칸소 주 내의 26개 카운티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감자 신탁계정 영치금, 집행유예와 가석방 감독, 배상금 지급 및 재산세 납부 등을 포함한 결제가 필요한 주요 공공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결제
  - 아칸소 주정부의 모바일 공식 웹사이트(Arkansas.gov) 접속을 통해 서비스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 ▷ 서비스 특징

- 해당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와 기능을 기준으로 아이폰, 블랙베리, 구글 안드로이드폰, 윈도우즈 모바일 등 어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도 호환될 수 있는 서비스 체제 구현
- 각종 온라인 서비스 결제를 위한 보안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시험 운영 등을 통해 완결성 보완

##### ▷ 추진 성과

- 시민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 : 수감자 영치금 서비스는 가장 높은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로 1,300건 이상의 보안 결제가 처리

- 아칸소 주의 모바일 웹을 통해 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서비스를 대상으로 2,000건 이상의 결제 서비스 처리

▷ 향후 추진 계획

- 아칸소 주정부는 다양한 조세 및 보육 지원과 교육 관련 결제 서비스를 확대시킬 예정이며, 특히, 세금 관련 민원서비스 결제는 별도의 보안 관리와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

나. EU, 전자송장(e-invoicing) 추진 계획 발표 (eGOV monitor, 2010. 12. 2.)

- 유럽위원회(EC)는 2020년까지 전자송장(送狀, 청구서)을 유럽에 일반화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

◆ EU의 전자송장(e-invoicing) 추진 주요내용

- 목표
  - 일관된 법 환경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송장 채택을 증진시켜 대중 시장의 조속한 성장 추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재 기술적 모호성, 법적 불확실성, 운영상 제약 등의 장벽으로 EU에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송장 솔루션을 대량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대효과
  - 유럽 전역에 종이송장을 전자송장으로 교체하면 6년 동안 약 2,400억 유로를 절감 가능
  - 대금 납부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비용을 낮추고 환경 친화성을 높이는 효과
- 실행계획(Action Plan)
  - 2011년에 EC는 안전한 전자인증 시스템을 유럽 전역에서 인식하도록 전자서명 지침(Directive)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
  - EC는 '경쟁력 및 혁신 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 CIP)'의 틀에서 두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할 계획

- 구체적인 부문이 공급 체인의 각 단계를 따라 데이터와 문서를 전자화하기 위한 상호운용적 프로세스에 합의하도록 지원
- 유럽 표준과 기술사양의 주요 공급자인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는 일관된 용어를 포함한 행동규약을 개발하고 전자청구와 관련한 주체들의 역할 및 책임을 정의
- CEN은 산업간 송장(Cross-Industry Invoice) 데이터 모델에 대한 실행지침을 만들고, 유엔 산하 관광자원 국제거래표준화위원회(UN/CEFACT)와 국제표준화 기구(ISO)와 같은 국제표준기구들과 협력
- 추진일정
- EC는 회원국들을 초청해 2011년 6월까지 전자송장에 관한 여러 국가 및 이해관계자 포럼을 만들어 보완할 계획

## 6. 정보통신산업 육성

### 가. 대만,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발표(gio.gov.tw, 2010. 7. 15.)

-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는 범국가 차원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 실행 계획(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ion Plan) 발표
- (추진목표) 2013년까지 대만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부문 등) 생산액 규모를 7,800억 대만달러(약 30조원)로 확대
- (기대효과) 2013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 투자 규모 1,000억 대만달러(약 3조 7,000억 원), 총 3만 1,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본 계획은 4개의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으로 구성
- (추진전략 1) 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합
  - 통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e-readers, 게임 콘솔, 디지털 학습기기 같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결합 형태)을 개발하고 국내외 산업 수출 장려를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추진전략 2) 다양한 문화 및 창의성을 위한 투자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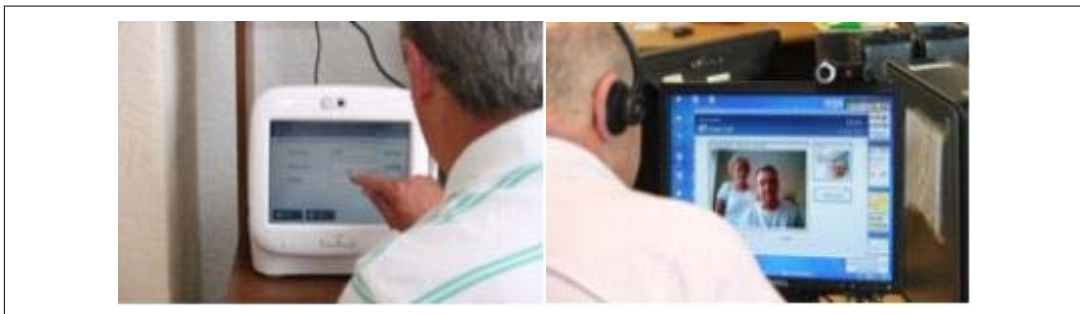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지적재산권 공유, 각 산업간 협력을 위한 민간 공동 제작 프로젝트 활성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R&D 장려
- (추진전략 3)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 교류 촉진
  -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및 개발의 활성화, 국제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등을 위해 산업간·국가간 협력 강화
- (추진전략 4) 산업 인재 육성
  -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시설 및 자원 통합, 업계 격차 해소를 위한 학술 및 연구 부문 통합 촉진

#### 나. 영국, 만성병 환자들을 위한 원격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

(centrallancashire.nhs.uk, 2010. 8. 10.)

- 영국 정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위해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기를 보급
- (기대효과) 환자들이 신체 변화에 대한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원횟수 감소 및 돌연사 방지
- 환자들이 혈압, 맥박, 체중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변화 상태를 체크하여 즉각적인 대응방안 제시

####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 영국 프레스턴(Preston)시의 40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2011년 5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
  - 성과여부에 따라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등 기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혀 랭커셔(Lancashire) 카운티 전체로 확대 서비스할 예정
- 시범 운영기간 동안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여부, 장비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 간병인의 평가의견서 등 본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

**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텔레헬스 네트워크 구축 (2010. 8. 18.)**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거주민들을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CTN(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구축
  - 환자들은 CTN을 통해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에게 원격으로 실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및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처 가능
- CTN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 및 환자들을 원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무선 및 브로드밴드 통신 기술을 의료기기에 적용
  - 또한 원격으로 심장의 리듬을 모니터링 하는 무선 센서 및 휴대용 포도당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텔레헬스 기기 지원
- CTN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이동통신회사인 AT&T,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비롯하여 약 800개의 캘리포니아 주 병·의원들을 헬스케어 및 응급서비스 네트워크로 연결
  - 현재 미 연방통신위원회,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재단 등 여러 민간 및 공공기관들이 3,000만 달러의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
  - CTN은 주정부, 농촌 헬스케어, 원격의료 및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의 지침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관리를 위탁

## 〈원격진료가 가능한 기구 및 CTN을 통한 진료 모습〉



## 라. 노르웨이, 디지털 처방 시범사업 확대 (epractice.eu, 2010. 8. 12.)

- 노르웨이의 지방자치단체 오스(Os)는 시범사업인 'MineReserpter.no (MyPrexxxxscription)'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종이처방을 중단하고 디지털 처방 시범사업을 확대
  -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환자들이 처방을 필요로 할 때, 의사는 컴퓨터를 통해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처방을 전송
  -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받기 위해서는 약사에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제시

## ◆ 디지털 처방의 주요 내용

## ▷ 추진 주체

-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Care Services)와 노동사회통합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Inclusion) 산하 보건의료국(Directorate of Health)은 공공관리 및 전자정부청(Agency for Public Management and eGovernment, DIFI)의 지원 하에서 개발 및 실험

## ▷ 사용 기술

- 안전한 로그인 솔루션 : 전자신원(eID) 사용
  - ID 포트(port), 즉 공공부문에서의 eID 사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통해 2010년 11월에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
  -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추어 민감한 헬스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장점

- 환자들은 올바른 약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안전한 웹 서비스 (Mine-Resepter.no)에 접속하여 자신의 처방에 대한 정보 습득 가능
- 환자들이 처방의 일부를 볼 수 있으며, 처방의 유효기간 확인 가능
-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페이지를 구축
- 약사가 처방을 잘못 이해하여 후속적인 의료 실수가 발생할 위험 제거
- 처방전이 분실될 가능성 제거

▷ 추후 계획

- Os 지방자치단체 다음으로 라르비크(Larvik) 시가 조만간 테스트 단계에 합류할 계획이고, 보다 많은 실험이 2010년 가을에 진행될 예정

마. 일본, 교무 분야에서의 ASP·SaaS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soumu.go.jp, 2010. 10. 15.)

- 일본 총무성은 교무 분야에서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응용소프트웨어 임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존의 ASP를 확장한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서비스로 배포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형태)의 보급 촉진을 위해 사업자가 준수·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교직원들은 교무·학적·보건 분야의 업무와, 보호자나 지역과의 정보 공유, 교육 위원회와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교무의 경감화와 효율화 수단으로 교무 분야의 ICT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
- 교무정보는 학생의 건강·성적·관찰결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이 요구

## ▷ 추진경과

- 총무성과 ASPIC(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ASP·SaaS 산업·컨소시엄')가 공동으로 설립한 「ASP·SaaS 보급 촉진 협의회」에 '교육 분야 서비스 전개 위원회'를 설치
  - 본 위원회에서 교무 분야에 있어 ASP·SaaS를 적절히 보급·추진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

## ▷ 주요 내용

- 교무 분야에 있어서의 ASP·SaaS 사업자의 역할 제시
  - 기획, 제안, 계약, 구축, 운용·보수, 서비스 제공 정지 단계에서의 역할 제시
- ASP·SaaS 사업자의 유의사항 제시
  - 주된 교육정보와 보존 기간 예시 제공
  -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 제시
- 참고자료로 한국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영국의 SIMS(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등 해외의 선진사례를 제시

## 바. 포르투갈,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어젠다 2015' 발표 (epractice.eu, 2010. 10. 25.)

- 포르투갈 경제혁신개발부(Ministry of Economy, Innovation and Development)는 기술 계획(Technological Plan)의 일환으로 '디지털 어젠다 2015(Digital Agenda 2015)'를 발표(2010.9)
- '디지털 어젠다 2015'는 차세대 네트워크(NGN) 사용을 기반으로 자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용자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여 더 나은 정부 구현
- '디지털 어젠다 2015'는 ①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구축 ②더 나은 정부를 위한 공공서비스 접근용이 및 활성화 ③전문 인력 양성 ④e-헬스 활성화 ⑤스마트한 이동성 강화 등 5개 추진 전략으로 구성
- 현재 포르투갈 정부는 5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다음의 세부 과제들을 추진 중
  - 브로드밴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자등록부를 통합하고 이용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사 수 증대

- 또한 모든 시민들의 전자건강기록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여러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토틸 패스(total pass)' 구축

#### 사. 프랑스, 프록시마 모바일(Proxima Mobile) 포털 오픈 (epractice.eu, 2010. 11. 4.)

- 프랑스 정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록시마 모바일(Proxima Mobile)' 포털을 유럽 버전으로 오픈
  - '프록시마 모바일'은 모든 시민들이 모바일 사용으로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바일 인터넷으로 프랑스의 경제활성화를 증진시키고자 추진
  - 이번 프로젝트의 예산은 20만 유로이며, 2010년 이내 인터넷 사용 대표단(Delegation for Internet Usage)이 출범할 예정
- 본 포털은 법률, 문화, 교육, 고용, 소비, 장애, 건강, 고령자, 지역생활, 관광, 지속 가능한 발전, 간병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로 구성
  - 이는 유럽 최초로 프랑스가 프랑스 버전으로 2010년 2월에 오픈한 이래 애플리케이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번에 오픈한 유럽 버전은 15개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
  - 프록시마 모바일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에서 50개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10년 말까지 100개 이상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 제공 가능한 서비스

- ▷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협업 모바일 서비스 : Jaccede Mobile
- ▷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 지리적 위치추적 서비스 : Handicap.fr
- ▷ 프랑스 휴대폰에 관한 법률 공식 포털 : Légimobile
- ▷ 상업등기에 회사 검색 서비스 : Infogreffe
- ▷ 공식 전문가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포털 : MobiPOF
- ▷ 80개 직업 부문을 텍스트와 비디오로 표시 : Métiers d'enVIE
- ▷ 학생 숙소를 검색하는 위치추적 서비스 : ADELE
- ▷ 파리 일 드 프랑스 디지털 대학교(Paris Ile-de-France Digital University) 공식 신청 사이트인 '마이 모바일 디지털 대학교(my mobile digital university)'로 뉴스 기사/포드캐스터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지리적 위치추적 가능 : UnivMobile

- ▷ 불면증에 대한 정보 및 파악 서비스 : iSommeil
- ▷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방법에 관한 정보 서비스와 재활용 구조의 지리적 위치추적 서비스 : Triez Facile
- ▷ 관광객을 위한 프랑스 외무부의 조언 및 지역 서비스 : Culture Clic, Kidnapping Alert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 가. Columbia Pictures v. Fung, No. 06-5578(C.D. Cal. 2009.12.21.)

- Fung과 그의 회사 Isohunt Web Technologies는 사용자들이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torrent) 파일을 검색·공유하는 비트토렌트(BitTorrent)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몇몇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사이트 운영 및 사이트 사용자들의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Fung과 그의 회사를 고소
- 법원은 판례를 통해 발전된 개념인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이론을 근거로 Fung과 그의 회사는 사이트 사용자들이 저지른 저작권 침해(저작권이 있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 유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 법원은 2005년 MGM v. Grokster 사건 미 대법원 결정을 인용하며,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했다고 판결

#### ◆ MGM v. Grokster<sup>2)</sup>의 주요내용

- 판결의 요지
  - 피고인 Grokster와 StreamCast는 Napster 다음 세대인 P2P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배포하였는데, 이들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마디로 Napster에 존재하던 중앙 서버가 사라졌다는 점
  - 해당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에 실리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들 P2P 네트워크는 주로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활용되었고, 급기야 2001년 여러 음반 업체들이 저작권법상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주장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2) 박성필, 김용길, “그록스터 판결에 나타난 유도침해이론의 시사점”, 중앙법학, 2006.

- 연방지방법원은 양 당사자 모두 약식판결을 신청한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분명히 표현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위해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기기를 배포하는 자는 그로 인한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
-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합법적 용도와 불법적 용도를 동시에 갖춘 제품의 배포자가 그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유도침해이론(inducement theory)을 통해 Grokster와 StremCast가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다면 사용자들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책임을 질수 있다고 판단
- 대법원은 책임 인정의 요건으로 단순한 제품의 배포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유책한 의사표현 또는 행위(purposeful, culpable expression or conduct)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합법적인 상거래나 기술 발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피고들이 사용자들의 침해를 유도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
  - 사용자들이 인기 영화를 검색/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사이트 내 분류 설정하여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독려
  -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기술지원 제공
  - Pirate Bay, 크로올링(crawling) 등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 검색 기능 구현
  - 대용량 트래픽 유발을 이용한 광고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저작권 침해 유도
- 피고들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의 절차적 방법에 의한 면책규정(safe harbors)에 의해 토렌트 사이트는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활동의 명백한 징후를 인식하고 있다면 DMCA가 제공하는 책임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
- 법원은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활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하면서, Aimster 사건을 참조해 피고들이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듯이” 외면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를 몰랐을 수 없다고 지적



**나. 라이선스키 배포는 저작권 우회기술 거래에 해당(Actuate Corp. v. IBM Corp., No. 09-5892(N.D.Cal., 2010.04.05.))**

- 미국 법원은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를 배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라 금지된 저작권 우회기술(circumvention technology)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라이선스 키를 인터넷에 올려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201조 저작권 우회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
- 피고는 I.M.S. Inquiry Management Systems, Ltd. v. Berkshire Information Systems, Inc., 및 Egilman v. Keller & Heckman, LLP 사건 등의 판결을 들어 소송 기각을 신청
- I.M.S.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보유자가 발급한 패스워드 사용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 “저작권 우회”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발급된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심지어 권한 없이 사용한다 해도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우회, 제거, 비활성화 또는 훼손” 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 그러나 321 Studios v. MGM Studios, Inc.에서 법원은 제조업체가 발급한 것과 같은 복호화 코드를 무단 사용해 DVD 암호화 기술을 우회하는 것은 암호화를 회피하고 우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
- 본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각 사건 계열 판결들의 양립가능성을 입증하려 시도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판결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법원은 패스워드 및 복호화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코드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다. Arizona State Trailer Sales, Inc. v. World Wide RV (No.FA1003001315658, 2010.05.07.)**

- 신생기업은 상호나 제품명을 고르는 과정에서 타인이 수년 전에 생각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com주소를 이미 등록한 것을 알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상표를 등록한 기업들도 신규 발급된 상표등록 인증으로 타인의 유사한 도메인명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음
- 통일도메인명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에 따른 최근 사건에서는 앞선 도메인명 등록자의 권리가 그 후 상표권 등록자에

일반적으로 우선한다고 판결

- 본 사건에서 미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 중재위원들은 상표권 소유자가 2006년 이미 상표명에 해당하는 도메인명을 등록한 다른 기업에 대해 제기한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민원을 기각

◆ 통일도메인명분쟁해결규정에 따른 원고의 입증책임

- 피고가 등록한 도메인명이 원고 소유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 도메인명과 관련하여 피고는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음
- 도메인명이 악의로 등록되어 사용 중

- 중재 위원회는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원고의 권리 등록이 피고의 도메인명 등록 시점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판단, 이 사건의 도메인명은 수년 전에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에 따라 도메인명 양도 신청은 기각

## 8. 정보보호 및 보안

### 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사이버보안 정책의 성과 발표 (whitehouse.gov, 2010. 7. 14.)

-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보안 정책 진척 상황에 대해 발표
  - (배경) 2009년 5월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 사이버 보안을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사항으로 발표했고,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Cyber Policy Review, CPR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책과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하여 마련된 보고서로 CNCI(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 국가 종합 사이버보안 계획, 2008년 1월 제정)에 토대를 둔 단기적 활동 항목들을 포함 발표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실행

## ◆ 주요 내용

- ▷ CPR(사이버공간 정책 리뷰)에 따른 성과
  - 조직정비 : 사이버보안 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을 임명, 국가보안참모(National Security Staff, NSS) 내에 사이버보안 이사회(Cybersecurity Directorate) 신설
  - 국가전략 갱신 : NSS 사이버보안 이사회는 국가 안보 대통령 명령 54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54, NSPD-54), 국토 안보 대통령 명령(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23, HSPD-23)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 추진
  - 오바마 행정부 의제에 사이버보안을 핵심적인 관리 우선 사항으로 통합 :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선은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 관리 의제의 중심적인 구성요소로, 사이버 보안을 시스템 디자인에 통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 프라이버시 및 시민 자유 담당관 지명 : NSS에 프라이버시 및 시민 자유 담당관을 지명하고, 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CNCI에 대한 설명 발표
  - 국민 인식 및 교육 캠페인을 국가적으로 진행 : 2010년 3월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 계획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 NICE)을 발표, 전국적인 국민 인식 캠페인, 정규 사이버보안 교육, 연방 인력 개발, 국가 인력 교육훈련 포함
  - 국제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미국 위치 정립, 국제 파트너십 강화 : 미국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UN과 같은 국제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 담당
  -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계획 마련 : 국가 사이버사건 대응 계획(National Cyber Incident Response Plan, NCIRP) 초안 작업 완료 예정, 9월에 시행 예정
  - 연구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 지속적인 개선 : 다양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착수, 민간 및 학술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연구 개발을 조정·강화
  - 국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기반을 둔 신원 관리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rusted Identities in Cyberspace, NSTIC) 초안 발표 : 본 전략에서는 신뢰받는 디지털 ID의 사용을 통해 사이버보안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비전을 개괄적으로 설명, 중요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포함
- ▷ CNCI(국가 종합 사이버보안 계획)에 따른 성과

- 연방 민간 네트워크 보호 :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접속 포인트의 수를 줄였으며, 이러한 포인트에 침입 탐지 기술을 배치
- 사이버보안 운영 센터 연결 : DHS는 국가 사이버보안 및 커뮤니케이션 통합 센터(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NCCIC)를 설립, 기존의 사이버 및 커뮤니케이션 사건 대응 메커니즘의 작동을 운영 센터로 통합
- 사이버 첩보 계획 실행 예정 : 국가첩보집행관실(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은 새로운 사이버 첩보 계획의 이행을 조정할 계획
- 기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
- 글로벌 공급망 위험 관리 노력 : 국방부(DOD) 포착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 정부 및 민간 공급망 위험 관리 우수사례를 표준화하기 위해 업계 및 정부 전문가들과 협

▷ 추가적인 진척사항

- 미국 사이버 사령부(U.S. Cyber Command) 신설로 군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사이버 공간의 운영을 통합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통합·강화
- 인터넷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선도
- 민간 부문 및 주정부들과 사이버보안에 관한 협조 강화
- 국가 보안 시스템, 행정부 전반에 걸쳐 사이버보안 컨트롤 표준화 등

나. 영국, IT 보안 기술을 위한 'Cyber Security Challenge' 시행 (eweekurope.co.uk, 2010. 7. 25.)

- 영국 정부는 IT 보안 기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이버 보안 도전과제' (Cyber Security Challenge) 시행
  - 영국 런던 IT 보안박람회(Information Security Europe 2010 : 영국 보안기술관련 Infosec社가 주최하는 IT 보안관련 박람회로 약 16개국 참가)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미국 사이버 챌린지(US Cyber Challenge : 미국 국방부가 주체하는 행사로 사이버 보안 관련 인재 1만 명을 발굴 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전역에서 개최)를 벤치마킹하여 영국 시민들을 위해 시행

## ◆ 사이버 보안 도전과제 내용

## ▷ 목적

- 경연 대회를 개최해 정부 입안자 및 전문가의 IT 보안에 대한 관심과 보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

## ▷ 3개의 경연대회 개최

- 네트워크 방어 챌린지(Network Defence Challenge)
  - 주요 해킹 등에 대한 방어기술을 중심으로 소규모(개인 및 소기업) 네트워크 10개 팀과 중소기업 네트워크 10개 팀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도전하여 우승자 선정
- 보물찾기(Treasure Hunt)
  - 도전자들이 주어진 2시간 동안 웹 사이트의 취약점을 신속하고 더 많이 찾도록 하여 사이트에 대한 보완점 모색
- 디지털 범죄 과학 챌린지(Digital Forensic Challenge)
  -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 범죄 부서인 DC3(DoD Cyber Crime Center : 2006년부터 디지털 범죄 과학 챌린지를 개최해 왔으며 2007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과학 챌린지 개최)에서 고안
  - 현재 22개 팀이 경쟁하고 있으며 20가지의 범죄 과학 분야가 포함

## ▷ IT 보안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송통신대학교(Open University) 강좌 개설

- 영국 방송통신대학교는 6~9개월간의 컴퓨터 범죄 과학 및 정보 보안 관리 등 2개의 핵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IT 보안관련 우수 인재를 양성할 예정
- 사이버 보안 챌린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기술과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IT 기술 격차를 좁혀줄 수 있는 역할 모색

## 다. 미국 NIST,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Nextgov, 2010. 9. 7.)

- 미국 NIST(국립기술표준연구소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강화를 위해 장비(Utility)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고서(NIST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전략 및 요구사항 내부 보고서 7628 : NIST)를 통해 발표

- Smart Grid Cybersecurity Strategy and Requirements' Internal Report 7628

#### ◆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목적

- 스마트 미터기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을 포함하여 스마트 그리드를 관리하고 시스템의 개별적 부분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는 것을 지원

##### ▷ 내용

-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 탐지, 대응 및 복구에 초점
-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체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할 기업 및 조직이 사이버 공격, 악성코드 침투, 대규모 정전 등을 예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9가지 보안기준을 포함
-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요건을 제안했던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을 위한 NIST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2009년 2월 통과된 ‘미국 회생과 재투자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따른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에 포함된 프로젝트)’을 보완한 내용
- ‘연방 정보시스템 및 조직을 위한 보안 통제장치 권고안(NIST Special Publication 800-53 : 연방보안관리법(FISMA)에서 정의한 표준을 충족시키는 규격을 제공하는 7개의 NIST 발간물 중 하나로 ‘연방정보처리 표준 200’, ‘연방정보시스템에 대한 최소 통제장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과 국토안보부(HSD) 및 북미전력안전위원회(NERC)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을 결합

**라. 스위스, 법원은 IP 주소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시(2010. 9. 10, OUT-LAW News)**

- 스위스 연방법원은 불법적인 음악 업로더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시
  - IP 주소는 개인정보이며, 개인이 인지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시
- Logistep's File Sharing Monitor 소프트웨어는 P2P네트워크나 저작권 위반 업로더의 IP주소 로그 파일을 발견되면 시행되고, 수집된 정보는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어 저작권자는 이 정보를 법적 근거로서 사용하게 됨
- 법원은 비록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은 인정하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개인의 중요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
- IP주소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IP주소가 EU의 정보보호지침에 정의된 것과 같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IP주소는 개인정보이긴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
-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의 정보보호지침에 구속되지 않지만, 스위스 법원은 이 사건에서 IP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정하여, 누구든 IP 주소를 사용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고 판시
- IP주소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연결을 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프랑스 법원은 2010년 프랑스 음악 저작료 기부단체가 IP 주소를 사용한 사건에서 IP주소 자체만으로는 직접 사용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마. EC,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OUT-LAW News, 2010. 9. 13.)**

- EC는 정보 서비스의 기본으로서 지도, 기후, 법률 그리고 통계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정보의 판매와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
  - 최근 EC는 '디지털 아젠다'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정보 활용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공공 부문 정보 지침의 검토를 요구

- 공공 부문 정보 지침은 공공 부문이 정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규율
- 디지털 아젠다의 부의장인 Neelie Kroes는 “공공 부분의 정보를 잘 더 많이 활용한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선택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바. 이스라엘, ‘적절한’ 정보 보호 국가에 합류(OUT-LAW News, 2010. 10. 28.)**

- 이스라엘이 유럽 연합이 승인한 정보보호법을 가진 7번째 국가가 됨
  - 이는 EU 법의 저촉되지 아니하고 기업이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그 나라로 전송할 수 있음을 의미
- 정보보호 지침은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가 유럽 경제 공동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가 된다고 여겨지는 정보보호 체계를 가진 국가로의 유출만을 허용하고 있음
- 현재 정보 전송이 허용되는 나라는 스위스, 아르헨티나, 건지섬, 맨섬, 저지섬, 캐나다
  - 미국으로도 전송 가능하며, 이 경우 미 상무부의 안전지대 개인정보 지침을 준수할 경우에만 가능

**사. 무선망으로 전송한 정보에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적용 부인(United States v. Ahrndt, 2010 WL 373994(2010))**

- 미 오레곤 주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은 최근 판결에서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무선망으로 전송한 정보에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는 지의 판결
- 사실관계
  - 원고인 John Henry Ahrndt는 아동포르노를 보관하고 전송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원고는 특정증거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해 수집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한 문제의 증거가 수집된 경위
  - 2007년 2월 21일, JH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오레곤 주 알로하 소재 자택에서 컴퓨터를 사용 중이
  - 그녀는 자신의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지만 무선망이 오작동을 일으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근 “Belkin54G” 무선망으로 연결(Belkin54G는 벨킨(Belkin)사의 무선 라우터 제품으로 무선 신호 반경이 약 400피트(약120m)에 이름)
  - JH는 Belkin54G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했고, 오디오, 동영상, 그림 파일 관리 및 재생 프로그램인 아이튠스(iTunes) 사용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공유”로 설정할 경우 같은 무선망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아이튠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사용자들의 탐색 가능
  - JH가 아이튠스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다른 사용자의 공유 라이브러리를 보게 되었는데, JH는 공유된 라이브러리를 열어 “Dad's Limewire Tunes,”라는 제목의 서브폴더를 발견, 그 폴더에는 ‘11-yr old masturbating’ 같은 제목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음
  - JH는 아동 포르노로 의심되는 25개 내지 30개의 파일을 발견했지만 어느 것도 열어보지는 않은채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서(Washington County Sheriff's Office) 담당경관인 McCullough에게 신고
  - McCullough경관 Dad's Limewire Tunes를 열어보았고, “5yoa” 등 연령을 나타내는 약어와 “getting raped”나 “being raped” 등 표현이 들어간 파일들에 주목
  - McCullough는 JH에게 파일 중 하나를 열어보라고 했고, JH가 파일을 잠깐 열었을 때 둘은 미성년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진을 보게 되었음
- 2월 23일, 워싱턴 카운티 보안관서 Ray Marcom경관과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선임특수요원 James Cole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JH를 면담
  - JH는 인터넷 접속에 자주 문제가 있어 모르는 사이에 Belkin54G 무선망에 연결되곤 하였는데, 집 주변에서 신호가 잡히는 다른 무선망도 있었지만 다른 무선망들은 모두 패스워드 보안이 걸려있어 연결할 수 없었다고 대답
  - JH는 처음에 이사왔을 때에도 같은 무선망에 접속했었는데, 당시에는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인근에 2채밖에 없었고, 그 중 4390 SW 18Fourth Ave.를 주소로 하는 집이 수상했다고 진술
- McCullough 경관은 4390 SW 18Fourth Ave.드라이브웨이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인 Ahmndt가 살고 있음을 발견

- IP 주소를 알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Belkin54G 무선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4월 2일, Cole 요원은 라우터의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Belkin54g 무선망에 접속하고자 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Hubel판사가 영장을 발부
- 4월 7일, Cole 요원은 Belkin54G 네트워크에 접속해 네트워크 IP주소를 확인했고, 미 넷번호 등록협회 (American Registry for Internet Numbers)를 통해, IP주소가 Comcast의 소속으로 밝혀졌고, 문제의 IP주소를 사용하는 Ahmndt가 Comcast 가입자임을 확인
- 4월 17일, Cole 요원은 2번째로 무선 라우터, 컴퓨터 및 아동 포르노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는 모든 파일이나 저장 매체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고, 다음 날Ahmndt의 집을 수색해 컴퓨터 1대, 벨킨 무선 라우터 1대,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 수많은 디스크와 플래시 메모리를 압수
- Ahmndt는 Ahmndt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무선망은 유선망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McCullough가 처음에 JH의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파일에 접근한 것은 불법침입이며, 만약 그가 유선망에 접속되어 있고 McCullough 경관이 피고의 컴퓨터에 유선망을 통해 접근했다면 경관이 합리적 사생활보호 기대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발부된 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 재판의 쟁점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보안되지 않은 개인무선망에 연결된 PC에 있는 공유컨텐츠가 사생활로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
- Ahmndt는 McCullough 경관이 자신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열어본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신의 사생활 보호권리를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검색해 그의 컴퓨터 파일이 사생활로 보호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
- Ahmndt은 Katz v. United States(389 U.S. 347, 1967) 사건의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기준에 비추어 어떤 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경찰이 그 장소에 침입해 “수색”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주장
  - Katz사건에서 대법원은 (1) 집, 신발장, 책상 등의 장소은 사적 공간으로 간주되며, (2) 해당 장소가 사적 공간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사회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수용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결

- 즉 Katz 판결 기준에 비추어 그러한 장소에서 사생활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그 장소에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 아니며, 이 경우 수색영장이나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 예외 요건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임
- 그러나 법원은 통신 하드웨어와 기술마다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 수준이 다르다며 Ahmnd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예를 들어 전통적인 유선전화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통화내용이 사생활로 보호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지만, 무선 전화기 (cordless phone)의 사생활 보호 기대는 무선망도 도청이 쉽기 때문에 무선망에서 사생활 보호 기대에 비유할 수 있다고 판시
- 무선망(wireless networks)은 전파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무선 전화기와 유사하며, 우연히 타인의 무선망을 인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며, 고의로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도 다반사
- Ahmndt는 자신의 집과 인근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Belkin54G 무선 라우터를 사용했고, Belkin54G 라우터 기본 설정은 패스워드 보안이 되어있지 않지만 라우터 패스워드 설정 절차가 매뉴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패스워드 보안 설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망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아 전송 범위 내 누구라도 접속이 가능했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적으로 유선망이나 패스워드 보안설정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보다 보안되지 않은 무선망으로 전송되는 정보는 사생활로 보호될 수 있는 기대가 더 낮다”고 판결
- 또한 보안되지 않은 무선망에서 사생활 보호 기대가 더 낮다는 것만으로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Ahmndt의 사생활 보호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생활 보호권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안되지 않은 무선망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아이튠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공유 가능한 콘텐츠의 사생활 보호 기대를 사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지 또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
- 미국 법원은 일관되게 경찰관 라임와이어(Limewire) 등 파일공유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공유로 설정해놓은 파일의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은 아니라고 입장을 고수하여 왔음
- 이에 반박하기 위해, Ahmndt는 라임와이어와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 사용은 보안되지

않은 무선망 사용과 다르며, 그는 단지 인터넷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신 집안 무선망에 연결했을 뿐이며,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 판사는 Ahmndt의 주장이 특정 주요 사실을 무시하고 대한 상세 기술 정보를 오해하고 있다며, Ahmndt가 아이튠스를 자신의 음악, 영화 및 그림 파일을 같은 무선망에 접속한 누구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설정해 사용했으며, 아이튠스의 공유 범위가 적고 파일 배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에 있어 라임와이어와 다른 것은 아니라며 Ahmndt의 증거 효력 부인 신청을 기각
- Ahmndt 사건은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무선망에서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적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첫 사건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판결에서도 분명히 제기될 것임

#### 아. Stengart v. Loving Care Agency, Inc.(2010 WL 1189458, 2010.03.30.)

- 뉴저지 주 대법원은 개인 야후 계정으로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를 사용해 피고용인이 그녀의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에 따른 보호대상이라고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으로 자신의 야후(Yahoo)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담당 변호사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직장 내 차별 소송에 관한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주는 컴퓨터의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에 복사된 원고의 이메일을 회수
  - 원고측 변호인은 회수한 이메일이 변호사-의뢰인 특권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주가 이메일을 넘겨줄 것을 요구, 고용주는 이메일을 넘겨주지만 이메일에서 수집한 정보는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법원에 injunctive relief를 신청
  - 1심 법원은 원고의 injunctive relief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항소하였고, 원고 승소
  - 고용주는 다시 뉴저지 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뉴저지 대법원은 피고용인은 자신의 이메일이 합리적인 사생활로 보호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항소 법원 결정을 확인
- 고용주는 “회사 미디어 시스템과 서비스의 모든 사항을 언제라도” 검토하고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사내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1) 회사 정책에 따른 통지의 적절성과 (2)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검토한 뒤 고용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법원은 회사 정책에 따른 통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회사 정책이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에 주안을 두지 않고 있어 개인 이메일 계정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변호사-의뢰인 간의 특권은 역사적, 현실적으로 보전되어온 오래된 특권이라고 판단
- 또한 법원은 사인간의 거래에서 기대되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는 수정헌법 제4조와는 다소 다르며, 뉴저지 주 법률에 따라 사생활을 매우 불쾌하게 물리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원고는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이메일을 사적 정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
  - 원고의 주관적 믿음을 뒷받침 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업무용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패스워드로 보호된 사적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으며, 자신의 패스워드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
  - 또한 회사 정책은 사적 이메일 계정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도 합리적
- 원고는 이메일 메시지가 불법이 아니고 고용주의 컴퓨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메일이 사생활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원고의 이메일은 변호사-의뢰인간 이메일이라는 “특징 (hallmark)”이 있으므로 상기 이메일이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한 보호대상이라고 법원은 판단

**자. Monson v. The Whitby School, Inc.(No. 09-1096, 2010 WL 3023873, 2010. 08.02)**

- Monson은 성차별 및 관련 주장을 이유로 그녀의 전 고용주 (사립학교)를 고소하였고, 학교는 (1) 컴퓨터 사기 및 남용금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과 (2) 저장통신법 (Stored Communications Act(SCA)) 위반을 이유로 Monson에 대해 반소(反訴)를 제기
- 반소(counterclaims) 내용은 Monson이 학교의 이메일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해 다른 학교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있는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삭제했다는 주장을 근거

- 학교 측은 그녀가 곧 해고될 것임을 알고 그렇게 무단으로 접속해 이메일 1,500건 이상을 삭제했으며, Monson이 해고 후 학교에 업무용 컴퓨터를 반환하기에 앞서 설치되어있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
- Monson은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삭제한 자신의 행위가 무단행위라는 학교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onson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무단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은 무단행위임에 의심이 여지가 없다고 판결

## 9. 정보통신윤리

### 가. Major v. McAllister, 2009 WL 4959941(Mo. App. 2009.12.23.)

- 원고들은 온라인에 명예훼손성 내용을 올렸다고 2명의 피고를 고소, 법원은 피고들이 고소에 응하지 않자 결석재판명령 (order of default)을 내렸고, 피고들이 명예훼손 자료를 삭제하도록 강제명령(injunction) 조치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해당 콘텐츠가 올려진 웹사이트들 (MySpace, Facebook, Complaints Board, 및 Ripoff Report)에 삭제를 요청했고, Ripoff Report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들은 해당 내용을 삭제
  - 원고들은 법원에 Ripoff Report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했고, Ripoff Report는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 민사소송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5조(강제명령 관련 연방 규정)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Ripoff Report를 구속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 법원은 Ripoff Report의 손을 들어 원고 신청을 기각
- 제65조는 강제명령은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당사자들과 “적극 협조 또는 참여한 자(other persons who are in active concert or participation with)” 역시 구속력을 미친다고 규정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65조 적용범위를 파악하고자 당사자가 아닌 자는 강제명령

대상자와 “대리인이나 피고용인처럼 적극 협력 (acting in concert)”하거나 “법적으로 동일시되는 (legally identified)” 경우 강제명령에 구속될 수 있다고 판결한 S.E.C. v. Homa(514 F.3d 674, 2008)의 판례를 참조

- 원고들은 Ripoff Report의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동 사이트를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하게 되었으며, 약관조항에는 Ripoff Report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콘텐츠도 삭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므로 Ripoff Report가 명예훼손자들에게 협력하였다고 주장
  - 법원은 Ripoff Report가 명예훼손자를 보호할 의도가 있다는 기록상 증거가 없으며, 강제명령 발동 후 Ripoff Report는 어떤식으로도 피고들과 연락하거나 피고들의 해당 내용 삭제를 요구한 법원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을 거부

나. American Booksellers Foundation for Free Expression v. Strickland(F.3d 6th Cir., 2010.04.15.)

- 미국의 오하이오주는 O.R.C. § 2907.31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정보 원격 전송에 의한” 통신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 서점들과 출판사들로 구성된 원고는 상기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하며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기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
  - 법원은 상기 법령이 개별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에만 적용되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다고 판단
  - 일반적인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사건과 달리, 상기 법령이 성인들 사이에 보호된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합헌성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합헌성 기준을 적용할지라도, 어린이를 음란물에서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합헌으로 판정되었을 것이라고 판시

다. Johnson v. Arden, F.3d, 2010 WL 3023660(8th Cir. 2010.08.04)

- 존슨부부는 특이한 애완용 고양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몇몇 다른 고양이 애호가들이 Complaintsboard.com에 자신들에 대한 불만사항을 올린 것을 알고 Complaintsboard.com의 웹호스팅 업체인 InMotion Hosting를 포함하한 고양이 애호가 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 지방 법원은 호스팅 업체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며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라 호스팅 업체는 면책된다고 판결했다. 존슨 부부는 제8 순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각 판결을 확인
- 제230조는 관련 부분에서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publisher나 화자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또한 이 조항과 일관되지 않는 어떠한 소송원인도 제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주 법률이나 지역 법률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규정
- 존슨 부부는 제230조의 면책규정은 호스팅 업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 본사건에서 호스팅 업체는 피고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협력했고 공통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주리 주 법률에 따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제230조와 무관하게 호스팅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은 존슨 부부의 주장을 거부하고 제230조에 의거하여 제3자가 작성한 정보에 대해 호스팅 업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 법원은 존슨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내용을 호스팅업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해당 내용이 호스팅업체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스팅업체는 면책된다고 판결



## 제6절 정보화 관련 판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 1. 정책추진기반확립

### 2. 정보통신기반구축

### 3. 정보통신기반확보

### 4. 전자정부실현

가.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서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5. 전자적 의사결정 및 전자거래확산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408 결정【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위헌확인】)

-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은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라서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요양기관 대표자들과 의사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고시조항들로 인하여 의사들은 심사평가원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고,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화면에 제공되는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해야 하고, 그 의약품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으로써 자유롭게 처방·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선 요양기관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금기약품 처방 시 사전 경고를 통해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여 해당 약제의 사용자제를 독려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서도 사후에 보험청구가 삭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절한 처방을 통하여 의료재정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의사들에게 금기약품에 대한 정보만을 사전에 제공하고 사후 심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급여비용 삭감 등의 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는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억제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에 제공하여 경고함으로써 이러한 처방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의 처방을 실시간으로 알게 하고 이에 어긋나는 처방을 하는 경우 환자와 심사평가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하게 함으로써 의사들의 금기약품 처방·조제를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 기존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에서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금기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에 의하여 개선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에 그 사유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억제하고, 환자가 금기약품을

복용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적 억제수단은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달리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만한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화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의 처방·조제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처방·조제권을 제약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금기약품 처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반해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을 통하여 개선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금기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환자의 금기약품 복용을 미리 방지하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약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공익의 비중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 전산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의약품의 처방·조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고시조항들의 위임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제7호는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를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를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등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양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그런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요양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에 대하여 청구한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청구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에 규정된 ‘지원소프트웨어’는 금기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즉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즉시 경고함으로써 금기약품의 처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도 필요한 사항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6. 정보통신산업육성

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에 대하여 추가된 죄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및 형태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팝업창 자체의 출처표시 유무, 웹페이지 내에서의 팝업창의 형태 및 구성, 웹페이지의 운영목적과 내용, 팝업창의 출현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그 팝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팝업광고의 영업 활동이 타인의 광고 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甲 회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를 게재하거나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화면에 甲 회사의 광고 대신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광고가 그 둘레에 별도의 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팝업(Layer Pop-up)의 형태로 나타나고, 피고인들의 광고 자체에는 그 출처가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광고가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만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그 설치자한테만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이상 위 프로그램의 설치 당사자도 피고인들의 광고를 甲 회사가 제공한 광고와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광고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네이버 포털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만 네이버 화면이 전송받은 원래 모습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계정이용 중지조치해제등】)**

-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게임이용자들은 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운영정책이 편입된 위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이팅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위 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7. 정보사회 지식재산권확립

- 가. 직업전문학교 을의 직원인 갑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 재단법인이 을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병 법인의 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흡수됨)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0조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직업전문학교 을의 직원인 갑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 재단법인이 을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병 법인의 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병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 나.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이 공소의 주식회사에 입사할 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1의 경우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품의 소스코드 등 기업비밀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지하고 사무실 외로 반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의 주식회사가 프로그램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 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파일을 분류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던 점, 연구원들은 회사의 파일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프로그램파일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다. 피고인이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4468 【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작품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甲과 공동 번역·출판한 “칼빈주의 예정론”번역본을 甲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甲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분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합헌의견 7인, 반대의견 2인)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6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

○ 다수의견

-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의견

-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대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대표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대표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대표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법인에게 대표자와 같은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 8. 정보보호 및 보안

가.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62조 제6호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위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 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위 계정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인정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한 상태로 피해 회사의 고객전산망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

-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그리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1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이도 휴대폰 전화번호만을 입력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텔레콤의 서버에 저장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1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정보통신망침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유발하게 하는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17. 선고 2010두12156 판결)

-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협약서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협약서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돼 사업계속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7호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3 결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 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해사건에서의 범죄행위가 있는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에 대한 판단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중대, 재판관 목영준)

-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법이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므로 구법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된다.

-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인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비록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 다만, 법정의견을 전제로 나의 의견을 추가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에 대한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
  -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며, 설령 위 규정이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헌적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2(단순위헌):3(합헌)의 의견)한 사례(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 결정이유의 요지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연장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게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통신제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수사목적은 달성하는데 충분하다.
-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남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에 하여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등 기간연장허가의 청구절차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를 새롭게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완화된 절차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기간연장제도를 남용할 경우 법원은 기간연장 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 실제로 기간연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단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 이후에는 계속되는

기간연장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기간연장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방증해 준다.

-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에 개인이 감청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의 사실을 고지 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보다 오히려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해 보더라도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절차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사법적 통제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횟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심히 크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수사목적은 일정한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오히려 그러한 범죄혐의가 불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 수사목적에 비해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통신제한조치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가 상실하게 되어 수사목적상 필요한 정당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허가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1. 12. 31.까지는 새 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 통신감청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색하여 전기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제5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통신감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를 지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였고, 통신감청이 종료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통신감청의 대상자가 통신감청의 허가사실이나 감청사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감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나 총기간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감청대상자는 자신의 전기통신내용이 감청되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감청당하고, 통신감청이 끝나기 전에는 통신감청의 허가나 통신감청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감청제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색을 요구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음모나 조직화된 집단범죄의 음모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미래에 발생될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통신자료의 특성상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제도에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둔다면 위와 같은 수사목적의 달성하기가 어렵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에 동일한 범죄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수사목적의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위와 같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 감청에 의한 수사목적의 달성가능성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제도의 취지가 다른 동일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함으로써 수사목적의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대상 범죄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것으로 상당히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죄의 죄질·성격·중요도를 고려함 없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횡수나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서 감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대상범죄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원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수의견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은 통상 허가청구의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무를 고려할 때 기간연장허가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i)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경우 범죄혐의를 수증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응 피의자가 특정한 범죄를 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소명자료만으로도 충분하므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에 관한 기준이 구속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ii) 통신제한조치와는 달리 압수·수색은 전달중인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대상물이나 장소를 1회적으로 압수 및 수색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유효기간 외에 별도로 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청구의 기각률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의 기각률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iii)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의 기각률보다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청구의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춘 대상범죄의 특성상 그 수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법원이 실무상 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그러한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법원이 실무상 이러한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그 혐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서 추구되는 범죄 수사목적보다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통신비밀의 보호법익이 명백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 이 사건 정보공개법 조항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공개”의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또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며,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충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9. 정보통신윤리

가.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 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 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므로,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시청자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는 저장이나 전달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매체물이므로, 그 방송 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의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7.23.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변환이나 증폭 등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비공연성, 높은 유통성, 복제용이성 및 접근 용이성 등 영화나 음반 등과 다른 ‘비디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한 비디오물의 공개나 유통으로 인한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조,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이 비디오물과는 다른 형태의 매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은 테이프나 디스크 등의 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영상물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매체물을 ‘비디오물’, ‘음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별도로 등급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소의 투숙객들에게 제공한 일본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그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송신할 수 있게 제작된 방송내용물로서, 영화 또는 비디오물과는 저장이나 전달의 방식이 다른 별개의 매체물이므로, 그 방송프로그램이 기억·저장되어 있는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유형물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변환이나 증폭 등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그 내용을 이루는 영상이나 음성·음향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등의 장치를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므로, 방송 시청자가 관람하는 대상은 유형물에 고정된 방송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와 같이 풍속영업소인 숙박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숙박업소의 손님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법 제3조 제2호에 위반된다.

○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의 판결 이유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 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하자, 그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10헌라1 결정【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은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항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제40조, 제61조) 또는 국회의원의 의무 또는 직무수행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조항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국회의 입법작용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법률안 제출권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명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의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
    -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에

의한 국정조사요구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제출요구권(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회의 의결권(같은 법 제16조)을 비롯한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으로 인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

-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청구인은,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 역시 국회의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특정 법률안의 발의를 금지하거나 특정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한침해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가처분재판과 이 사건 간접강제재판은 청구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한다.

라.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갑 회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설치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갑 회사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을 회사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을 회사의 이익이 그로 인한 갑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므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본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마. 촛불집회참여를 유도하려고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10 판결)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촛불집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여겨질 뿐 있지도 않은 휴교시위를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의 목적도 전국 중·고등학생의 등교거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있었다기 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자발적, 자율적 의사에 기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중·고등학교 학사행정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

**바.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비스이용료 등을 부담하게 하여 그 판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입력된 신호에 대하여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 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하여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한편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및 형태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팝업창 자체의 출처표시 유무, 웹페이지 내에서의 팝업창의 형태 및 구성, 웹페이지의 운영목적과 내용, 팝업창의 출현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그 팝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팝업광고의 영업 활동이 타인의 광고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갑 회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를 게재하거나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화면에 갑 회사의 광고 대신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광고가 그 둘레에 별도의 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의 형태로 나타나고, 피고인들의 광고 자체에는 그 출처가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광고가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만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그 설치자한테만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이상 위 프로그램의 설치 당사자도 피고인들의 광고를 갑 회사가 제공한 광고와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광고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갑 회사의 네이버 포털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만 네이버 화면이 전송받은 원래 모습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다.

- 아.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丙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丙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甲 회사와 乙의 공유인 특허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丙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丙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이미 위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심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丙의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각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2008. 7. 29.자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개설한 ○○○○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한 동영상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범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재판관 7인 위헌의견, 2인 합헌의견)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위헌소원)

####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의 ‘허위의 통신’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래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나, 장시간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갑작스레 내용상 허위의 통신에 대해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는 ‘허위’ 개념의 구체적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부재한 결과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의 통신’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합헌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의 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를 거짓인 통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점,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도 통신이용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교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둘러싼 장시간의 논쟁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명백한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통상의 표현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남효순·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 방동희·오강탁, 국가 정보화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42호, 2009. 4.
- 방석호·정상조,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9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하), 박영사, 2009
- 행정자치부, 최근 정보화 법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전자정부법제연구 제1권, 2006
- 행정자치부, IT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제2권 제2호2007
- <http://www.moleg.go.kr/>
-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http://www.scourt.go.kr/>
- <http://www.ccourt.go.kr/>
- <http://www.lawtimes.co.kr/>
- <http://www.loc.gov/>
- <http://thomas.loc.gov/>
- <http://www.supremecourtus.gov/>
- <http://www.uscourts.gov/>
- <http://supct.law.cornell.edu/supct/>
- <http://www.parliament.uk/>
- <http://www.ogc.gov.uk/ogc/ogchelp.nsf/pages/redirect.html>
- <http://www.moj.go.jp>
- <http://www.courts.go.jp>
- <http://www.ip.courts.go.jp/>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http://www.kantei.go.jp/foreign/it\\_e.html](http://www.kantei.go.jp/foreign/it_e.html)

<http://www.manaboo.com/index.htm>

<http://www.legifrance.gouv.fr/>

<http://www.parlement.fr/>

<http://www.conseil-etat.fr/>

<http://www.courdecassation.fr/>

<http://www.bundesgerichtshof.de/>

<http://www.bundestag.de/>

<http://www.bmj.bund.de/>

<http://www.scc-csc.gc.ca/>

<http://www.parl.gc.ca/>

<http://www.crtc.gc.ca/eng/welcome.htm>

<http://www.wipo.int/>

<http://www.oecd.org>

[http://www.oecd.org/topic/0,2686,en\\_2649\\_37441\\_1\\_1\\_1\\_1\\_37441,00.html](http://www.oecd.org/topic/0,2686,en_2649_37441_1_1_1_1_37441,00.html)

<http://europa.eu.int/>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http://www.google.co.kr>

<http://www.westlaw.com>

<http://www.findlaw.com>



### 〈참여 연구원〉

김현곤(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단장)

박정은(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기획부장)

이규정(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기획부 연구위원)

최인선(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전략기획부 책임연구원)

박은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법전공 법학석사)

김현민(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40기)

## 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2010년 12월 인쇄

2010년 12월 발행

- 발행인 : 김 성 태
-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7  
NIA B/D  
TEL : 2131-0114
- 인 쇄 : 신생용사촌  
TEL : 02-426-4415

<비매품>

본 ‘정보화정책’자료는 국가정보화 정책 수립과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벤치마킹 자료를 적시에 제공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정보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실행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기획부 최인선 책임연구원  
(전화 : 02-2131-0732, mardigras@nia.or.kr)

